



기본 |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남기찬 외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남기찬 외

■ 연구진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흥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필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내수진작과 소비증대에서 성장의 해법을 찾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화두다. 기존의 공급주도 성장모형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요측면의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확대해 기업 생산행위를 진작시킨다는 선순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국토 및 지역정책에도 풍부한 함의를 가진다. 과거에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정책을 편성했지만, 이제는 각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소비생활을 수용하며 삶의 질과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해법을 둘러싼 최근의 고무적인 논의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첫째는 소득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과정에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심리적 메커니즘에 따라 조절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분히 장소특수적인(place-specific)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지역 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얼마나 지역경제로 순환되어 새로운 가치를 파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소비환경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관련해 지적되어야 할 두 번째 맹점은 지역소비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지표로서 소비지수의 추이는 비중 있게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단위의 소비환경을 측정하는 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마저도 구조적인 분석이 시도되기보다는 소비의 양적 규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정책적인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지역단위 소비정책을 의미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와 지역 간 소비의 유형과 구성과 방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남기찬 박사가 책임한 본 연구는 상기한 정책수요에 대응해 지역계획적 측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전반부에는 지역 소비구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실증지표를 활용해 광역시·도 단위의 소비환경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담았다. 특히 지역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실증한 결과나, 지역 소비행위의 목적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관련 정책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하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연구 후반부에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대안이 정리되었다. 제시된 정책제언에는 그간의 정책사례와 대안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균형 있게 정리되어 있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정책현장의 실무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개척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성과를 도출해낸 남기찬, 하수정, 홍사흠, 조성철 책임연구원과 조정희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외부자문진으로서 문경환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본 연구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비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소비주도 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유의성 검증, 지역차원에서의 소비구조 및 소비중심성 분석 등을 수행함
- 2 (성장경로의 유의성 검증)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소득증대, 소비활성화,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경로를 지역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 3 (지역소비구조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소비부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소비구조 분석을 수행
- 4 (소비중심성 분석) 소비자 및 소비재화의 이동 및 집중양상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에서의 소비중심성 분석을 수행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소비부문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상에서 전면적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 보다는 대외의 불안정성이 극대화 되는 경우 안정적인 보호기제로서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2 (대도시 중심의 소비권 전략) 국가단위에서의 고차소비시장 및 지역단위에서의 지역 소비시장으로 위계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심지를 집중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후지(hinterland)를 연계하는 소비권 구성전략을 활용
- 3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자원 활용 전략) 오락, 문화, 관광 부문 등 증가하는 지역소비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활용, 연계관광시스템 구축 등 관광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적으로 내수활성화를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또 다른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지역차원에서 고찰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
- 실제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소비자 및 소비재의 이동이 용이하며, 지역 간 의존 및 지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의 소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
- 이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다양한 형태 및 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다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소비에 기반한 지역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지역소비에 대한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의 소비지출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공간적 범위(scope of analysis)로 하되,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시·도 및 시·군을 유동적으로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시·도 단위의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0~2015년을 주된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활용함. 다만, 기간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2000~2008년, 2009~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

- 지역의 소비, 지역경제성장 등 본 연구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의 소비와 지역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소비, 경제성장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다지역 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KTDB 등 통계자료를 통한 탐색적 분석 및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의 인과성 검증을 위한 계량적 분석방법론 등을 활용하였음

2. 소비, 소득과 지역경제성장

□ 소비에 있어서 지역의 의미

- 실제적으로 소득, 소비,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소비는 실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역 소비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관광·문화산업 등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는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적 측면의 논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략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소비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존재

□ 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성장 전략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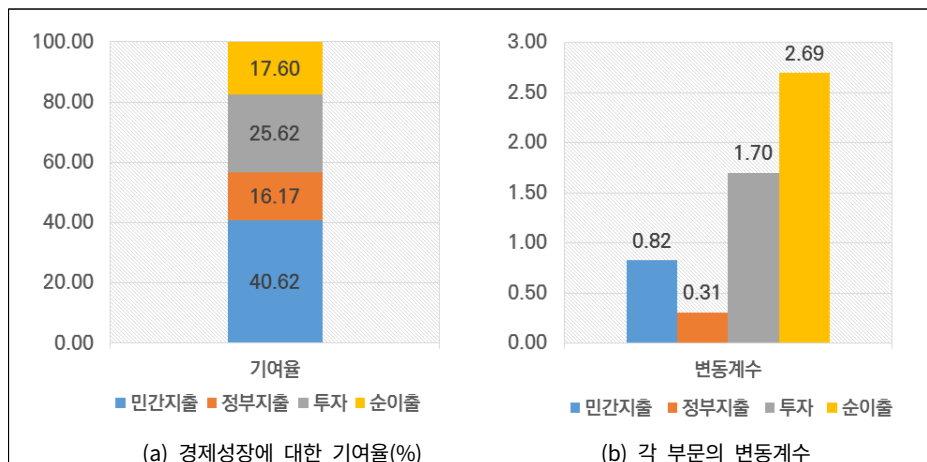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수출에 치중하는 소비를 하는 지역은 제공되는 물품에 수동적인 소비를 하는 반면, 내수에 기반한 소비를 하는 지역은 현지의 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능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하면,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는 지역은 수출기반을 확장하지 않고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소비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다양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숙련된 인적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또 다른 지역경제성장의 요소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중심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해당지역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다양한 소비재화를 공급하는 의미로서 지역생활의 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중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비시장과 생산시장 간의 연계전략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토 내생적 성장이론(territorial endogenous growth theory)과 깊은 관계가 있음

□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탐색적 검토

-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각 지출부문의 '00~'15년간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의 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 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투자(약 25%), 순이출(약 17%), 정부지출(약 16%)의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00~'15년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정부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지출의 부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순이출과 민간 투자의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불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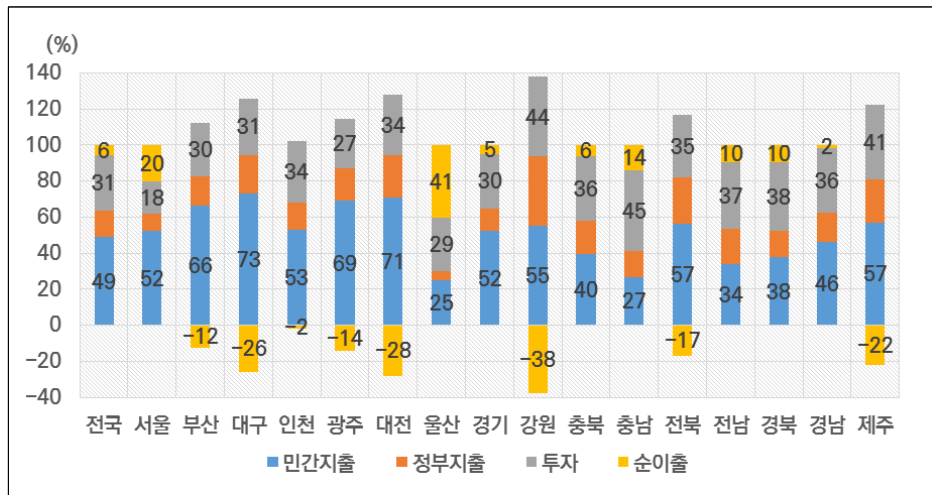
그림 2-1 |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 및 변동계수('00~'15)



자료 :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 '15년 기준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부문에서는 대구(73%), 대전(71%)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25%), 전남(34%)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중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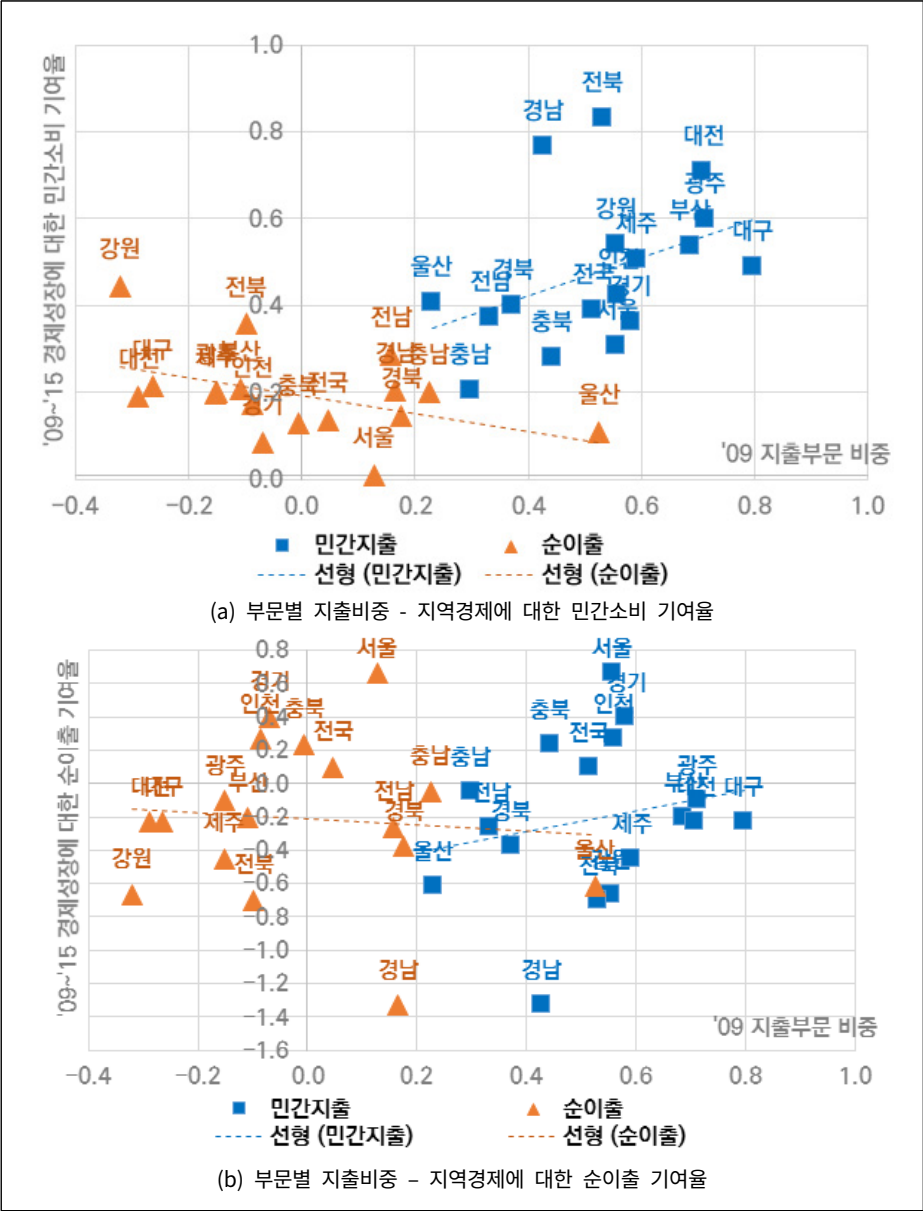
그림 2-2 |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 비중(2015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 과거,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특·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민간소비를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한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순이출을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여 왔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 '09~'15년간의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09년에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민간소비로 인한 경제성장을 보일 뿐 아니라, 순이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양상 또한 보인 반면에,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제성장은 순이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3 | '09~'15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과의 관계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 지역경제와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 각각의 지출비중과 지역경제성장의 인과성 검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0~2008년의 경우 소비와 순이출간에는 양방간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였으나, 경제수준에 대한 각 지출의 기여는 경제수준이 소비와 순이출을 유발하는 소위 성장견인형 수출증대(Growth-led Export), 성장견인형 내수증대(Growth-led Domestic Demand)의 형태가 나타났음
- 그러나 2009~2015년에 이르면서, 민간소비, 경제성장의 양방향적 관계와 민간소비가 순이출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내수주도형 성장증대(Domestic Demand led Growth)의 방향성이 나타났음을 확인

표 2-1 |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전 기간	기간 구분	
	2000~2015	2000~2008	2009~2015
D(CPSH) $\Rightarrow$ D(LNY)	5.925 * (0.051)	3.140 (0.208)	6.021 ** (0.049)
D(NXSH) $\Rightarrow$ D(LNY)	8.510 ** (0.014)	3.124 (0.209)	3.751 (0.153)
D(LNY) $\Rightarrow$ D(CPSH)	8.687 ** (0.013)	7.472 ** (0.023)	9.105 *** (0.010)
D(NXSH) $\Rightarrow$ D(CPSH)	7.550 ** (0.022)	8.462 ** (0.014)	0.271 (0.872)
D(LNY) $\Rightarrow$ D(NXSH)	10.430 *** (0.005)	9.727 *** (0.007)	3.909 (0.141)
D(CPSH) $\Rightarrow$ D(NXSH)	12.024 *** (0.002)	9.937 *** (0.007)	8.056 ** (0.018)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를 의미, ()은 p 값임.

□ 지역소득과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 지역소비와 지역경제성장과의 일련의 인과성을 확인한 이후, 지역소비를 증대시키는 전략으로서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의 가능성을 분석함
- 정책 적용의 구체화를 위해 실증분석에서는 총소득의 향상을 개별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추가적인 고용을 통한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수의 탄력성(elasticity)은 각각 고용, 소득, 이윤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기에 따른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0 ~ '08년의 경우 고용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9 ~ '15년 동안 소득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산출됨
- 반면, 기업가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경우 민간소비의 증대를 통한 소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 | 소득효과, 고용효과 및 이윤효과의 분석결과

	전 기간	기간 구분	
	2000~2015	2000~2008	2009~2015
소득효과 D(LN(W/E))	0.136 ** (0.064)	0.070 (0.126)	0.160 *** (0.060)
고용효과 D(LN(E/P))	0.655 *** (0.092)	0.962 *** (0.185)	0.405 *** (0.070)
이윤효과 D(LN(Π/P))	0.001 (0.013)	-0.001 (0.029)	0.001 (0.009)
Const.	0.010 *** (0.004)	0.013 (0.009)	0.009 *** (0.003)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를 의미, ()값은 std. Error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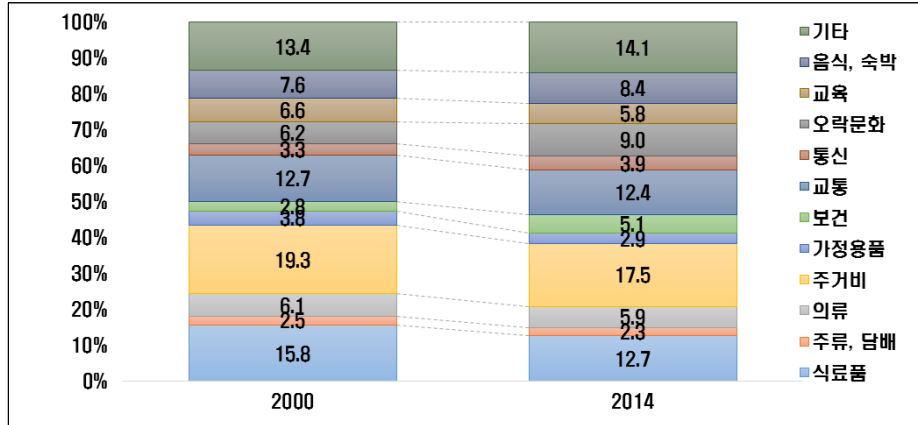
3. 지역 소비구조 분석

□ 지역별-목적별 소비비중 분석

① 전국 소비비중 변화

- '00년 이후 전국의 소비품목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높은 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주거비 및 식료품, 교통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주류 및 담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통신비 등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한 증감의 추세는 비교적 필수재로 분류되는 주거, 식료, 의류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가·복지, 오락·문화, 보건 등은 생활형태의 개선의 따라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그림 3-1 | 소비품목의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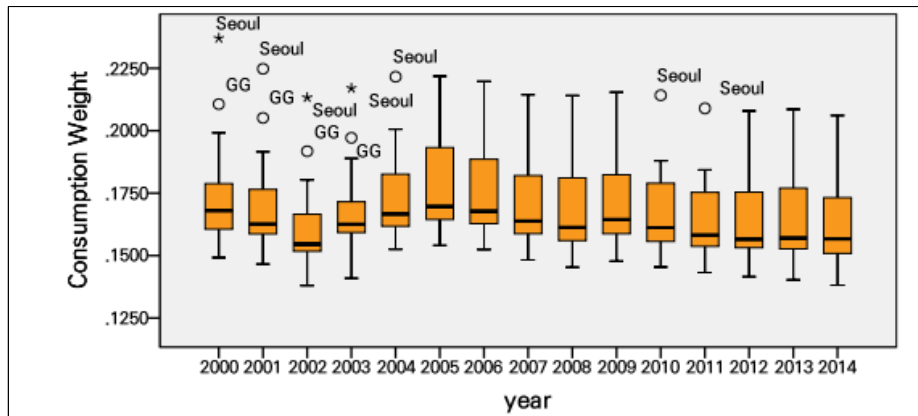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② 주거·수도·광열

- 가장 높은 소비비중을 갖는 품목인 주거비를 살펴보면, 중위값이 15~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대 이상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2 | 주거비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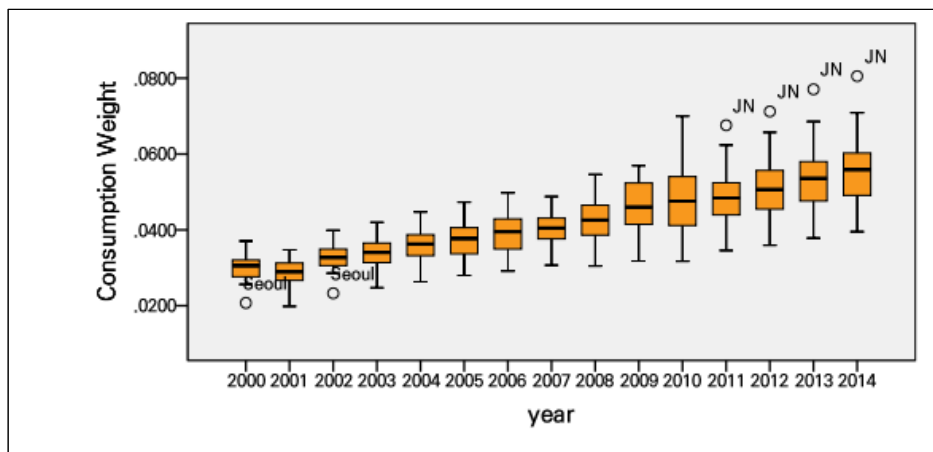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③ 의료·보건

- 의료·보건 분야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분석기간 동안의 중위값은 '00년 3% 수준에서 '14년 5%수준으로 커짐
-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의 경우 초기 과소 이상점으로 산출된 반면, 전남의 경우 '11년 이후 과대 이상점으로 산출됨

그림 3-3 | 의료보건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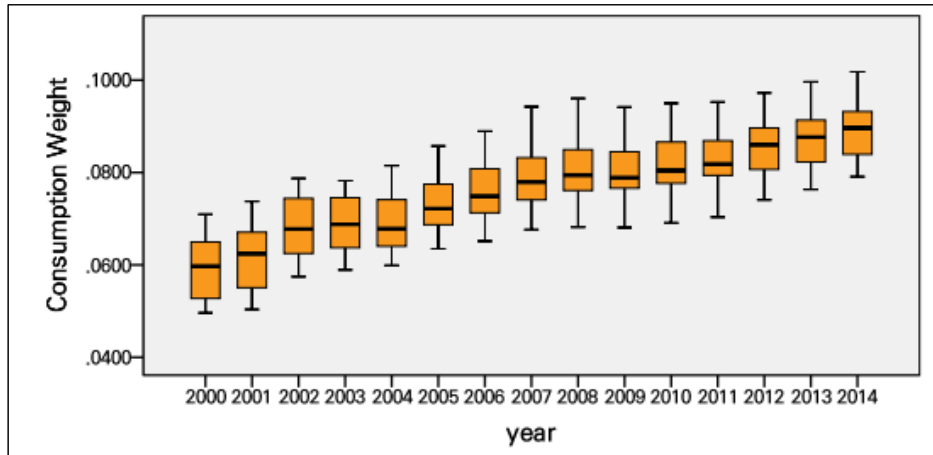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④ 오락·문화

- 오락·문화 품목의 경우 '00년 6% 수준에서 '14년 9%수준으로 분석의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및 숙박의 경우 '00년 7%수준에서 '14년 8%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이 점차 증대되는 과정에서의 추구하는 소비행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이는 추후 문화서비스 및 여행비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비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그림 3-4 | 오락문화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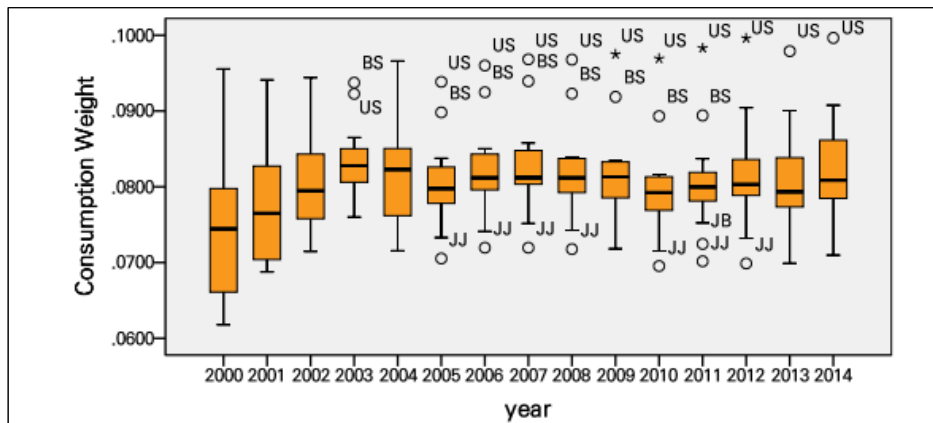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⑤ 음식 · 숙박

- 음식 및 숙박의 경우 '05년 이후 부산 및 울산이 과대 이상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의 경우 과소 이상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5 | 음식숙박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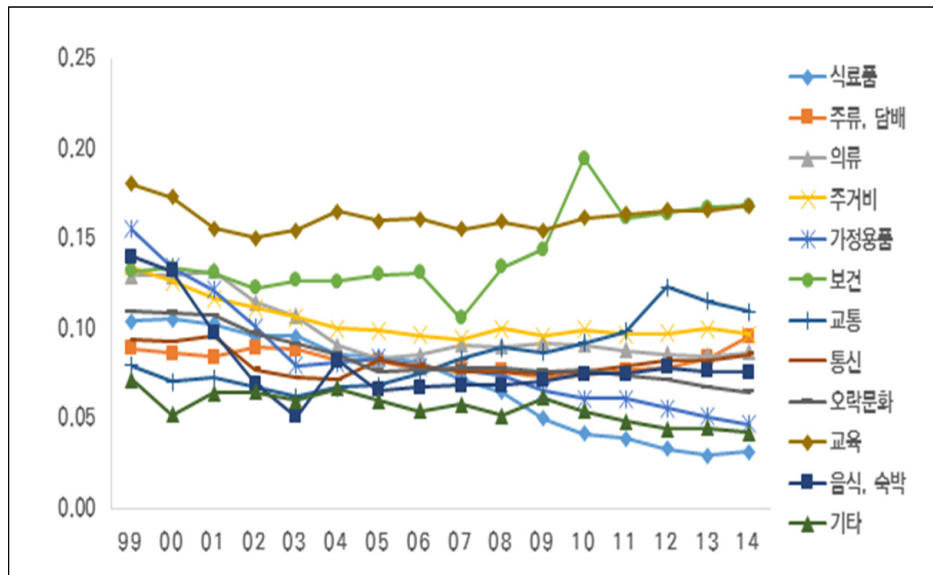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 목적별 지출비중의 지역 간 격차

- 목적별 지출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 간 변이계수를 산출함
- 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필수적인 소비로 여겨지는 식료품, 의류 등의 격차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교육, 보건 등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부문은 분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꾸준히 높은 지역 간 격차를 보였으며, 의료·보건 분야는 '07년 이후 급속도로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
- 교통비의 경우 제주 및 서울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주거비의 경우 서울 및 경기의 과대 이상치로 인해 일정수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6 | 목적별 지출비중의 지역 간 변동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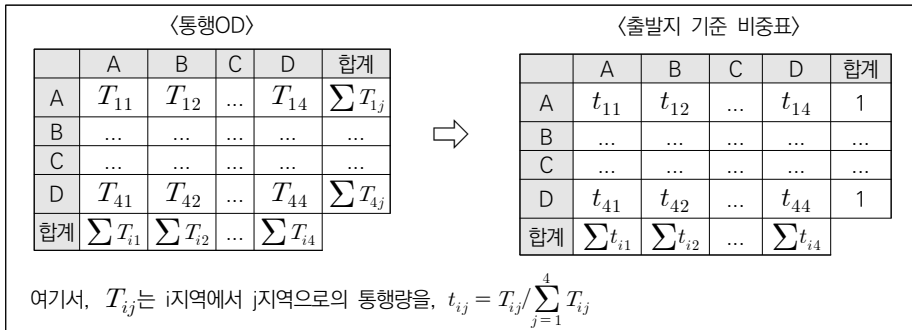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4. 소비중심성 분석

□ 소비중심성 분석방법

- 소비자의 이동을 통한 소비중심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KTDB에서 소비와 관련된 통행패턴인 여가·친교·오락 및 쇼핑통행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출지 기준 통행 비중표를 구축하였음
- 여기에서 중심지의 선별은 유출지 기준 5%이상 유입하는 시·군을 중심지로 설정하고, 더 많은 유출지와 연결된 중심지를 더 강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그림 4-1 | 비중표 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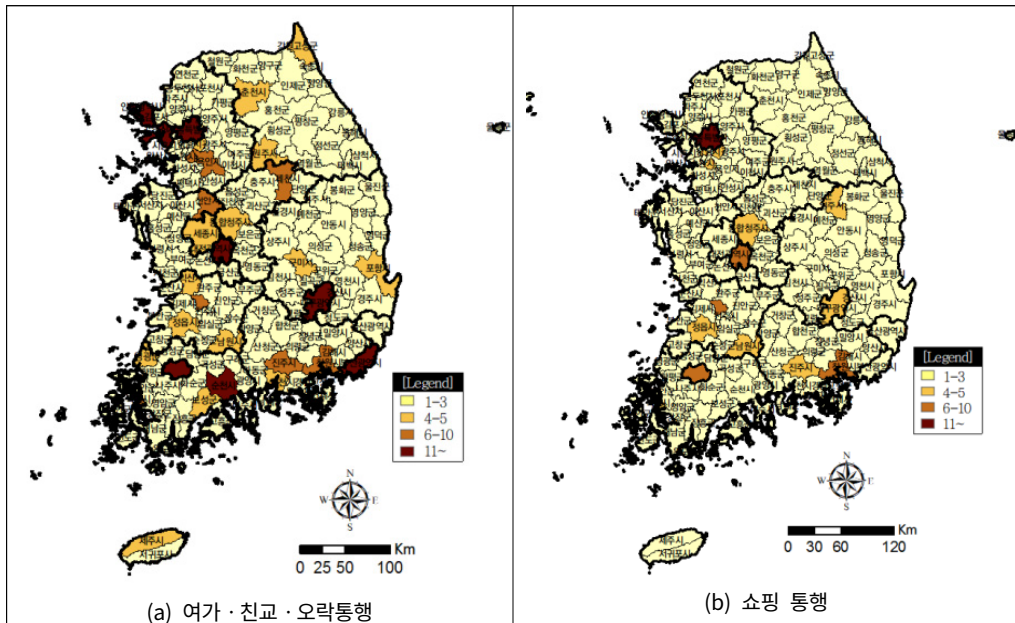
□ 소비중심성 분석결과

- 여가·친교·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나며, 광역시 이외에 비교적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을 각각 중심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중심지역과의 연결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 강원도, 충북, 충남 및 세종시를 비롯해 전남, 경남 일부 시·군까지 포함하는 광역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울산은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적인 연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쇼핑통행에 대한 분석결과는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서울을 비롯한 광주 등의 특·광역시와 산출되는 것은 유사하였으나, 광역시 이외에 비교적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지방 중소도시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출처 : 저자 직접작성

5.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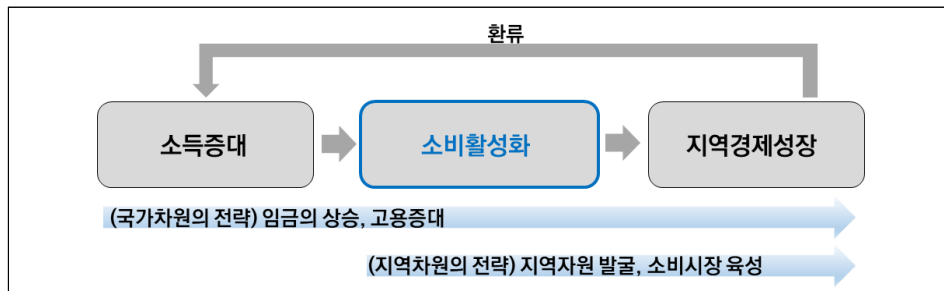
-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의 출발은 지역경제성장
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

- 국내 지역의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간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이르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소비부문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임
- 그러나 전면적인 내수중심의 지역경제성장정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소비가 가지는 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주도형 성장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대외 여건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이는 수출주도 성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적 저성장기 및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에 따르는 추진 전략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바람직

□ 지역의 역할과 전략방향

- 소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상에서의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과 결부되어 있으며,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근간에는 지역의 특징에 의해 차별화되는 소비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지역단위에서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 체계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체계를 지역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일부지역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적용되지 못하는 다수의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차원의 소득향상의 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소비성향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질개선의 근본적인 시작은 소비와 결부된 지역 소비시장의 발굴 및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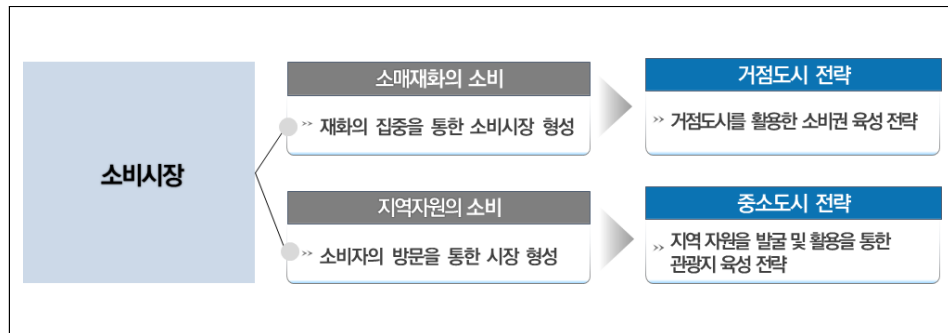
그림 5-1 | 소득주도성장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방향



□ 소비시장의 구분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특정 지역에 형성되는 소매물품 판매 위주의 소비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은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차재화의 시장형성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생산동력이 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고유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시장을 육성
- 지역 소비시장의 육성 전략을 거점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

그림 5-2 | 소비시장의 구분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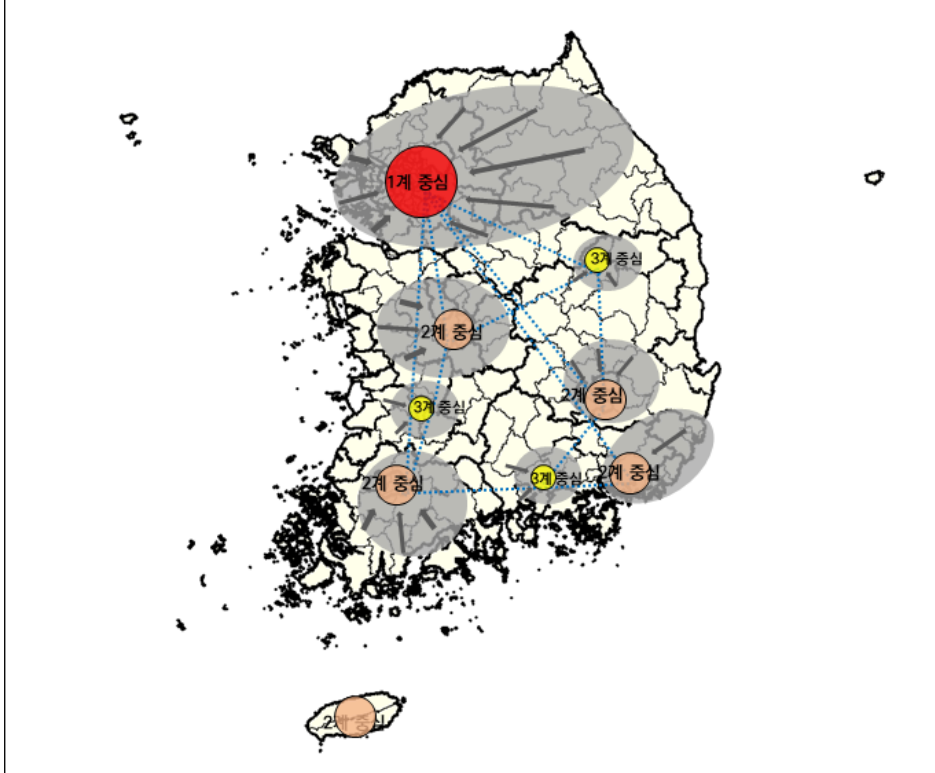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직접작성.

□ 거점도시 위주의 소비권 전략

- 서울의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차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소비중심지로 육성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에서의 고차소비시장 및 지역단위에서의 지역소비시장으로 위계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심지를 집중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배후지(hinterland)를 연계하는 소비권 구성전략을 활용
- 이러한 전략은 그간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비수도권의 패러다임과 경제권으로서의 대도시권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의 대도시권을 소비시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소비권으로서의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하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음

그림 5-3 | 위계화 및 권역화를 통한 소비권의 개념



출처 : 저자 직접작성.

□ 중소도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비활성화 전략

-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활용
- 이를 위하여, 관광정책을 공급위주 보다는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관광의 과실이 지역경제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핵심에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할 필요

- 이와 더불어,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집객하기 위하여, 지역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지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연계관광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결론 및 향후과제

□ 결론

- 본 연구는 소비에기반한 지역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지역소비에 대한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거점대도시 소비시장 육성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비활성화 전략의 세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음

□ 향후과제

- 본 연구가 다루는 지역소비, 지역경제성장이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또한 광역적, 지역적 소비거점 육성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 단위의 분석이 주는 주요한 시사점 또한 존재
- 그러나 지역의 소비가 미시적인 단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분석이 될 필요가 있음
- 소비와 관련한 주요한 항목과 이슈를 고려할 때, 주거비, 의료·보건 등의 분야는 보다 깊은 분석과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가 소비부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소비에 부담이 되는 이의 항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냄

차 례

CONTENTS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v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5.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소비, 소득과 지역경제성장

1. 소비와 국가경제성장	15
2. 소비와 지역경제성장	19
3.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탐색적 검토	22
4. 지역경제와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34
5. 지역소득과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38
6. 소결	44

제3장 지역 소비구조 분석

1. 지역 소비구조 정의 및 분석방법	49
----------------------------	----

2. 지역소비구조 분석결과	52
3. 소결	68

제4장 소비 중심지 분석

1. 소비자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73
2. 소비재의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83
3. 소결	94

제5장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99
2. 지역 소비시장 육성 전략	10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1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7

참고문헌	119
------------	-----

SUMMARY	122
---------------	-----

부 록	125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2-1> 1인당 GRDP수준 및 상대수준(2015년, 단위 : 만원)	27
<표 2-2>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35
<표 2-3> 시차검정 결과	36
<표 2-4> 공적분 검정 결과	36
<표 2-5>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37
<표 2-6> 임금효과, 고용효과 및 이윤효과의 분석결과	42
<표 2-7> 시·도별 소비에 대한 임금효과, 고용효과 및 이윤효과 분석결과	43
<표 3-1> 목적별 소비지출의 구성 및 분류	51
<표 3-2> 지역별 PIR 및 RIR (단위 : %)	56
<표 3-3> 환자 거주 지역별 1인당 진료비(상·하위 10위)	64
<표 3-4> 타 지역 진료비 유입현황(요양소재지 기준) (단위 : 천원, %, 원)	64
<표 3-5> 목적별 소비품목의 비중(%) 및 변동계수(2000, 2014년)	67
<표 4-1> 여가·친교·오락통행의 중심지 및 연계지역	78
<표 4-2> 쇼핑통행의 중심지 및 연계지역	80
<표 4-3> 지역소비, 지역생산, 지역간 재화이동량 및 자금유, 지원유 (단위 : 억원)	89
<표 4-4> 총 상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91
<표 4-5> 농림·수산·광산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92
<표 4-6> 소비재(제조업 제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92
<표 4-7> 서비스 제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93
<표 5-1> 임금주도, 소득주도 및 고용주도 성장의 특징	100
<표 5-2> 관광부문 정부 정책과제 및 후속대책	108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노동소득분배율의 개념	17
<그림 2-2> 국가경제에서의 지역비중 (단위 : 조원, %)	23
<그림 2-3>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의 기여율	23
<그림 2-4>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의 시기별 기여도	24
<그림 2-5>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 및 변동계수('00~'15)	25
<그림 2-6>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지출 부문별 기여율('00~'15, 단위 : %)	26
<그림 2-7> 지역의 1인당 GRDP수준(2015년, 단위 : 만원)	27
<그림 2-8>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 비중(2015년, 단위 : %)	28
<그림 2-9> 1인당 지역내총생산(만원)과 민간지출 및 순이출 비중(%)	29
<그림 2-10> 지역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율	30
<그림 2-11> '00~'08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과의 관계	31
<그림 2-12> '00~'08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이출 기여율과의 관계	32
<그림 2-13> '09~'15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과의 관계	33
<그림 3-1> '15년 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2015년, 만원)	52
<그림 3-2> 1인당 지역별 소비품목 금액(2015년, 만원)	53
<그림 3-3> 소비품목의 비중변화(%)	54
<그림 3-4> 주거비 품목 비중변화(%)	55
<그림 3-5> 전체 가구의 슈바베계수(단위 : %)	57
<그림 3-6> 가구 연령별 슈바베계수(단위 : %)	57
<그림 3-7> 주거비로 인한 소비위축	58
<그림 3-8> 연령 및 월소득수준별 소비위축 부문	58
<그림 3-9> 교통비품목 비중변화(%)	59
<그림 3-10> 교통비 세부품목의 지출변화(원)	59
<그림 3-11> 오락문화 품목 비중변화(%)	60
<그림 3-12> 오락·문화의 세부품목 지출변화(원)	6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13> 음식숙박 품목 비중변화(%)	61
<그림 3-14> 교육비 품목 비중변화(%)	62
<그림 3-15> 교육비 세부품목의 지출변화(원)	62
<그림 3-16> 의료보건 품목 비중변화(%)	63
<그림 3-17> 식료 품목 비중변화	65
<그림 3-18> 의류비 품목 비중변화	65
<그림 3-19> 목적별 지출비중의 지역 간 변동계수	66
<그림 4-1> 비중표 작성 과정	74
<그림 4-2> 여가·친교·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	77
<그림 4-3> 쇼핑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	79
<그림 4-4> 각 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의 순위-규모(Rank-Size) 분포	82
<그림 4-5> 이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작성 과정	84
<그림 4-6> 시·도별 소비금액(단위 : 억원)	85
<그림 4-7> 시·도별 소비·생산 및 이입-이출 순위	86
<그림 4-8> 시·도별 소비지수(단위 : %)	87
<그림 4-9> 시·도별 소비지수 자급비율 및 소비지수 지원비율 순위	88
<그림 5-1> 소득주도성장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방향	102
<그림 5-2> 소비시장의 구분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103
<그림 5-3> 전국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104
<그림 5-4> 시도별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추이(단위 : %)	105
<그림 5-5> 위계화 및 권역화를 통한 소비권의 개념	106
<그림 5-6>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109
<그림 5-7> 지속가능한 관광의 구성요소	110
<그림 5-8> 관광패스라인의 개념	111

1

CHAPTER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2. 연구의 목적 | 5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 5. 연구의 기대효과 | 12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지역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저성장기 시대의 지역경제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취함에 있어 지역의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정부 차원에서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지역적 적용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최근 국내·외 투자 및 일자리감소 등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및 기업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해 국가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자본 및 기술력 부족 및 협소한 국내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Export-led Growth)의 전략을 활용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는 상황은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높다 하겠다.

더불어 최근 미국을 위시한 서구 강대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하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 등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경제추진 방향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에 따르는 서구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국외의 주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 속에서의 해결책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내수활성화를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기에서의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주목받던 중국의 경우 13억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과거의 수입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수립된 문제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을 새 정부의 핵심 성장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자생적 능력을 위주로 한 소비중심의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이처럼 국가차원에서의 내수를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지역차원에서 이를 고찰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 있어서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수준의 논의는 수차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소비자 및 소비재의 이동이 용이하며, 지역 간 의존 및 지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의 소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다양한

형태 및 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다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비에기반한 지역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지역소비에 대한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의 질문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소비지출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고찰한다. 이는 지역의 소비가 과연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과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역차원에서도 유효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차원에서의 소비활성화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소비, 소득,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과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지역차원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분석 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소비구조의 차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의 활용 가능한 소비는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의 소비구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어떠한 소비 품목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지, 또는 어떠한 소비품목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지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가 일어나는 소비중심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필연적으로 소비는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재화나 소비자는 특정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및 재화의 집중 현상을 분석하여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소비부문의 활성화를 지역경제성장의 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다. 이 부분은 앞서의 일련의 분석을 종합하는 것으로, 소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전략에 대해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방향성 및 대안을 고찰하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의 소비지출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공간적 범위(scope of analysis)로 하되,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시·도 및 시·군을 유동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비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 자료’ 및 ‘다지역 투입산출표’ 등의 경우 시·도의 수준으로 집계되는 반면, 소비자의 이동 등 이동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KTDB 자료 등의 경우 시·군의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도 단위의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공간적 단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의 출범(1998년)시기 이후로 하되, 분석을 위한 주된 자료인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1985~2015년),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1995~2015년) 등을 고려하여, 2000~2015년의 자료를 주된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활용하였다. 다만, 기간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2000~2008년, 2009~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지역의 소비, 지역경제성장 등 본 연구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역단위의 소비와 지역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소비, 경제성장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선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구조분석, 내수주도 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모형

등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성장에서의 소비가 갖는 의미 및 역할에 대해 탐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역적 함의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한 탐색적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소비구조에 대한 차별성 분석, 다지역 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한 생산 및 소비패턴 분석, KTDB를 통한 소비중심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성 및 소득과 소비지출간의 인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분석(confirmatory analysis)을 위해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계량분석(econometric analysis) 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정성적 분석도 병행하였는데,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 대응방안 도출, 대응방안의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의 고찰을 위해 지역의 민간, 공공,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차원의 노력,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기존의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소비가 경제 성장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와, 국가의 소득과 소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먼저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한 분야에서는 국민경제의 지출측면에서의 소비, 투자, 수출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Export-Led Growth: ELG), 내수주도형 경제성장(Domestic Demand-Led Growth: DDLG)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녔다.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연구는 주로 개인자료를 이용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를 통해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을 분석한 연구와, 포스트 케인지언(post Keynesian)이 주장한 바와 같은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ational income)을 통해 소득이 소비로 흘러들어 가는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소비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양상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 소비,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비구조 등 분석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주로 지역의 소비기반 확충이 지역의 어메니티나 지역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단편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laeser et al. (2000)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비기반이 지역의 어메니티를 증대시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성장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소비도시’(consumer city)의 가능성 제시한 바 있으며, Ann Markusen & Greg Schrock(2009) 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지출과 관련한 산업분야(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가 수출에 기반 한 산업분야에 비해 지역차원에서의 경제성장과 안정성에 있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의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단위의 경제순환의 과정만을 언급하거나, 비록 지역단위의 소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체계에서의 주요 수요부문인 소비의 역할에 대한 동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비라는 측면을 지역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소비구조에 대한 분석 및 소득, 소비, 경제성장의 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있다.

표 1-1 |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Export, Domestic Demand,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Granger Causality Analysis - 연구자: Tsen.(2010) - 연구목적 : 수출, 내수와 경제 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1978, 2002년까지의 중국의 수출,내수, 경제성장간의 그랜저 인과관계검증방법을 통해 인과관계 분석	중국의 경우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함. 즉, 수출뿐 아니라 내수에 의해서도 경제성장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도 수출 및 내수를 활성화하는 결과가 도출됨
	2	- 과제명: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 연구자: Onaran & Galanis (2012) - 연구목적: G20국가 중 15개 국가에 대해 수요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분배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Bhaduri and Marglin (1990)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소득분배 및 이윤분배가 소비,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회귀분석하고 이를 통해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8개국은 임금주도 성장 체계를,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공,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7개국은 이윤 주도 수요체제로 분석됨
	3	- 과제명: Consumer City - 연구자: Glaeser et al.,(2001) - 연구목적: 소비도시와 지역성장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	도시가 갖는 어메니티 수준을 측정(특정도시에서 거주하는 거주민의 주거비를 임금으로 회귀분석한 잔차(residual)를 사용하고, 어메니티와 도시의 인구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함	지역경제의 논의를 소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으며, 높은 어메니티를 갖는 도시에서의 성장이 낮은 어메니티를 갖는 도시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4	- 과제명:Consumption-Driven Urban Development - 연구자 : Ann Markusen & Greg Schrock(2009) - 연구목적 : 소비중심의 지역성장의 방식의 안정성 및 성장가능성 탐색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미국 대도시권의 직업구성비를 분석	- 헬스케어, 예술, 스포츠선수 등 특정 업종은 대도시에서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도출함 - 이러한 업종에 의한 주민들의 소비의 효과가 수출로 인한 재화의 소비로 인한 효과보다 지역경제성장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제시
본 연구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소비활성화전략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국토공간정책 차원에서의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이론 및 문헌 조사 - 소득→소비→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지역소비구조의 다각적 통계 분석 - 현장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 소비구조분석 및 소비, 경제성장, 고용 등 소비주도형 성장의 동학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지역측면에서 적용 - 나아가 지역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차원의 접근을 시도

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가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소비활성화 정책을 지역차원의 정책과 연계하여 ‘소비주도형 지역경제 성장전략’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현 정부의 주된 성장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검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차별화된 소비구조를 탐색하고, 소비부문에 대한 다각화, 고도화, 안정화, 보편화 등의 이슈 발굴 및 국토공간정책차원에서의 소비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비중심지를 제안하는 등 소비부문에 대한 지역차원의 이슈도출 및 공간정책 차원에서의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련한 연구의 지역적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대안으로 소비, 경제성장과 관련한 소비주도형 성장이론(Domestic Demand-led Growth)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측면과 칼레츠키안(Kaleckian)모델을 적용하여 소득, 소비, 고용 등 소득주도 성장이론(Wage or Income-led Growth)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HAPTER 2

소비, 소득과 지역경제성장

- 1. 소비와 국가경제성장 | 15
- 2. 소비와 지역경제성장 | 19
- 3.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탐색적 검토 | 22
- 4. 지역경제와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 34
- 5. 지역소득과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 38
- 6. 소결 | 44

소비, 소득과 지역경제성장

본 장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을 위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내수주도형 성장전략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서의 소비의 역할 및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의 증대가 지역경제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 및 확인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의 증대를 위한 소득의 역할, 즉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지역차원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소비와 국가경제성장

1)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강대국(Newly Industry Economics)들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led Growth : ELG)을 국가의 주요한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신흥강대국들의 부상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나타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온 측면이 존재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요가 외부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적 관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타 국가에서 이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전학과-신고전학과로 이어지는 주류경제학에서의 공급중시 경제학에서는 기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지속적 투자의식 고취를 위한 세율인하 등 규제완화(de-regulation)에 주력하여 왔던 측면이 있다.

2)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2000년대에 이르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안정성의 증대, 전 세계적 저성장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보다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외부의존성이 크다는 측면이다. 수출주도형 전략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의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가 변동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에 Robert Blecker(2007)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의 수요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이론은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모든 국가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국가가 공급되는 재화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alley(2002)는 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의존성을 낮추고 국내의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Domestic Demand-Led Growth : DDLG)이론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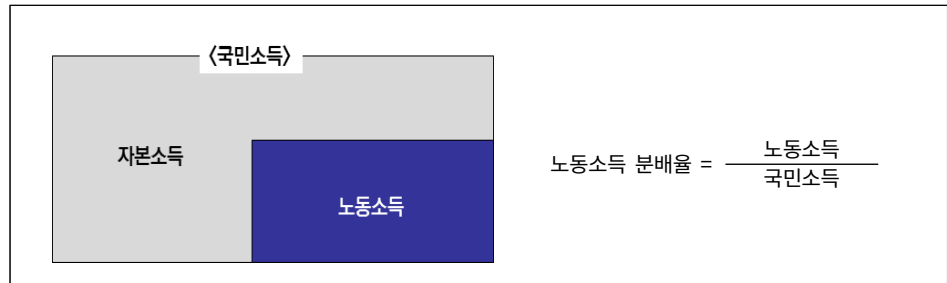
이러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Wah(2004)는 말레이시아의 1961-2000년의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ELG 가설과 DDLG가설에 대해 그랜저인과관계 검증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는 단기간에는 모든 가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DDLG 가설만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sen(2010)은 1978-2002년의 중국에

대하여 수출, 소비, 경제성장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검증을 수행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는 DDLG, ELG의 가설의 유의성도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경제성장이 수출과 소비를 견인한다는 성장견인형 소비활성화(Growth-Led Domestic Demand: GLDD)와 성장견인형 수출활성화(Growth-Led Export: GLE)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 김의섭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9 ~ 2008년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소비지출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결과도 존재한다.

3)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내수는 흔히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내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민간소비의 증대, 정부의 적극적 자금투입 및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내수활성화의 전략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촉진 및 고용, 소득 증대의 경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Post-Keynesian의 관점에서는 기업가의 이윤을 감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증대시키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를 증대시켜야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1 | 노동소득분배율의 개념



이러한 관점이 이른바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과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의 주된 내용은 실질임금의 상승이 수요(주로 민간소비)를 증대시키고, 수요 증대는 고용 및 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를 유발하여 결국 다시금 실질임금 증대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칼레츠키안’ (Kaleckian) 모델을 활용한 논의와 ‘바두리와 마글린 모델’ (Bhaduri and Maglin)을 활용한 측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칼레츠키안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노동력의 증가가 민간소비증가 및 투자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정으로 연계되며, 이윤력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함을 주장하는 반면에(Blecker, 1999), 바두리와 마글린의 모델에서는 노동력의 증대가 민간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유사하나, 이윤력 증가(노동력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이윤의 증가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총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주로 바두리와 마글린 모델을 그 기반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홍장표(2014), Onaran and Galanis(2012)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임금주도(소득주도)형 체제를 가짐을 밝히고 있다. 즉, 노동소득 분배력의 확대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진일(2013) 등의 연구에서는 이윤주도형 체계의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력의 증가가 순수출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체제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2. 소비와 지역경제성장

1) 소비주도형 지역경제성장

국가단위에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현 정부의 주요한 성장 프레임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에서의 핵심은 내수 중 소비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의 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측면이다.

실제적으로 소득, 소비,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소비는 실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역 소비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의 주체가 소비자인 사람이며, 소비행동의 양식은 소비자가 소비의 공간, 즉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관광·문화산업 등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는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적 측면의 논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의 증대를 통해 원활히 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략이 원활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의 소비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소비주도형 지역 경제성장(Consumption-Led Growth)’이 실현될 수 있다.

2) 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성장 전략의 의의

(1) 유연한 지역수요 대응

국내의 지역은 상이한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제성장 전략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획일적인 생산위주의 전략을 취했던 오류를 범하였다. 국가 경제의 성장은 지역경제성장의 총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성장의 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성장

전략이 큰 영향을 받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지역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단위에서의 소비를 활용한 전략은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수출에 치중하는 소비를 하는 지역은 제공되는 물품에 수동적인 소비를 하는 반면, 내수에 기반한 소비를 하는 지역은 현지의 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능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하면,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는 지역은 수출기반을 확장하지 않고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Ann Markusen & Greg Schrock, 2009).

(2) 인적자본이 집중하는 매력적인 장소 제공

공간으로서의 도시 및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자본재 뿐 아니라, 창조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또한 중요한 포함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이 인적자본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적외부효과(dynamic externalities)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창의적인 인적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이를 체험하고자 하는 보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거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Glaeser et al., 2001). 다양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숙련된 인적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또 다른 지역경제성장의 요소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3) 지역 내-지역 간 불평등 개선의 요소

대표적으로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전략은 지역소비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비성향의 증대를 통한 소비지출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소비시장 중 대표적인 관광산업 등 서비스 소비는 지역 내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도시에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소득의 상승을 통한 소비활성화의 효과는 더 높은 한계소비 성향을 갖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 지역소비로 환류되는 경향이 더 크게 작용 되기 때문에 소득-소비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Markusen et al. 2004).

(4)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기여

도시 및 지역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생산기능 혹은 소비기능에 대한 역할로 자연스럽게 분화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경제에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는 단일 지역 내에서 자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풍부한 생산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에 치중하는 한편, 또 다른 지역은 풍부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지역이 생산의 동력만을 취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시장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고차소비시장의 기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기반여건 등을 토대로 고차 및 저차재화 공급지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Barry and Garrison 1958, 김주일 2007). 소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급하는 소비재화의 기능적 고도화에 따라 국가적, 광역적, 지역적 소비중심지로 위계화 되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경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 소비중심지 활성화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지는 해당지역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다양한 소비재화를 공급하는 의미로서 지역생활의 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심지역의 판매처로서 역할을 통해 국가 내부적인 생산-소비의 환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 이러한 소비시장-생산시장 간의 연계전략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apello(2007)의 국토 내생적 성장이론(territorial endogenous growth theory)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탐색적 검토

1)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지역소비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역할 및 특정지역의 위상에 대한 검토 및 소비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소비의 항목이 차지하는 기여율(contribution ratio)을 산정하였다. 기여율은 전체 상승분 중에 해당 항목으로 인한 상승분을 표시하는 비율로서 이에 대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CR = (C_t - C_{t-1}) / (Y_t - Y_{t-1}) \quad \text{식(2-1)}$$

여기서, CR 은 기여율을 의미하며, C_t 는 해당연도 항목의 값, C_{t-1} 은 전연도의 항목의 값을 Y_t 는 해당연도 전체의 값, Y_{t-1} 은 전연도의 전체의 값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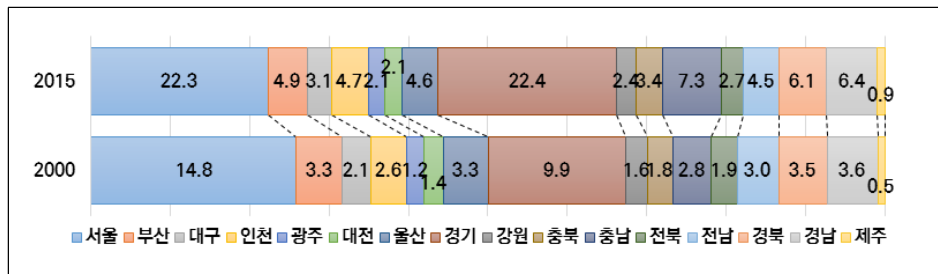
2) 국가경제에서의 지역소비의 역할

(1)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국가경제는 지역경제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지표인 GDP는 지역경제의 지표인 GRDP의 총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중 및 경제성장의 기여도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국가경제에서의 지역의 기여율이 상이한 것과 같이,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성장원천의 구조적 차이는 지역 경제의 차이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기여율을 결정하게 된다.

'15년 기준 전국 GDP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도는 경기, 서울, 충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서울은 감소, 경기·충남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였다. 각각의 지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기준 경기(22%)와 서울(22%)의 합이 전체의 40%를 초과하며, 뒤이어 충남(7%), 경남(6%), 경북(6%)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명한 측면이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수준, 경제성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큰 서울, 경기 등의 위상이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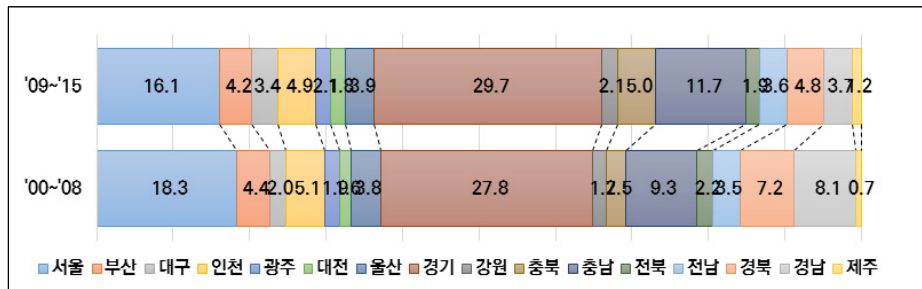
그림 2-2 | 국가경제에서의 지역비중 (단위 : 조원,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성장의 기여정도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09~15년의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지역의 기여도는 경기(30%), 서울(16%), 충남(12%), 경북(5%) 등이 국가경제성장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의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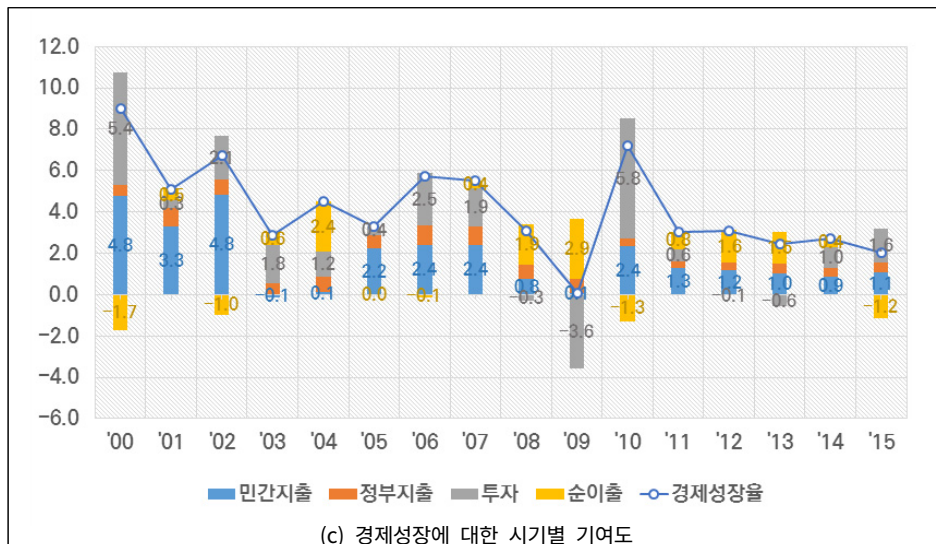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2) 국가경제와 민간소비

시기별 국가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지출부문의 기여도는 시기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소비의 경우 '00~'02년 기간 동안 약 4%의 성장 기여도를 보였으나, 이후 '05~'10년 기간 동안은 약 2%의 성장 기여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1년 이후 감소하여 1%수준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타 부문에 비해 지속적으로 양의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시기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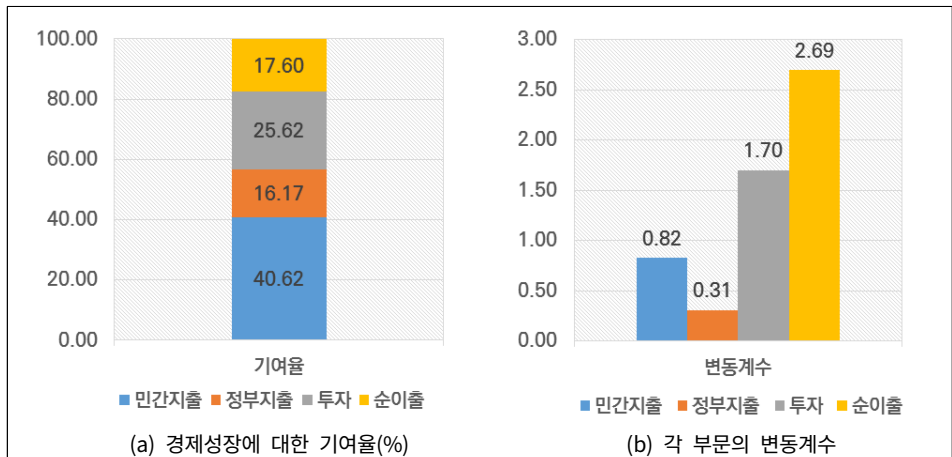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각 지출부문의 '00~'15년간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의 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 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투자(약 25%), 순이출(약 17%), 정부지출(약 16%)의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기여율을 확인하기 위해 '00~'15년간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정부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지출의 부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순이출과 민간투자의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불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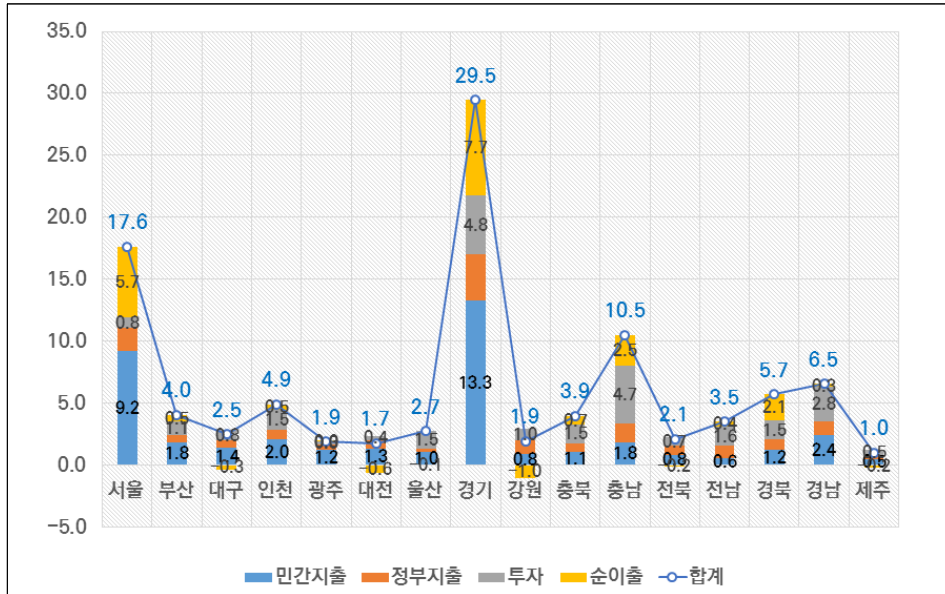
그림 2-5 |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 및 변동계수('00~'15)



자료 :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국가경제성장률에 있어서의 지역별-지출부문별 기여율은 지역의 규모와 상당부분 비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의 기여율은 경기도(29.5%) 및 서울(17.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민간소비의 기여율은 경기가 약 13%, 서울이 약 9%의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이출의 경우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경기(7.7%), 서울(5.7%)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분석기간 동안 음의 값(-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의 경우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의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 정부지출로 인한 효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의 경우 국가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역 기여도는 경기(4.8%), 충남(4.7%)의 수준으로 나타나며, 경남(2.8%), 전남(1.6%)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기여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6 | 국가경제성장애 대한 지역-지출 부문별 기여율('00~'15, 단위: %)



출처 :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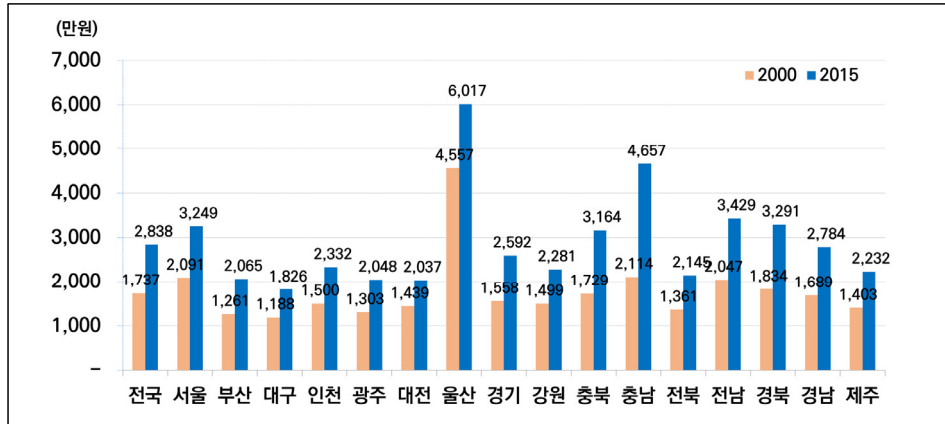
3) 지역경제에서의 소비의 역할

(1) 지역경제와 민간소비

앞서와 같이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의 역할을 논의하는 경우 GRDP의 총량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지역자체의 경제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는 관점에서는 1인당 GRDP수준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소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GRDP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의 1인당 GRDP수준은 '15년 기준 전국 2,838만원이며, 울산은 6,017만원, 충남은 4,657만원, 전남은 3,429만원, 경북은 3,291만원, 서울은 3,249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의 전국의 1인당 GRDP의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울산은 212%, 충남은 164%, 서울은 114%, 충북은 111%의 수준이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대구 64%, 대전-광주-부산 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 지역의 1인당 GRDP수준(2015년, 단위 : 만원)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표 2-1 | 1인당 GRDP수준 및 상대수준(2015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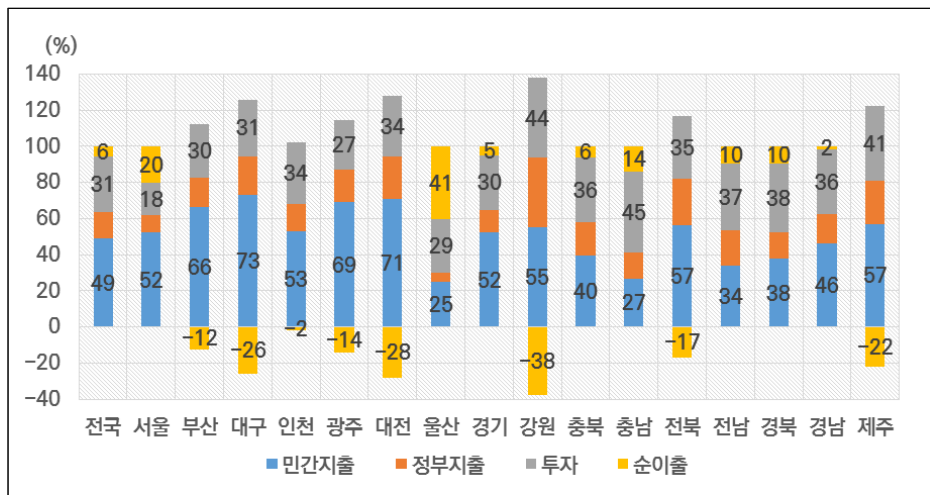
지역	1인당 GRDP		지역	1인당 GRDP	
	총량 (만원)	상대수준		총량 (만원)	상대수준
전국	2,838	100.0			
서울	3,249	114.5	강원	2,281	80.4
부산	2,065	72.8	충북	3,164	111.5
대구	1,826	64.3	충남	4,657	164.1
인천	2,332	82.2	전북	2,145	75.6
광주	2,048	72.2	전남	3,429	120.8
대전	2,037	71.8	경북	3,291	116.0
울산	6,017	212.0	경남	2,784	98.1
경기	2,592	91.3	제주	2,232	78.7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이러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차이는 지역의 다양한 구조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성장의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사인 수요의 측면에서 각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구성하는 구성비율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의 경제의 구조적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15년 기준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부문에서는 대구(73%), 대전(71%)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25%), 전남(34%)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중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순이출의 경우 울산(약 41%), 서울(20%), 충남(14%)의 비중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며, 강원(-38%), 대전(-28%), 대구(-26%) 등이 낮은 비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순이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의 방향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타 부문과 다른 안정적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지출의 경우 강원(39%), 전북(25%), 제주(24%), 대전(2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며, 울산(5%), 서울(10%), 경기(13%), 인천(14%) 등이 낮은 비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8 |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 비중(201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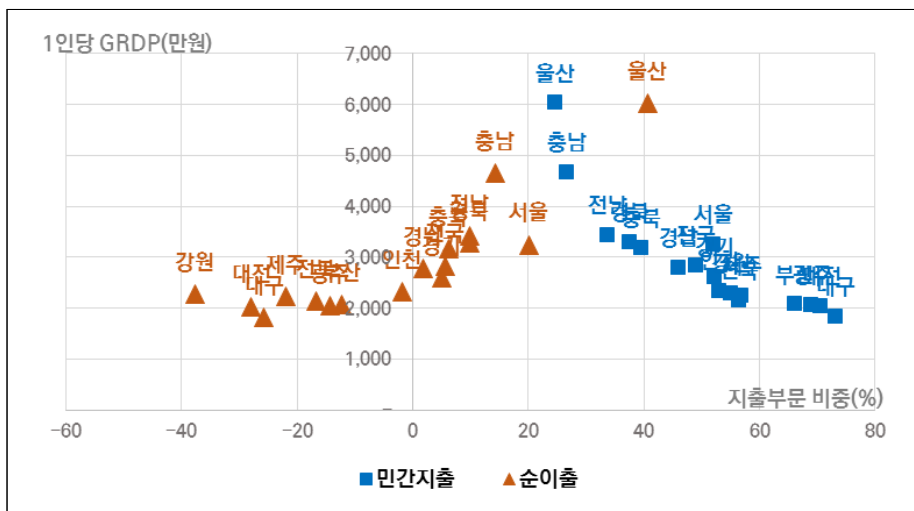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이러한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 중요한 두 부문인 ‘민간소비 비중’과 ‘순이출 비중’으로 구성된 유형을 살펴보면, 울산은 순이출이 높은 구조를, 대구는 민간지출이 높은 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RDP의 수준과 수요의 측면에서 주요한 지출부문인 민간소비 및 순이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인당 GRDP와 민간소비 비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 우하향 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1인당 GRDP와 순이출 비중과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출 비중을 갖는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은 높은 1인당 GRDP 수준을 보인 반면, 높은 민간소비 비중을 갖는 대구, 강원 등은 낮은 1인당 GRDP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해석하면, 과거로부터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출주도형으로 추진했던 지역은 생산위주로 누적된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9 | 1인당 지역내총생산(만원)과 민간지출 및 순이출 비중(%)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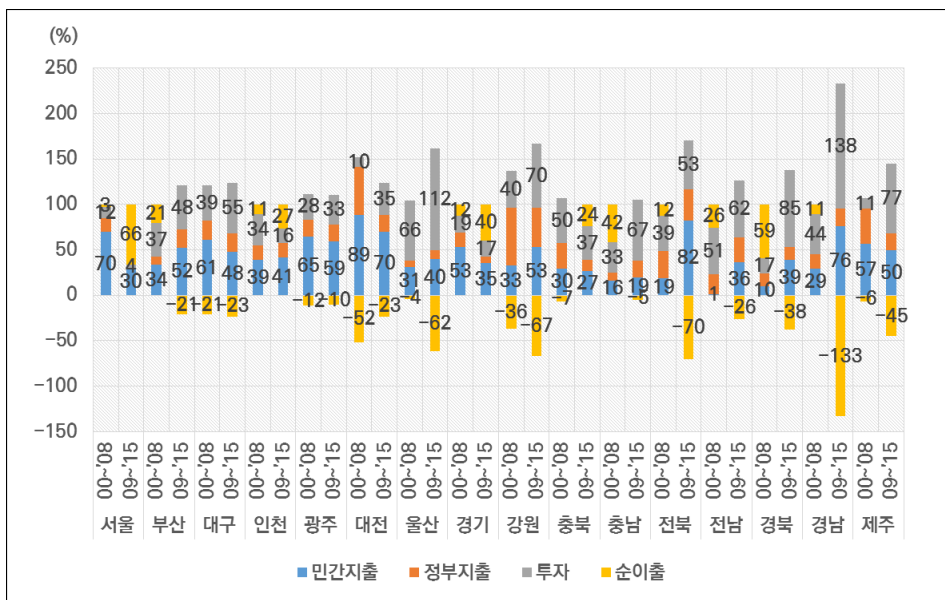
(2) 지역경제성장에서의 소비의 기여율

최근 이러한 지역의 순이출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상이한 패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순이출 비중이 높은

울산의 경우 과거에는 순이출을 주요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였으나, '00년 이후 순이출에 의한 경제성장은 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의 기여율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은 과거 민간소비에 의한 지역경제의 기여율이 높았으나, 최근에 이르러 민간소비에 의한 기여율은 점차 낮아지고, 순이출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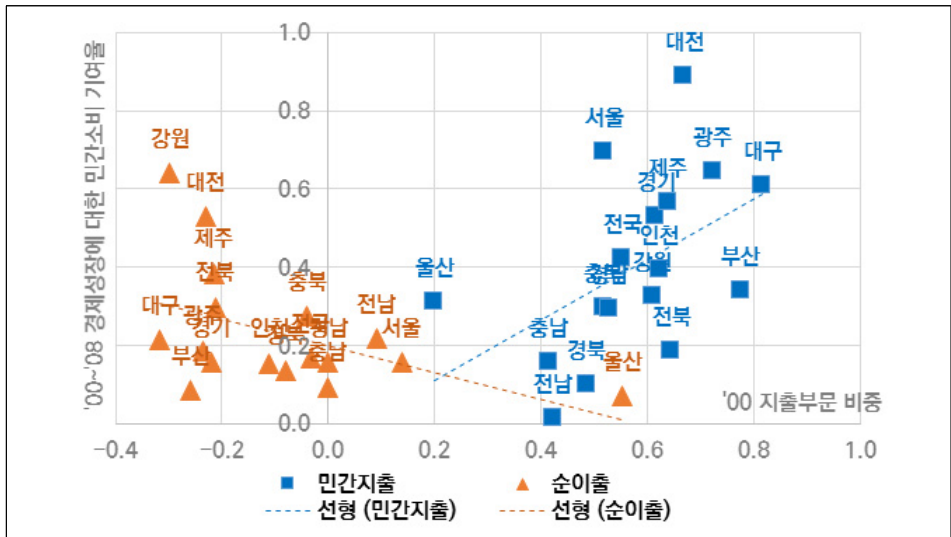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직접작성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역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케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00 ~ '08년 및 '09 ~ '15년의 민간소비 및 순이출의 비중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00~'08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민간소비의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러한 민간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민간소비를 통한 기여율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민간지출이 높은 지역은 지역의 소비비중을 증대시킴에 따라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산역량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순이출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민간소비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1 | '00~'08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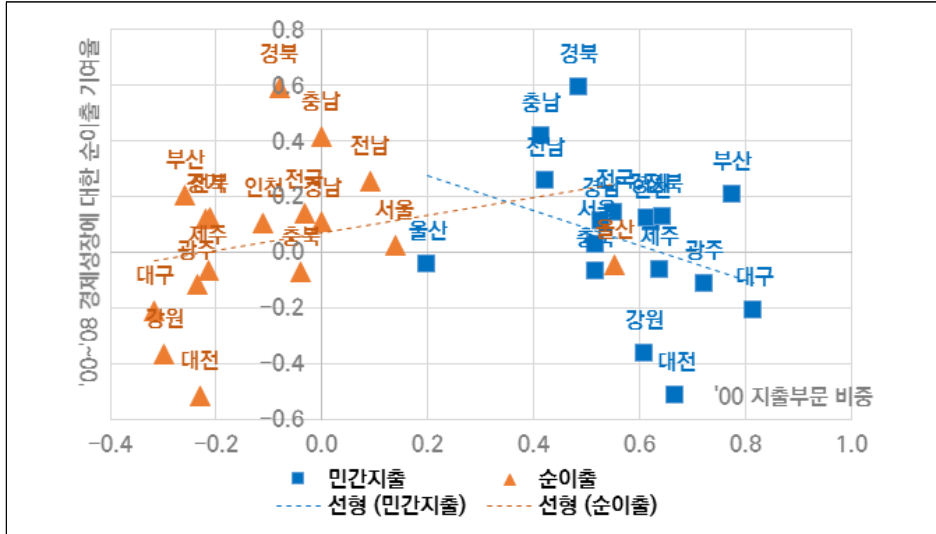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이와는 다르게 순이출을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 순이출의 동력을 발판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반면,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순이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순이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2 | '00~'08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순이출 기여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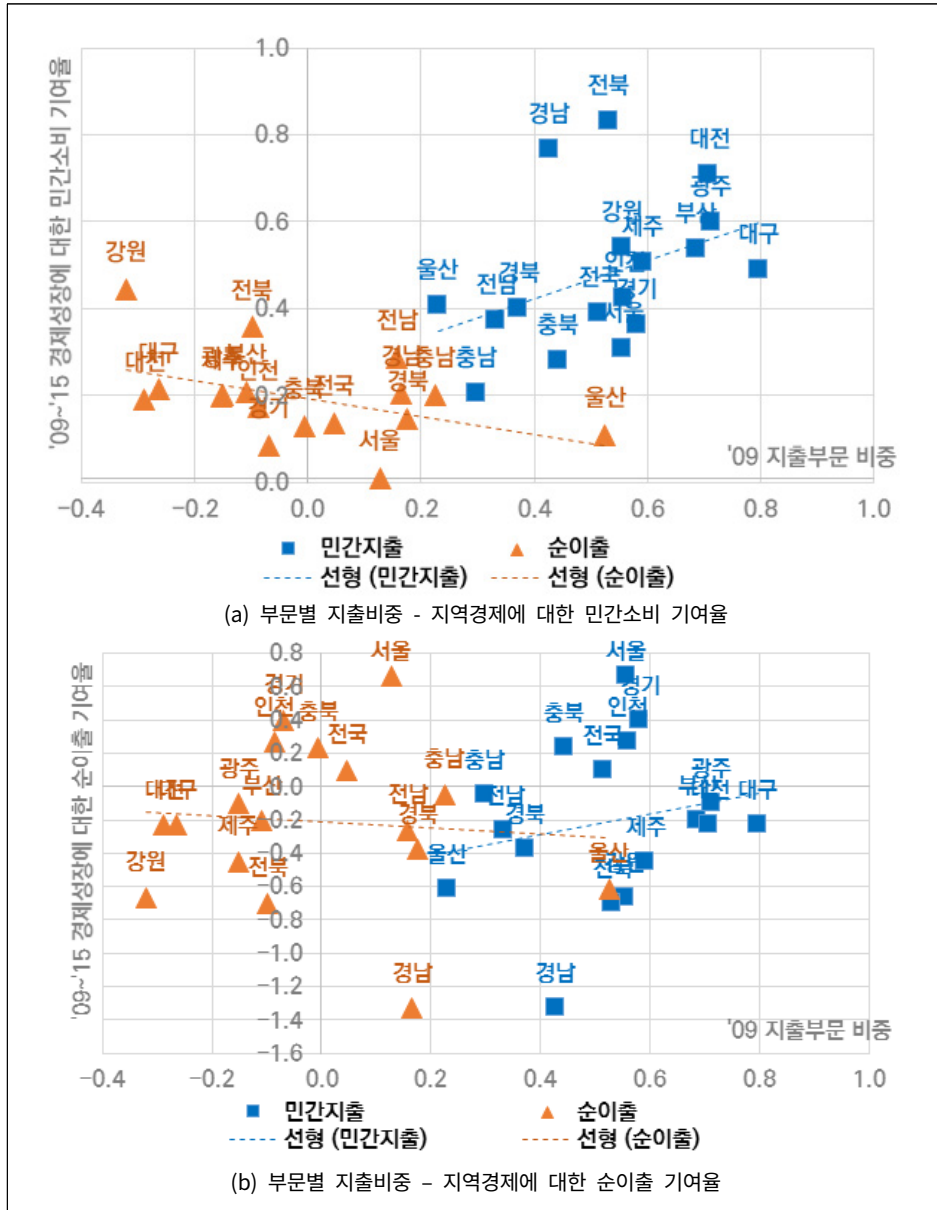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특·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민간소비를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한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순이출을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 '09~'15년간의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년에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민간소비로 인한 경제성장을 보일 뿐 아니라, 순이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양상 또한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제성장은 순이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의 주력부문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민간소비 및 순이출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 2-13 | '09~'15년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과의 관계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4. 지역경제와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1) 분석의 방법

(1) 분석의 방향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간소비, 순이출의 비중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검증을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이 중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민간소비와 순이출의 비중을 변수로 투입하여 지역경제와의 인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가지는 지출부문의 비중차이가 지역의 경제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의 구조

분석모형은 Lai(2004), Tsen(2010), Chimobi and Uche(2010)이 사용한 모델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Y = f(Csh, NXsh) \quad \text{식(2-2)}$$

$$\ln Y = \beta_0 + \beta_1 Csh + \beta_2 NXsh + \epsilon \quad \text{식(2-3)}$$

여기서, Y 는 1인당 GRDP를, Csh 는 지역경제 중 민간소비의 비중을, $NXsh$ 는 지역경제 중 순이출의 비중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독립변수의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Y 에 로그를 취하여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지역경제, 수출, 내수의 인과성 검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 모형 중 하나인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및 VEC(vector error-correction model)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크게 각 변수의

단위근 검정, 시차구조 분석, 공적분 분석, 인과성검정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한 인과성 검증은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을 통해 수행하였다.

2) 분석의 결과

먼저 각 변수들의 시계열적 안정성(stationary)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시계열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¹⁾. 이에 따라 패널 단위근 검정(panel unit-root test)분석을 수행한 결과 검정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모든 변수가 1차 차분하는 경우 시계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구분			LNy	Csh	NXsh
Level	공통	LLC t	-5.113 (0.000)	-2.024 (0.021)	-4.154 (0.000)
	개별	IPS W	1.003 (0.842)	0.445 (0.672)	-3.075 (0.001)
		ADF χ^2	27.946 (0.758)	30.136 (0.657)	62.050 (0.0020)
		PP χ^2	75.219 (0.000)	41.200 (0.184)	84.223 (0.000)
1st difference	공통	LLC t	-15.160 (0.000)	-15.047 (0.0000)	-14.691 (0.000)
	개별	IPS W	-13.135 (0.000)	-12.732 (0.000)	-13.845 (0.000)
		ADF χ^2	217.131 (0.000)	197.275 (0.000)	215.655 (0.000)
		PP χ^2	572.500 (0.000)	268.991 (0.000)	413.258 (0.000)

주 : LLC t는 Levin, Lin and Chu t 통계량, IPS W는 Im, Pesaran and Shin W 통계량, ADF χ^2 는 Augmented Dickey-Fuller chi-square, PP χ^2 는 Phillips and Perron chi-square를 의미하며, 괄호안의 숫자는 유의수준을 의미함

1) 불안정한(non-stationary)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으로는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성적 회귀현상(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

다음으로는 시차구조(lag-structure)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1차 및 3차의 시차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3차 시차를 채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²⁾.

표 2-3 | 시차검정 결과

Lag	LogL	LR	AIC	SC	HQ
0	212.013	NA	-4.354	-4.274	-4.322
1	795.111	1117.604	-16.314	-15.994*	-16.185*
2	807.323	22.642	-16.381	-15.820	-16.154
3	820.841	24.220*	-16.475*	-15.674	-16.151
4	823.768	5.061	-16.349	-15.307	-15.928

주 : LR(Likelihood Ratio),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Bayesian Criterion), HQ(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한슨(Johansen)검정방법을 활용하여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사이에는 장기 균형관계가 1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후 분석은 VECM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4 | 공적분 검정 결과

구분	Trace 값		$\lambda_{\max}$	
	Statistics	Prob.	Statistics	Prob.
H0: $r=0$	0.146*	0.000	40.254*	0.000
H0: $r \leq 1$	0.010	0.972	2.687	0.965
H0: $r \leq 2$	0.001	0.660	0.193	0.660

주 : *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단, VECM의 경우 차분을 활용하므로 2차를 시차로 분석에 활용하였음.

최종적으로 VECM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을 수행하였다. 이의 결과 2000~2015년간 ‘경제수준(1인당 GRDP)’, ‘소비’, ‘순이출’은 상호간 양방향의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8년의 경우 소비와 순이출간에는 양방간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였으나, 경제수준에 대한 각 지출의 기여는 경제수준이 소비와 순이출을 유발하는 일방향적 구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sen(2010)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소위 성장견인형 수출증대(Growth-led Export), 성장견인형 내수증대(Growth-led Domestic Demand)의 전략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9~2015년에 이르면서, 민간소비, 경제성장의 양방향적 관계와 민간소비가 순이출을 증대시키는 경로가 도출되고, 그 크기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내수주도형 성장증대(Domestic Demand led Growth)의 방향성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민간소비의 역할 증대 및 순이출의 역할 감소로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5 |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전 기간		기간 구분	
	2000~2015		2000~2008	2009~2015
D(CPSH) $\Rightarrow$ D(LNY)	5.925 (0.051)	*	3.140 (0.208)	6.021 (0.049) **
D(NXSH) $\Rightarrow$ D(LNY)	8.510 (0.014)	**	3.124 (0.209)	3.751 (0.153)
D(LNY) $\Rightarrow$ D(CPSH)	8.687 (0.013)	**	7.472 (0.023) **	9.105 (0.010) ***
D(NXSH) $\Rightarrow$ D(CPSH)	7.550 (0.022)	**	8.462 (0.014) **	0.271 (0.872)
D(LNY) $\Rightarrow$ D(NXSH)	10.430 (0.005)	***	9.727 (0.007) ***	3.909 (0.141)
D(CPSH) $\Rightarrow$ D(NXSH)	12.024 (0.002)	***	9.937 (0.007) ***	8.056 (0.018) **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를 의미, ()은 p 값임.

5. 지역소득과 지역소비의 인과성 검증

1)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의점

앞의 분석에서는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 2000년 후반에 이르면서 소비지출이 경제성장 및 순이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소비 주도형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비주도성장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소비지출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이다. 이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크게 소득이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인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임금(또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성향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비하려는 의향을 증대시켜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변수로 구성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를 구축하여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소비함수 논쟁’을 벌여왔다³⁾. 이러한 측면과 결부하여, 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증대로 연계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적용가능성을 지역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소득의 향상으로부터 지역의 소비증대 및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내수주도형 성장을 위한 전략은 크게 국가가 벌어들이는 요소소득 중에 임금의 비중을 높여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의 합을 증가시키는 체제의 임금주도 성장체제(Wage-led Growth)와 이윤의 증가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들의 합을 증가시키는 이윤주도 체제

3)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에서 시작된 소비함수 논쟁은 듀젠베리(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프랑코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 등 다양한 학자의 가설에 의해 수정·보완되며 발전해 왔음

(Profit-led Growth)로 구분될 수 있다(Lavoie, Stockhammer, 2012).

따라서 특정지역의 경제체제가 임금주도 체제인지 이윤주도 체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증대에 따르는 수요의 변동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자 이외의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 주도성장(Income-led Growth)’으로 명명한 연구가 다수인데, 많은 연구에서 요소소득 대비 임금(피용자보수)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향상시키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홍장표, 2014).

소득주도성장방식은 고용증대로 인한 성장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지역차원에서의 고용구조 및 임금의 수준이 각각 차별적 이므로 특정지역에서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는 해당지역의 고용구조 등에 의해 차별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총 요소소득은 모든 취업자가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체 고용인구와 1인당 임금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은 1인당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노동자를 증대시키는 방향 즉, 고용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주도성장의 방식은 고용증대를 통한 성장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노동소득분배율의 향상, 즉 소득의 향상이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역의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금증대 및 고용성장의 효과가 소비성장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의 소비증대가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분석의 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주요변수로 한 바두리와 마글린(Bhaduri and Maglin, 1990)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요소소득(Y)은 크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피용자보수(W)와 기업가가 취득하는 영업잉여(P)로 구분된다.

$$Y = W + \Pi \quad \text{식(2-4)}$$

또한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은 소득과 소비의 함수로 구성된다.

$$C = c_{cy} Y \quad \text{식(2-5)}$$

여기서 C 는 총 소비, C_{cy} 는 소득이 소비로 전환되는 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함수로 재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피용자보수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영업잉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제시가 가능하다.

$$C = c_w W + c_p \Pi \quad \text{식(2-6)}$$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1인당 산식을 산출 하였다(식(2-7)).

$$\frac{C}{P} = c_w \frac{W}{P} + c_p \frac{\Pi}{P} \quad \text{식(2-7)}$$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식 (3-7)에 대한 더블로그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ln \frac{C}{P} = c_w \ln \frac{W}{P} + c_p \ln \frac{\Pi}{P} \quad \text{식(2-8)}$$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식(2-8)의 총 피용자보수를 다시 근로자 1인당 소득과 총 노동자의 수로 구분하여 식(2-9)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하여 식(2-9)을 식(2-10)으로 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ln \frac{C}{P} = c_w \ln \frac{W}{E} \cdot \frac{E}{P} + c_p \ln \frac{\Pi}{P} \quad \text{식(2-9)}$$

$$\ln \frac{C}{P} = c_{w/e} \ln \frac{W}{E} + c_e \ln \frac{E}{P} + c_p \ln \frac{\Pi}{P} \quad \text{식(2-10)}$$

여기서, Y 는 요소소득을, C 는 민간소비를, W 는 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를, Π 는 영업잉여를, P 는 인구수를 나타낸다. 실증분석은 식(2-10)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모든 변수는 탄력성(elasticity)으로의 산출을 위해 로그화 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이를 차분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모형의 분석을 위한 분석기간은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2000~2015년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는 통계청의 소득계정별 원천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비를 나타내는 C 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민간소비금액을 사용하였으며, P 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였다.

3) 분석결과

식(2-10)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수의 탄력성은 각각 고용, 소득, 이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꾸어 해석하면, 각각의 변수를 1%높이는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 소득, 이윤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0~'08년의 경우 고용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9~'15년 동안 소득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앞서 논의한 정책적 측면과 연계하면,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과 고용율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유의미한 반면, 기업가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경우 민간소비의 증대를 통한 소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6 | 소득효과, 고용효과 및 이윤효과의 분석결과

	전 기간	기간 구분	
	2000~2015	2000~2008	2009~2015
소득효과 D(LN(W/E))	0.136 ** (0.064)	0.070 (0.126)	0.160 *** (0.060)
고용효과 D(LN(E/P))	0.655 *** (0.092)	0.962 *** (0.185)	0.405 *** (0.070)
이윤효과 D(LN(Π/P))	0.001 (0.013)	-0.001 (0.029)	0.001 (0.009)
Const.	0.010 *** (0.004)	0.013 (0.009)	0.009 *** (0.003)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를 의미, ()값은 std. Error 값임.

추가적으로 지역별 별도의 분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의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대전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성장을 통해 소비 진작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으로, 이윤주도 성장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 시·도별 소비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및 이윤효과 분석결과

	총소득효과 D(LN(W/P))		총이윤효과 D(LN(Π/P))	Const.
	소득효과 D(LN(W/E))	고용효과 D(LN(E/P))		
전 지역	0.136 ** (0.064)	0.655 *** (0.092)	0.001 (0.013)	0.010 *** (0.004)
서울	0.749 ** (0.275)	1.005 ** (0.487)	0.095 (0.097)	-0.020 (0.013)
부산	0.428 (0.300)	0.786 * (0.659)	0.178 * (0.086)	-0.012 (0.019)
대구	0.314 (0.636)	0.488 (0.427)	0.274 ** (0.113)	-0.011 (0.020)
인천	0.195 (0.284)	0.942 * (0.524)	0.240 *** (0.074)	-0.012 (0.017)
광주	0.224 (0.267)	0.642 (0.431)	0.097 (0.090)	0.001 (0.017)
대전	0.459 ** (0.194)	1.323 *** (0.332)	-0.055 (0.039)	-0.009 (0.012)
울산	-0.206 (0.245)	0.981 ** (0.391)	-0.019 (0.021)	0.027 ** (0.012)
경기	0.539 (0.400)	0.843 (0.604)	0.009 (0.056)	-0.010 (0.022)
강원	-0.176 (0.267)	0.415 (0.406)	0.077 (0.089)	0.025 (0.015)
충북	0.167 (0.234)	0.787 *** (0.187)	0.071 (0.101)	0.002 (0.015)
충남	0.168 (0.268)	0.495 (0.368)	-0.080 (0.067)	0.009 (0.021)
전북	-0.057 (0.549)	0.428 (0.712)	-0.073 (0.200)	0.024 (0.037)
전남	-0.280 (0.286)	0.112 (0.452)	-0.017 (0.041)	0.038 (0.020)
경북	-0.307 (0.403)	0.063 (0.707)	-0.036 (0.048)	0.037 (0.022)
경남	0.354 (0.382)	-0.339 (0.601)	0.025 (0.093)	0.005 (0.022)
제주	0.021 (0.309)	0.464 (0.488)	-0.071 (0.080)	0.022 (0.019)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를 의미, ()값은 std. Error 값임.

6. 소결

본 장의 소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경제에서의 지역 및 지출부문의 역할을 확인하였는데, 국가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지역이 기여하는 정도(기여율)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가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도는 15년 기준 경기(약 22.5%), 서울(약 22.3%), 충남(7.4%), 경남(6.4%)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경제성장의 지역별 기여율도 마찬가지로 경기(약 32%), 서울(약 19%), 충남(약 12%), 충북(약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지출측면의 기여율은 민간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 부분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소비 다음으로는 투자, 순이출의 순으로 높은 기여율을 차지하였다. 국민경제성장에 있어 지역-민간소비의 기여율 또한 지역의 규모에 비례하는 추세이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도가 높은 기여율(약 13.3%)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이 9.2%, 경남이 2.4%, 인천이 2.0%로 나타났다. '00~'15년 기준,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순이출의 기여율은 경기(7.7%), 서울(5.7%)의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0.3%), 울산(-0.1%)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에서의 소비의 역할을 고찰 하였다. 지역경제를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국가경제에서의 비중과 같이 경기, 서울, 충남, 경남의 순('15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단일 지역경제차원에서 1인당 GRDP를 비교하는 경우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차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생산-소비의 구성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역 내 지출부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측면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순이출의 측면에서는 울산, 서울, 충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1인당 GRDP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산출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지출부문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이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소비의 기여율은 시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전환됨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과거 수출주도형 지역으로 여겨지던 지역에서의 순이출로 인한 경제성장분은 감소한 반면, 과거 민간소비 지출을 주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하던 지역은 순이출 또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소비의 인과성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민간소비와 순이출의 비중을 변수로 투입하여 지역경제와의 인과성 검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에 이르면서 지역소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성장이 소비 및 순이출을 유발하는 이른바 성장견인형 경제정책(Growth-led Economic policy)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소비 지출이 경제성장 및 순이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와의 인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소비가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요소소득과 소비에 대한 함수식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부분을 임금과 고용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고용, 임금, 이윤의 크기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고용 및 이윤의 효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00~'08년의 경우 고용효과만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효과가 일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CHAPTER 3

지역 소비구조 분석

1. 지역 소비구조 정의 및 분석방법 | 49

2. 지역 소비구조 분석결과 | 52

3. 소결 | 68

지역 소비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의 활용 가능한 소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비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지역별·목적별 소비지출에 대한 탐색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가능한 소비영역의 도출 및 이와 연계한 함의점을 고찰하였다.

1. 지역 소비구조 정의 및 분석방법

1) 지역소비구조의 정의

국가단위 소비관련 연구에서의 ‘소비구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이 다양한 품목에 의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가에 대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의 소비구조는 국가경제에서의 소비부문 중 민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의 품목별 분배 비중에 대한 구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크게 목적별 및 형태별 품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지역단위의 소비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도의 지역단위에서 민간소비의 품목별 소비 행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함의점을 찾을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비행태 분석을 병행하였다.

2) 분석방법

지역민의 소비품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 시·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자료 중 민간소비지출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자료는 크게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소모 및 순이출로 구성되나, 이중 분석의 대상은 민간소비지출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의 민간소비지출부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시·도 내에서 소모된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도 지역민이 소비한 총 지출액을 의미한다.

민간소비의 소비품목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목적별 분류체계와 형태별 분류체계로 구분된다. 우선 목적별 분류체계는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목적별 분류체계인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기반을 둔 12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형태별 분류체계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및 서비스재화로 구분되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목적별 분류체계인 12대 분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의 소비구조의 측정은 이러한 목적 및 형태별 분류체계에 대하여 시·도 단위에서의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및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였다.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RC_{ri,t} = \frac{C_{ri,t}}{C_{r,t}} \quad \text{식(3-1)}$$

여기서 $RC_{ri,t}$ 란 i 지역의 j 품목에 대한 t 기의 소비지출액 비중을 의미하며, $C_{ri,t}$ 는 i 지역의 j 품목에 대한 t 기의 소비지출액을, $C_{r,t}$ 는 i 지역의 전체품목에 대한 t 기의 소비지출액을 의미한다. 소비지출액 비중의 지역간격차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CV_{i,t} = \frac{\sigma_{i,t}}{m_{i,t}} \quad \text{식(3-2)}$$

여기서 $CV_{i,t}$ 란 i 품목에 대한 t 기의 변이계수를 의미하며, $\sigma_{i,t}$ 는 i 품목에 대한 t 기의 지역 간 표준편차를, $m_{i,t}$ 는 i 품목에 대한 t 기의 지역평균을 의미한다.

표 3-1 | 목적별 소비지출의 구성 및 분류

구분	연번	대분류	소분류
목적별	1	식료품·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2	주류·담배	주류, 담배
	3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4	주거·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6	보건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7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8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9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10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11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12	기타 상품·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 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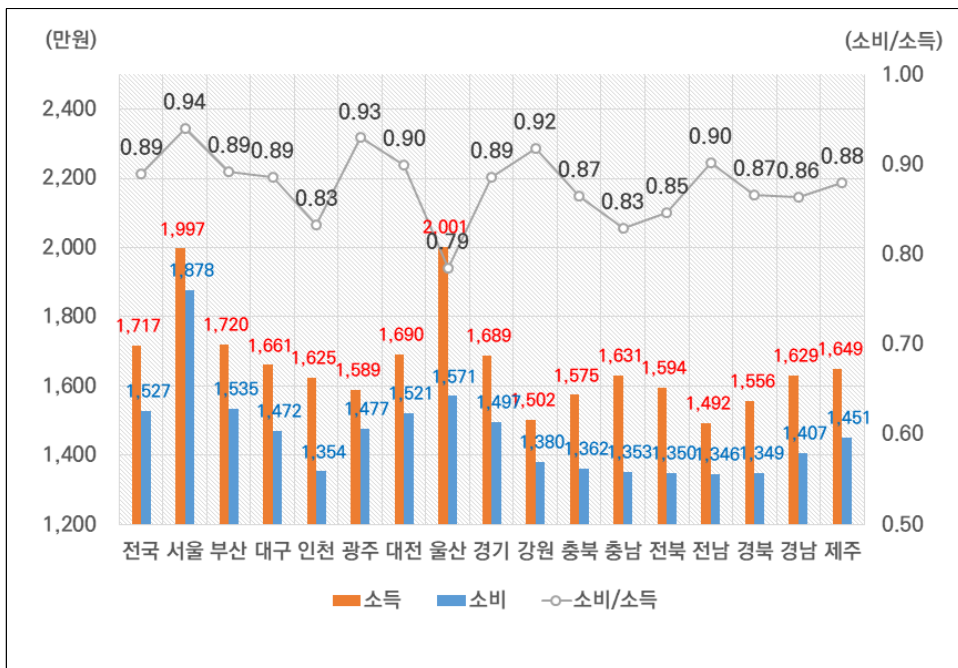
출처 : 통계교육원, 통계교실 홈페이지(http://sti.kostat.go.kr/site2/pop_learning/learning_003015.html)

2. 지역소비구조 분석결과

1) 지역별 소비규모

소비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소득 및 소비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지역소비의 규모는 '15년 기준 1인당 전국기준 1,527만원 수준이며, 이 중 높은 소비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 1,878만원, 울산 1,571만원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 1,346만원, 경북 1,349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⁴⁾.

그림 3-1 | '15년 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2015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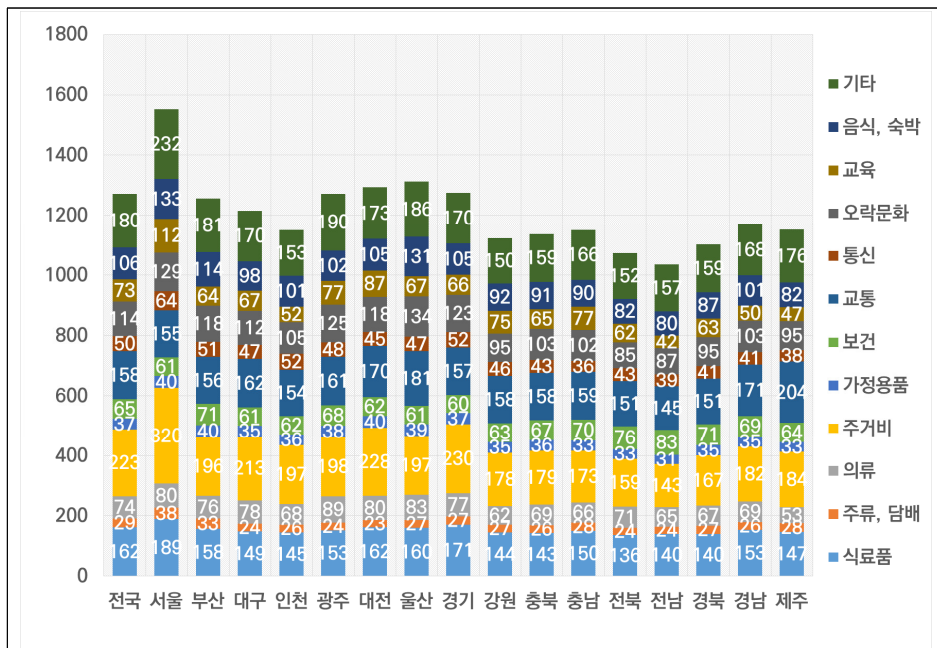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4) '15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기준 1,717만원이며, 높은 소득을 가지는 지역은 울산 2,001만원, 서울 1,996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소득을 가지는 지역은 전남 1,491만원, 강원 1,502만원으로 나타났음.

1인당 지역별 소비품목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소비규모를 갖는 서울의 경우 주거비, 식료품비,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의 품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은 제주도, 의료보건은 전남, 오락·문화는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 1인당 지역별 소비품목 금액(2015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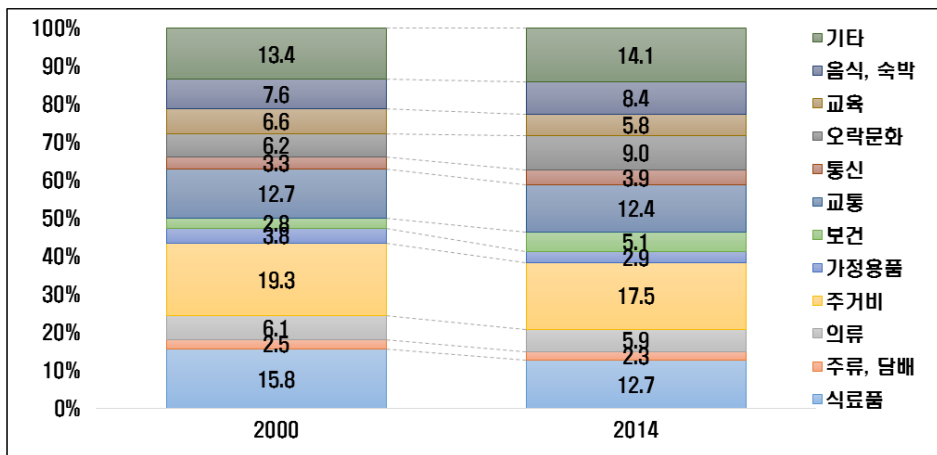
주 :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품목별 소비총액을 각 시도별인구로 나누어 산출.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2) 지역별-목적별 소비비중분석

① 전국 소비비중 변화

'00년 이후 전국의 소비품목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 동안 높은 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주거비 및 식료품, 교통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주류 및 담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통신비 등으로 나타났다. 필수재로 분류되는 주거, 식료, 의류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가·복지, 오락·문화, 보건 등은 생활형태의 개선의 따라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3 | 소비품목의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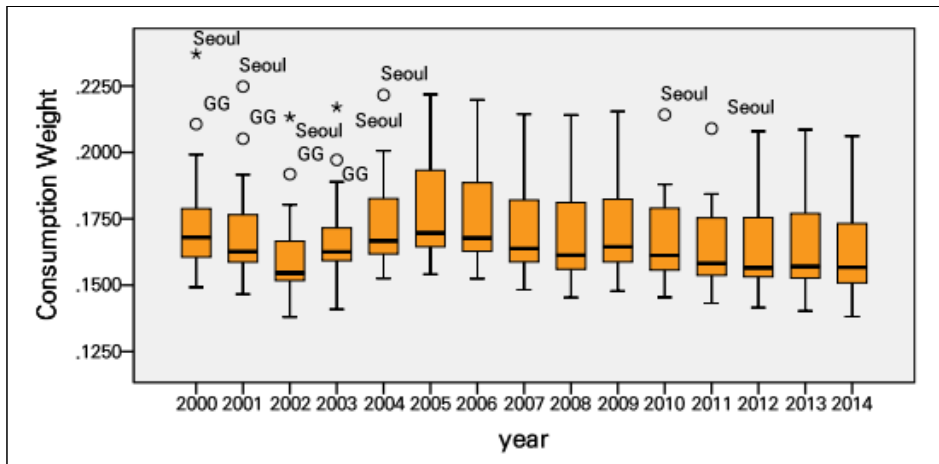
지역별 소비품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4년 기준 소비품목 중 5%가 넘는 품목에 한하여 연도별-지역별 상자도표(box-plot)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⁵⁾.

5) 상자도표의 경우 상자의 중간선은 중앙값(median)을 의미하며, 상자의 상한은 1사분위, 상자의 하한은 3사분위를 의미함. 상(하)단수염(whiskers)은 1(3)사분위로부터 1.5배의 IQR내에 있는 자료 중 가장 멀리 있는 자료의 값을 의미하며, 상(하)단의 '○' 및 '*'의 의미는 이상치(outlier)를 의미 함.

② 주거·수도·광역

가장 높은 소비비율을 갖는 품목인 주거비를 살펴보면, 중위값이 15~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대 이상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 | 주거비 품목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이러한 주거비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PIR 및 RIR이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수도권 지역의 PIR은 2016년 기준 7.6%로 전국 평균인 6.6%, 광역시 5.7%, 도지역 4.7%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의 RIR 역시 2016년 기준 24.6%로 전국 평균인 21.4%, 광역시 16.6%, 도지역 15.1% 대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연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수준은 여타의 시·도 지역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PIR 및 RIR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6) PIR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를, RIR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를 의미 함.

표 3-2 | 지역별 PIR 및 RIR (단위 : %)

	지역별 PIR				지역별 RIR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6.0	8.1	4.2	3.4	22.9	25.3	20.1	18.5
2008	6.0	8.5	4.0	3.3	22.8	26.1	19.5	16.4
2010	5.6	7.9	4.1	3.1	23.1	26.4	19.4	16.2
2012	7.6	10.1	7.1	5.4	26.4	30.5	22	19.3
2014	5.7	7.1	5.1	4.1	24.2	27.4	20.5	17.3
2016	6.6	7.6	5.7	4.7	21.4	24.6	16.6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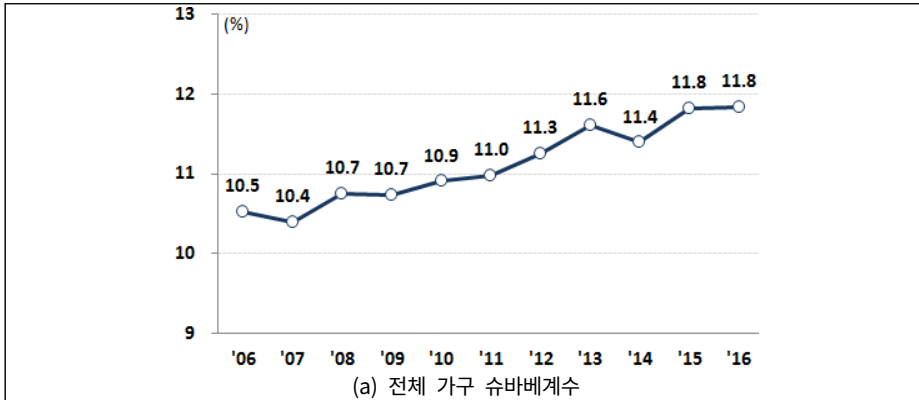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p.7.

주거비의 경우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거비가 실제로 가계의 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즉, 주거비가 상승하는 경우 타 품목의 소비 지출을 줄임으로서 국가경제에 일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특히 소득계층, 연령별,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개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슈바베계수(Schwabe index)를 측정하였다. 슈바베계수란 총소비지출 중 주거비로 지출하는 소비액의 지출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슈바베계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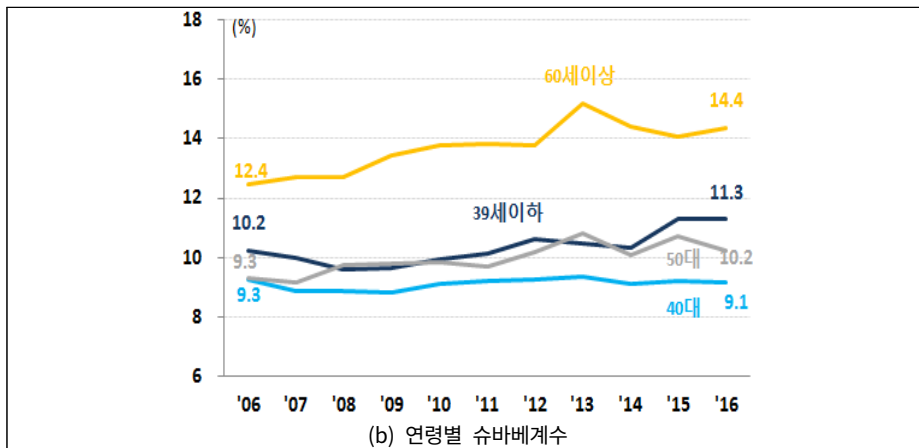
2006년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슈바베계수는 10.5%였으나, 2016년에는 11.8%로 분석기간 동안 전체 가구의 슈바베계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소비중 주거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중 특히 39세 이하의 젊은 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추로 여겨지는 40~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슈바베계수가 낮게 산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5 | 전체 가구의 슈바베계수(단위 :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계산
주 : 전체가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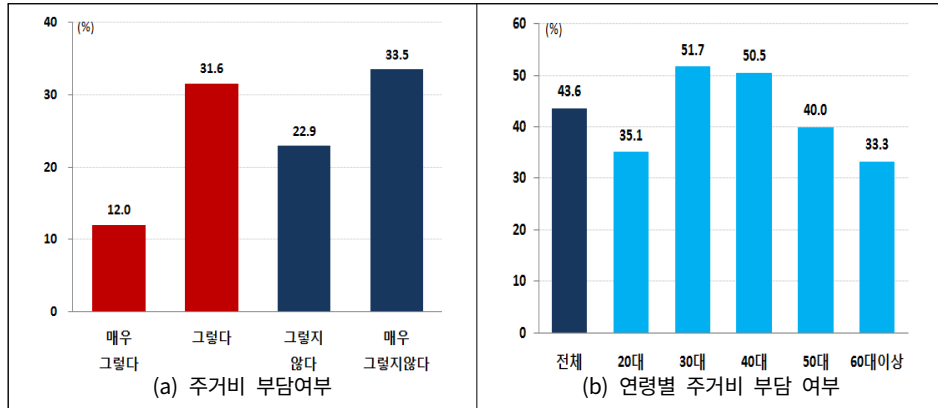
그림 3-6 | 가구 연령별 슈바베계수(단위 :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계산
주 : 전체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이러한 주거비 부담의 증가에 따른 타 소비지출의 감소현상을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주거비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특히 30~40대가 주거비로 인한 소비 위축이 크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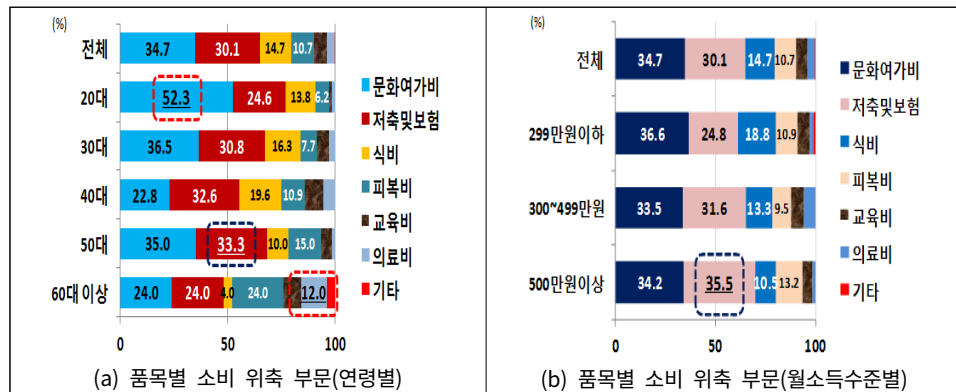
그림 3-7 | 주거비로 인한 소비위축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p.8.

같은 조사에서 주거비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품목은 전체가구에서는 문화·여가비의 품목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문화·여가비의 품목이, 50대 가구는 저축 및 보험, 60대 이상에서는 의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 연령 및 월소득수준별 소비위축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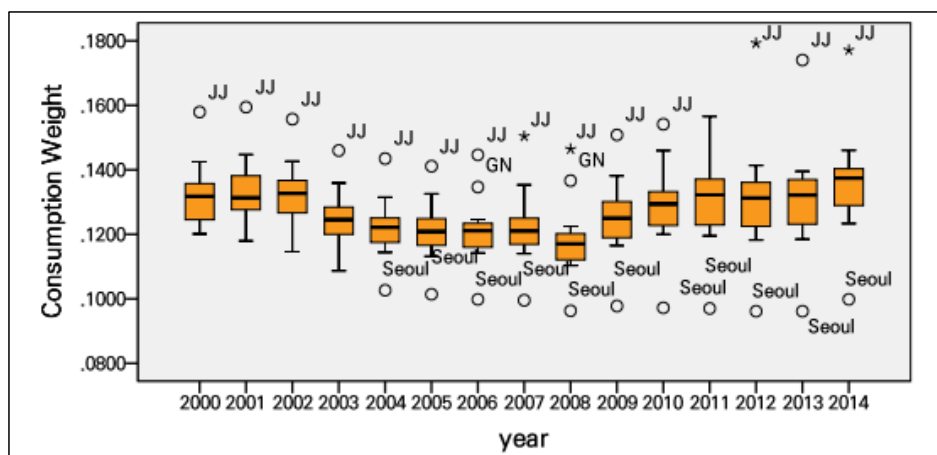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p. 12.

③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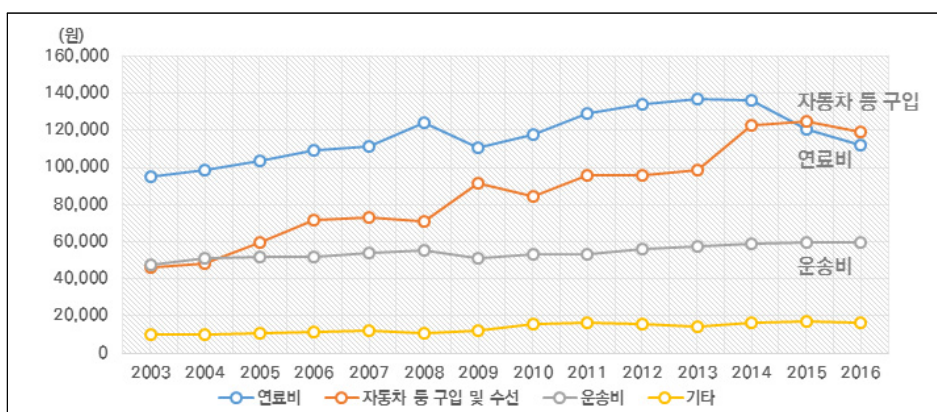
교통비의 경우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교통비에는 이동을 위한 비용지출 이외에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체계가 발달한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교통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림 3-9 | 교통비품목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그림 3-10 | 교통비 세부품목의 지출변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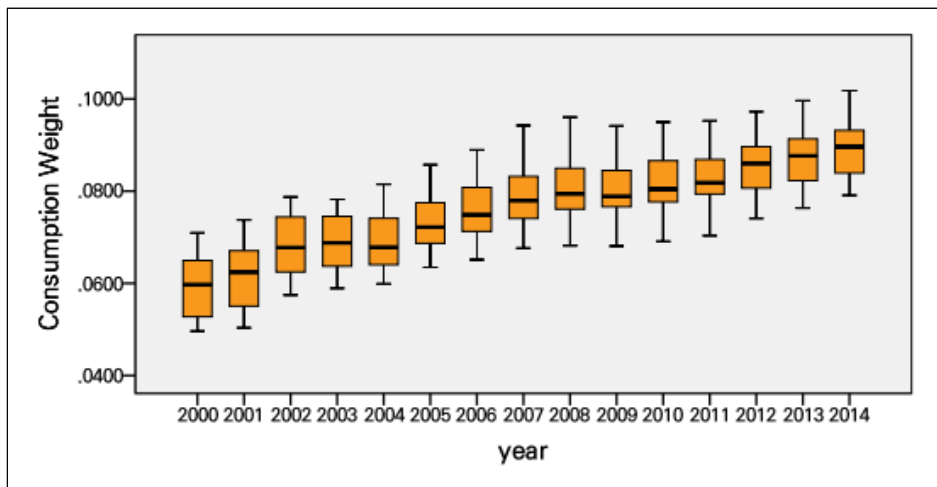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④ 오락·문화

오락·문화 품목의 경우 '00년 6% 수준에서 '14년 9%수준으로 분석의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및 숙박의 경우 '00년 7%수준에서 '14년 8%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1 | 오락문화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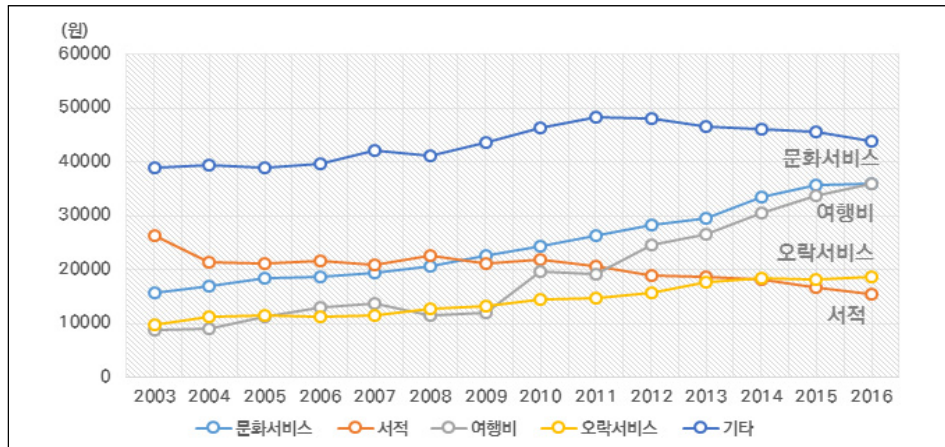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오락·문화 품목의 경우 취미 등을 위한 다양한 재화의 구입 및 서비스에 소비하는 지출과 더불어, 여행경비 등 관광분야에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세부 품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면, '03년 까지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던 서적구입비는 최근에 이르러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문화서비스 및 여행비의 경우 '03년 시기에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이 점차 증대되는 과정에서의 추구하는 소비행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추후 문화서비스 및 여행비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비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12 | 오락·문화의 세부품목 지출변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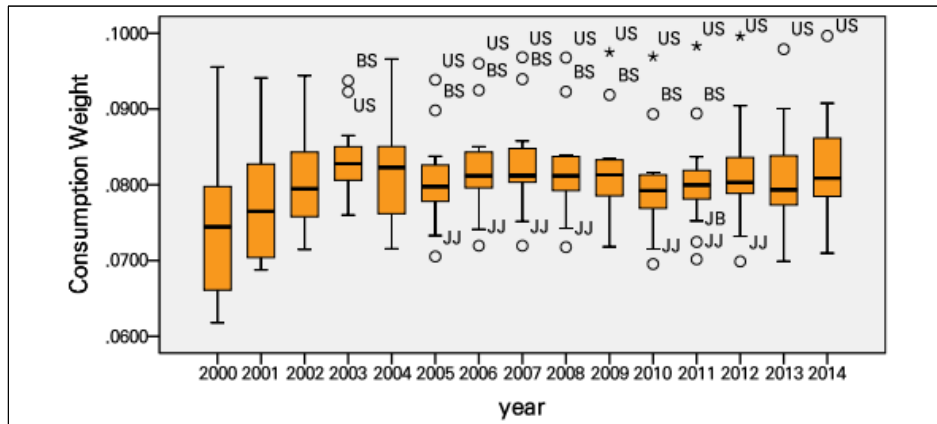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⑤ 음식·숙박

음식 및 숙박의 경우 '05년 이후 부산 및 울산이 과대 이상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의 경우 과소 이상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⁷⁾.

그림 3-13 | 음식숙박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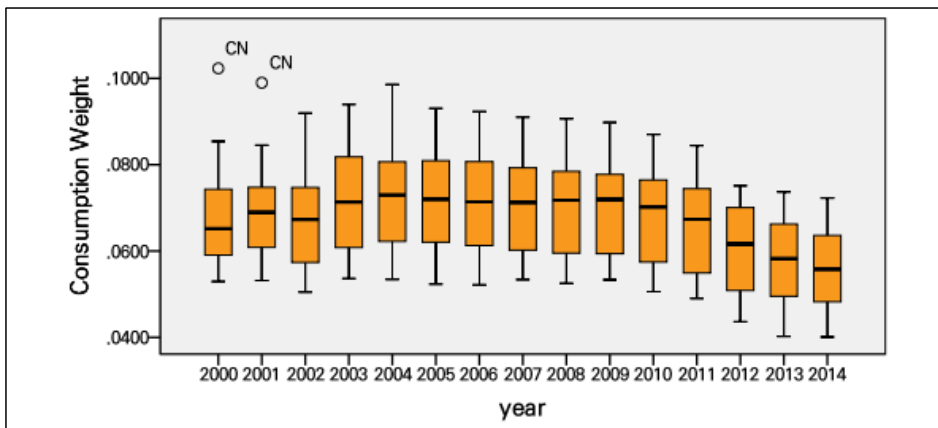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7) 음식·숙박의 세부품목은 음식비(외식 등) 및 숙박비로 구분되며, 개략적으로 97%이상이 음식비로 구성 됨.

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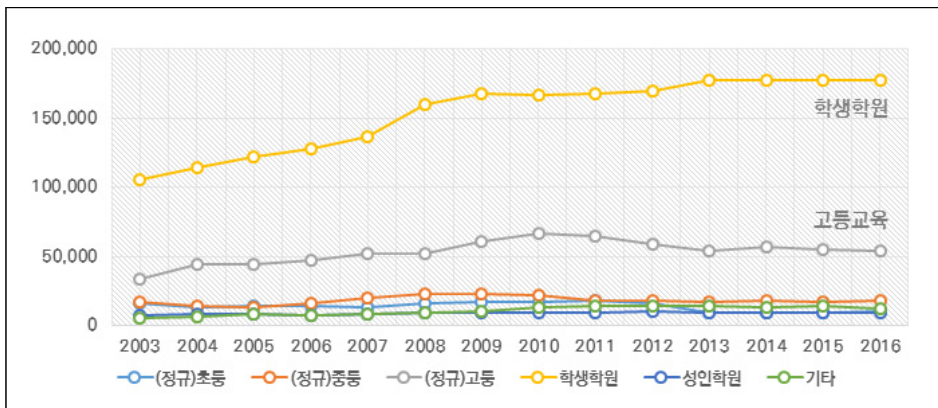
교육비의 경우 중앙값이 7%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6%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의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학원 및 고등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 교육비 품목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그림 3-15 | 교육비 세부품목의 지출변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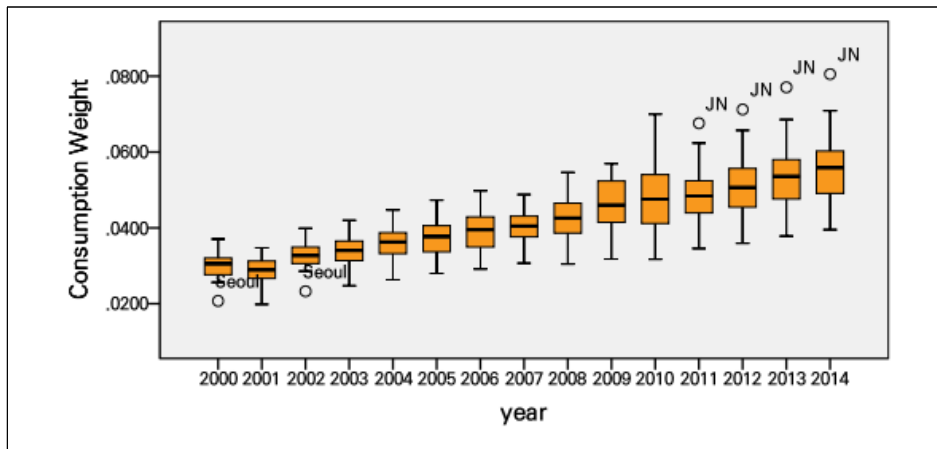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⑦ 보건

의료·보건 분야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분석기간 동안의 중위값은 '00년 3% 수준에서 '14년 5%수준으로 커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의 경우 초기 과소 이상점으로 산출된 반면, 전남의 경우 '11년 이후 과대 이상점으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6 | 의료보건 품목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이러한 의료·보건비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살펴 보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소비불균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부안군이 185만원, 전남 고흥군 177만원, 경남 함평군 174만원 순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진료비가 낮게 산출된 수원시 영통구(71만원), 창원시 성산구(78만원), 경북 구미시(81만원)와 비교하면 시군구 간에 100만원이 넘는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다수 분포한 전남·전북의 의료·보건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 환자 거주 지역별 1인당 진료비(상·하위 10위)

순위	진료비 높은 시군구			진료비 낮은 시군구		
	시군구	1인당 입·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만원)	시군구	1인당 입내원일 수	1인당 진료비 (만원)
	전국(평균)	19.7	101	전국(평균)	19.7	101
1	전북 무안군	34.5	185	경기 수원 영통구	15.3	71
2	전남 고흥군	31.5	177	경남 창원 성산구	16.6	77
3	전남 함평군	32.2	174	경북 구미시	16.8	80
4	경남 의령군	34.0	173	경기 화성시	17.1	80
5	전북 김제시	31.5	172	서울 강남구	15.4	8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이러한 지역의료비의 편중현상은 지역의 인프라와 결부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일차적 의료기능 미흡에 따라 수도권일대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중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타 지역의 진료비가 유입되는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 종로,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부산 서구 등이 높은 타 지역 진료비 유입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종로구), 경북대병원(대구 중구), 전남대병원(광주 동구), 세브란스(서대문구) 등 주요 대학병원의 입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 | 타 지역 진료비 유입현황(요양소재지 기준) (단위: 천원,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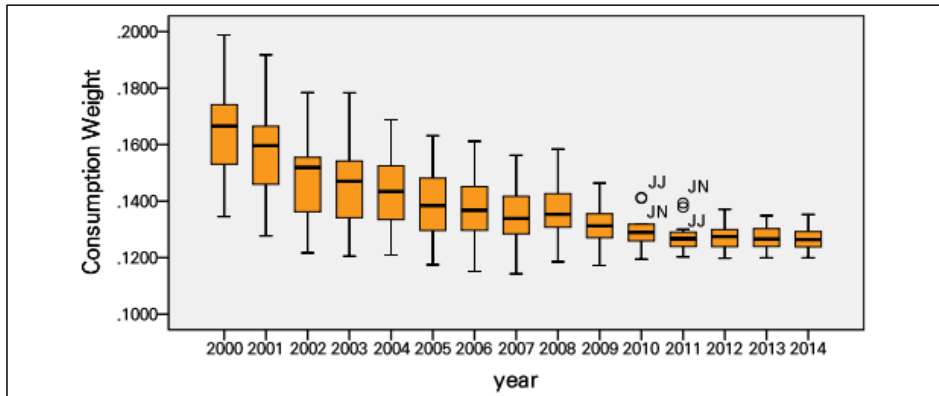
		진료비			
		전체	타지역	(비율)	타지역 유입 월평균
상위	서울종로구	1,133,340,609	1,061,254,212	(93.6)	554,236
	대구중구	695,402,503	646,500,524	(93.0)	667,861
	광주동구	563,664,454	490,465,037	(87.0)	415,722
	부산서구	754,846,166	655,081,930	(86.8)	474,243
	서울서대문구	1,024,015,328	853,111,068	(83.3)	227,771
하위	진도군	22,600,890	1,438,877	(6.4)	3,700
	영양군	7,367,948	487,092	(6.6)	2,275
	남해군	35,193,061	2,480,628	(7.0)	4,491
	완도군	32,087,242	2,448,532	(7.6)	3,837
	울릉군	2,819,344	234,990	(8.3)	1,95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⑧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품목의 지출비중 중 높은 비중을 갖는 식료품의 경우 '00년에는 중앙값이 16%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14년에는 약 13%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제주, 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지역 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7 | 식료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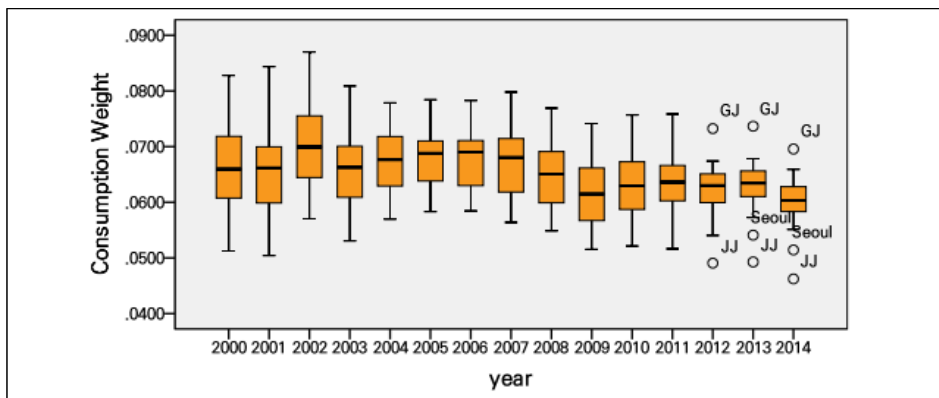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⑨ 의류·신발

의류의 경우 중위값이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과대이상점, 제주 및 서울의 경우 과소이상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8 | 의류비 품목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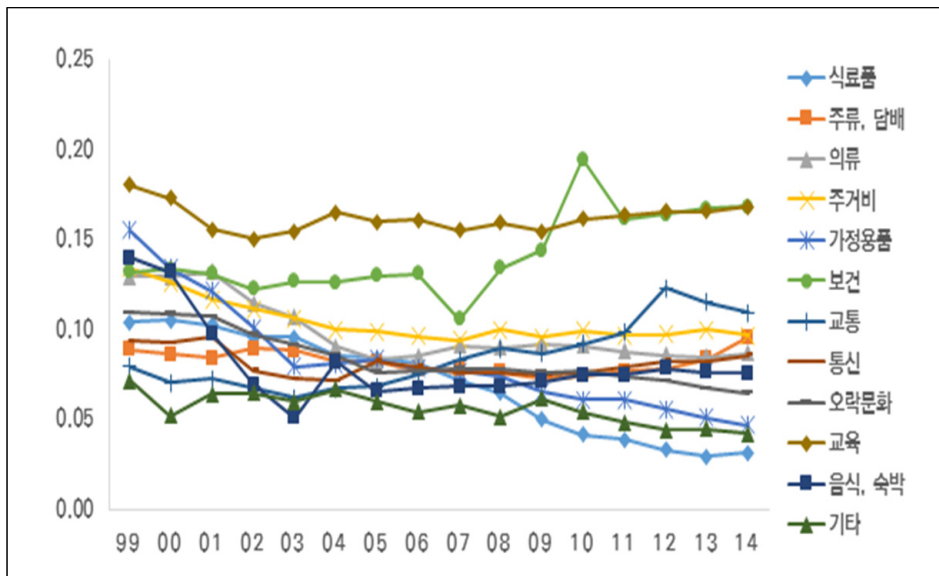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3) 목적별 지출비중의 지역 간 격차

이러한 목적별 지출의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 간 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필수적인 소비로 여겨지는 식료품, 의류 등의 격차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교육, 보건 등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문은 분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꾸준히 높은 지역 간 격차를 보였으며, 의료·보건 분야는 '07년 이후 급속도로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비의 경우 제주 및 서울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주거비의 경우 서울 및 경기의 과대 이상치로 인해 일정수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9 | 목적별 지출비중의 지역 간 변동계수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표 3-5 | 목적별 소비품목의 비중(%) 및 변동계수(2000, 2014년)

		식료품	주류 담배	의류	주거	가정 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2000	전국	15.8	2.5	6.1	19.3	3.8	2.8	12.7	3.3	6.2	6.6	7.6	13.4
	서울	13.5	2.1	5.3	23.7	3.5	2.1	12.1	3.1	6.4	6.4	7.4	14.6
	부산	16.6	2.4	6.9	16.2	3.9	2.8	13.4	3.5	6.0	6.5	9.6	12.4
	대구	15.3	2.5	6.6	16.0	3.8	3.0	14.3	3.7	6.9	5.8	9.4	12.8
	대전	16.4	2.6	6.4	19.9	4.4	2.8	12.0	3.7	6.0	5.3	8.0	12.5
	인천	15.1	2.7	8.3	15.7	3.9	2.9	12.4	3.7	7.1	7.5	7.7	13.1
	광주	15.3	2.4	7.2	17.8	3.8	2.9	12.8	3.4	6.6	7.4	7.5	12.8
	울산	16.7	2.3	7.9	17.0	5.0	2.6	12.6	3.2	6.2	5.6	7.9	13.0
	경기	14.2	2.4	5.1	21.1	4.4	2.7	12.1	3.5	6.7	6.6	8.3	12.9
	강원	17.2	2.8	6.1	16.1	3.8	3.1	13.6	3.3	5.3	8.5	6.6	13.5
	충북	17.6	2.9	6.3	18.0	3.8	3.3	13.4	3.2	5.5	7.5	6.6	12.0
	충남	16.2	2.8	6.1	16.6	2.9	3.1	13.0	2.6	5.9	10.2	6.3	14.3
	전북	17.3	2.8	7.3	17.1	3.8	3.7	13.6	3.3	5.0	7.1	6.4	12.7
	전남	19.7	3.0	6.6	14.9	3.0	3.6	14.1	2.9	5.3	6.1	6.7	14.2
	경북	19.9	2.7	7.2	15.0	3.4	3.1	13.3	2.9	5.3	6.8	6.6	13.8
	경남	19.5	2.6	6.8	17.7	3.5	3.1	12.5	3.2	5.6	5.7	6.2	13.5
	제주	17.2	2.7	5.3	16.6	3.1	3.7	15.8	2.9	5.0	6.2	7.7	13.7
	변동계수	10.6	8.7	13.0	12.7	13.4	13.4	7.1	9.3	10.9	17.3	13.2	5.3
2014	전국	12.7	2.3	5.9	17.5	2.9	5.1	12.4	3.9	9.0	5.8	8.4	14.1
	서울	12.2	2.4	5.1	20.6	2.6	4.0	10.0	4.1	8.3	7.2	8.6	14.9
	부산	12.5	2.7	6.0	15.6	3.2	5.6	12.4	4.0	9.4	5.1	9.1	14.4
	대구	12.2	2.0	6.5	17.6	2.9	5.0	13.3	3.8	9.2	5.5	8.0	14.0
	대전	12.6	2.3	5.9	17.1	3.1	5.4	13.4	4.5	9.1	4.6	8.8	13.3
	인천	12.0	1.9	7.0	15.6	3.0	5.3	12.6	3.8	9.8	6.1	8.0	14.9
	광주	12.5	1.8	6.2	17.6	3.1	4.8	13.1	3.5	9.1	6.7	8.1	13.4
	울산	12.2	2.0	6.3	15.0	3.0	4.7	13.8	3.6	10.2	5.1	10.0	14.1
	경기	13.4	2.1	6.1	18.1	2.9	4.7	12.3	4.1	9.6	5.2	8.2	13.3
	강원	12.8	2.4	5.5	15.8	3.2	5.6	14.0	4.1	8.4	6.6	8.2	13.4
	충북	12.5	2.3	6.0	15.8	3.1	5.9	13.9	3.8	9.0	5.7	8.0	14.0
	충남	13.0	2.5	5.8	15.0	2.9	6.1	13.8	3.1	8.9	6.7	7.8	14.4
	전북	12.7	2.2	6.6	14.8	3.1	7.1	14.0	4.0	7.9	5.8	7.7	14.2
	전남	13.5	2.3	6.2	13.8	3.0	8.1	14.0	3.8	8.4	4.0	7.7	15.1
	경북	12.7	2.4	6.0	15.1	3.2	6.4	13.7	3.8	8.7	5.7	7.9	14.4
	경남	13.1	2.2	5.9	15.6	3.0	5.9	14.6	3.5	8.9	4.3	8.7	14.4
	제주	12.8	2.4	4.6	16.0	2.9	5.6	17.7	3.3	8.3	4.1	7.1	15.3
	변동계수	3.2	9.6	8.7	9.7	4.7	16.8	11.0	8.6	6.5	16.8	7.6	4.3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변동계수'는 저자 직접산출

3. 소결

본 장에서는 소비품목에 대한 지역측면에서의 함의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지역소비 구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4년 기준 기타품목을 제외한 총 11개 품목분류 중 높은 비중을 갖는 품목은 주거, 식료품, 교통, 음식·숙박의 순이었으며, 비교적 필수재로 분류되는 주거, 식료품 등의 비중은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 있는 오락·문화 및 음식·숙박 등의 분야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화에 따르는 보건 등 분야에 있어서는 점차 그 비중이 증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큰 품목은 교육 및 보건분야였으며, 주거, 의료·보건, 교통 등 특정 품목에서는 과대 이상치를 보이는 몇몇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품목 중 지역차원의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소비 주체의 이동을 통해 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부문이다. 이는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의 재화를 소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재화는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지만, 지역경제에 있어 일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락·문화 및 음식·숙박의 부문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의 소비구조 분석을 보면, 오락·문화 및 음식·숙박의 분야는 국가적, 지역적으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락·문화의 부문은 전 지역에서 고르게 그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서비스 및 여행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문은 지역의 특수한 지역자원을 소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하여 소비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소비의 객체인 다양한 재화가 특정지역으로 집적하여 지역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재화는 비록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으나,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재화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 가정용품 등의 품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품목은 비교적 필수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 가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품목은 각각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를 주로 소매시장을 통해 이루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의 확장성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소비시장의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비비중의 크기 및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미가 있으나, 해당 소비지출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문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주거비, 보건, 교육 등의 지출은 이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타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등 큰 주거비를 부담하는 지역에서의 비용 경감 및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타 부문으로의 소비력의 전환 동력 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건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남·전북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은 보편적인 의료복지의 차원에서도 해소될 필요가 있는 측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소비품목은 국가 및 지역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품목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소비항목에 대한 안정화 및 보편화 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CHAPTER

소비 중심지 분석

1. 소비자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 73

2. 소비재의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 83

3. 소결 | 94

소비 중심지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지역차원의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공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동 및 상품의 이동에 따른 소비중심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소비자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1) 소비자 집종의 의미

국가경제의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경우 지역민의 소비지출을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서의 소비지출을 국가 소비지출과 같이 분석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국민총소비를 의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역에서 소비하더라도 국내총생산과의 범위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지역민의 총 소비를 의미하므로,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이외에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민간소비 지출이 반드시 해당지역 내에서만 소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소비자 및 상품의 이동을 통해 지역의 소비중심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소비자의 이동에 따른 소비중심지 및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단위에서의 소비는 소비자가 이동함으로써 발생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가 집중되는 소비중심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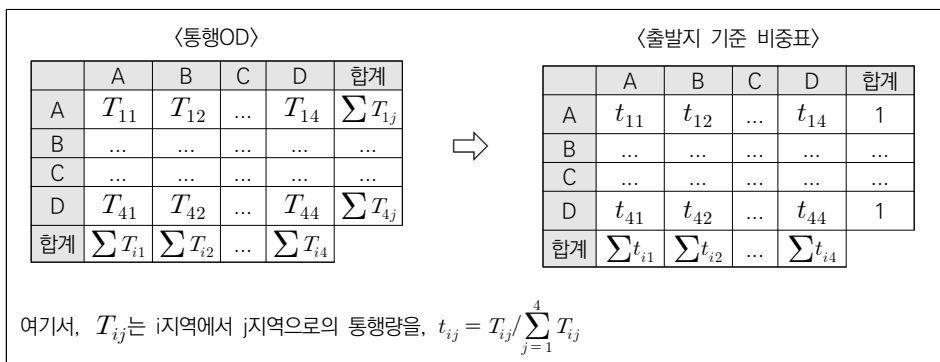
한다. 따라서 소비중심지를 분석함에 있어 소비자의 지역 간 통행패턴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비재의 이동에 따른 중심지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단위에서의 지역민의 소비는 국가단위에서의 소비에 비해, 상품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정품목을 해당지역에서 자급하거나, 타 지역에 의존하는 경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비중심지에 물품을 공급하는 지역은 재화의 생산을 통해 소비시장과 연계 혹은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품의 이동에 따른 패턴을 검토하는 과정을 분석의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분석방법

(1) 소비중심지 분석방법

소비자의 이동을 통한 소비중심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KTDB에서 소비와 관련된 통행패턴인 여가·친교·오락 및 쇼핑통행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출지 기준 통행 비중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중심지의 선별은 유출지 기준 5%이상 유입하는 시·군을 중심지로 설정하고, 더 많은 유출지와 연결된 중심지를 더 강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1 | 비중표 작성 과정



(2) 소비중심지 위계분석 방법

중심지의 위계성 및 이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도시별 연계 시·군수를 바탕으로 Zipf's Law의 순위-규모(rank-size) 분포를 분석하였다.

$$N_r = N_1 / r^q \quad \text{식(4-1)}$$

$$\ln N_r = \ln N_1 - q \ln r \quad \text{식(4-2)}$$

여기서 N 은 네트워크 수준, N_r 은 순위 r 인 시·군의 네트워크 정도를, N_1 은 최상위 네트워크 수준을 보이는 시군의 네트워크 정도, r 은 순위, q 는 계수를 의미한다.

3) 분석결과

(1) 통행패턴 분석을 통한 연결중심성의 산출

우선적으로 여가·친교·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울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이외에 비교적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 수원, 충남 천안, 경남 전주, 창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을 각각 중심지로 정의하고, 이 중심지역과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 의존지역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서 의존지역이란 중심지역으로 향하는 타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 강원도, 충북, 충남 및 세종시를 비롯해 전남, 경남 일부 시·군까지 포함하는 광역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적인 연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전남의 여수, 광양 등 광양만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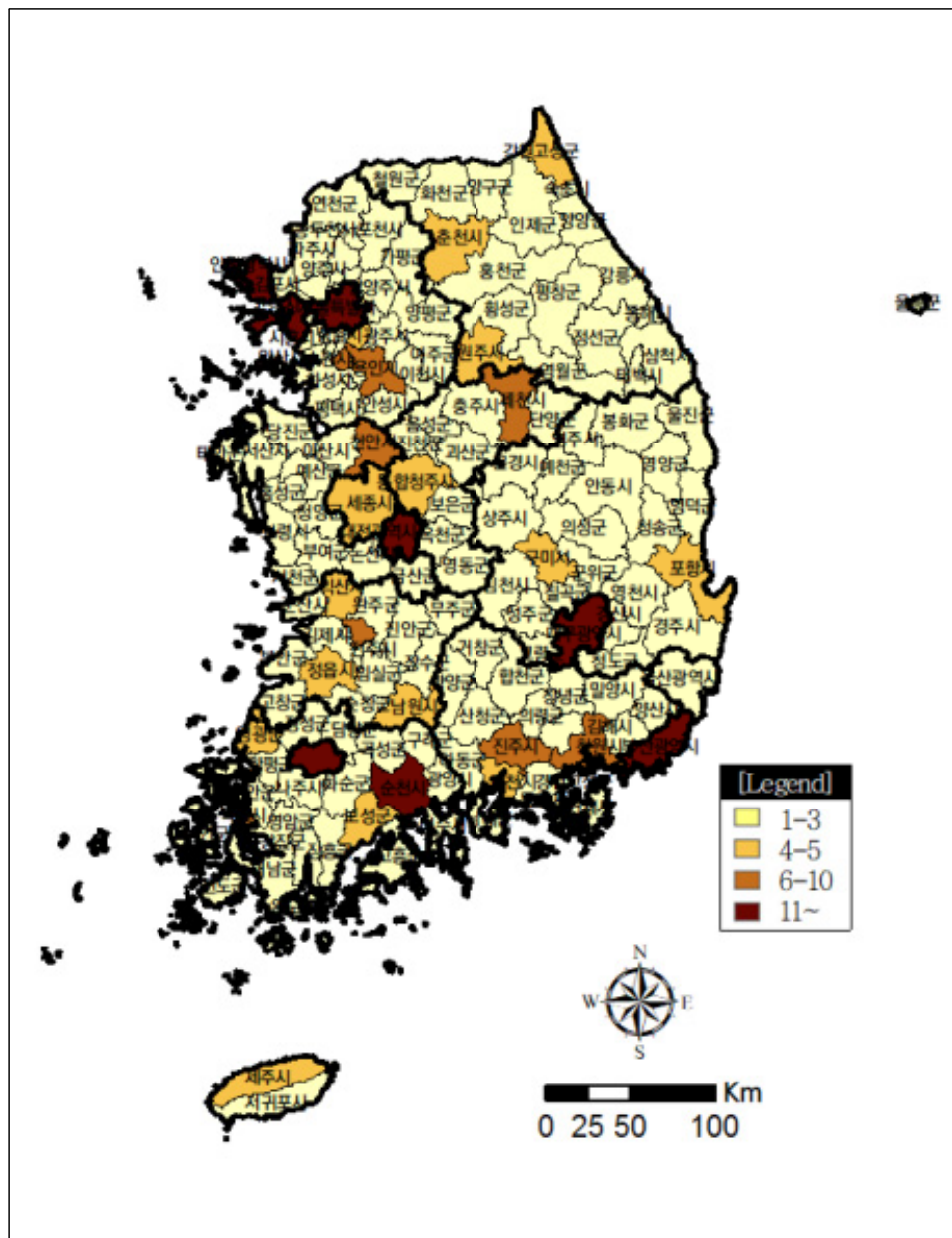
다수의 시·군에서의 여가 등 통행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북 전주의 경우 임실, 순창, 남원, 진안, 장수 등 전북 내에서 핵심적인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쇼핑통행의 경우 여가·친교·오락통행과 유사하게 광역시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광역시 이외에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지역이 경남 창원, 진주, 충북 청주, 전북 정읍, 남원 등으로 산출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통행을 통한 연계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수도권인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연결성을 가지며, 광주의 경우 전남에, 대전의 경우 충북, 전북, 세종과 일부연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남원, 경남 진주, 창원 등은 해당 도내에서의 지역적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의 경우 뚜렷한 중심지가 보이지 않으나, 주로 지역내의 춘천, 원주, 속초, 태백 등으로 쇼핑통행이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가·친교·오락통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성을 가지는 특·광역시를 비롯하여, 비교적 높은 연결성을 가지는 다수의 지역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쇼핑통행은 여가·친교·오락통행에 비해 특·광역시 위주의 소수의 지역과의 통행이 발생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성장전략과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가·친교·오락통행과 같이 다수의 소비중심지가 나타나는 경우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성 있는 소비재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쇼핑통행과 같이 소수의 특정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적경제의 극대화 전략을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 여가·친교·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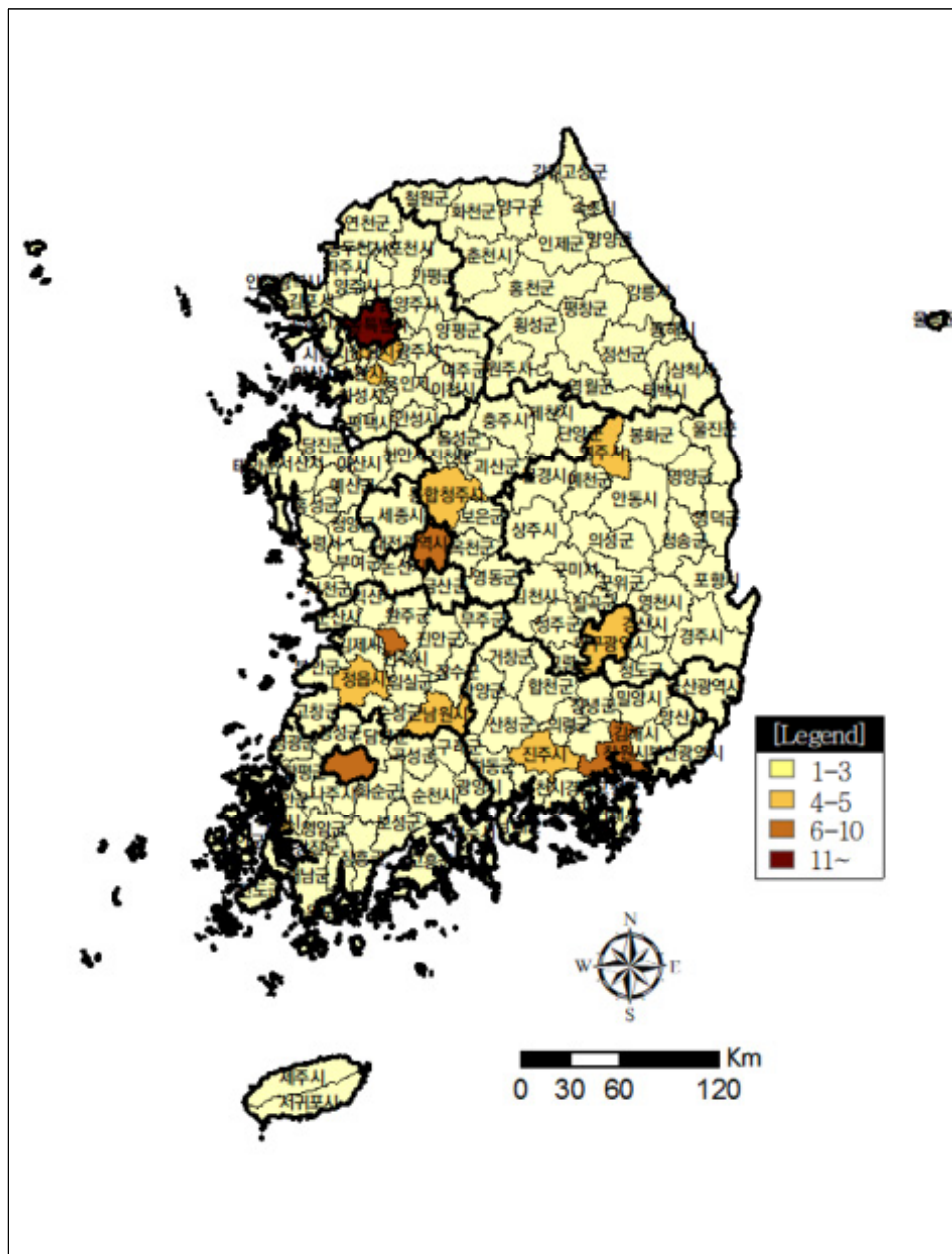
출처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표 4-1 | 여가·친교·오락통행의 중심지 및 연계지역

순위	중심지역	의존지역 (→중심지역)
1	서울	인천/ (경기)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김포, 광주, 양주, 포천, 양평/ (강원)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구, 인제/ (충북)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천안, 공주, 금산, 청양, 당진/ (전남)신안/ (경남)함양/ 세종
2	광주	(전북)정읍, 김제, 순창, 고창/ (전남)목포,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3	대구	(경북)김천, 안동, 영주,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칠곡, 봉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	부산	울산/ (전북)진안/ (전남)광양/ (경북)군위, 칠곡/ (경남)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5	대전	(충북)옥천, 증평/ (충남)천안,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전북)무주/세종
6	인천	(경기)부천, 하남, 김포, 가평, 속초/ (강원) 인제/ (충북)청주, 영동, 증평/ (전북)군산
7	전남 순천시	(전남)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진도
8	전북 전주시	(전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9	경남 진주시	(경남)사천,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10	경기 용인시	(경기)수원, 부천, 동두천, 시흥, 의왕, 화성

주 : 연계지역 통행량의 5%이상 통행하는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선정, '순위'는 연계지역 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림 4-3 | 쇼핑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



출처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표 4-2 | 쇼핑통행의 중심지 및 연계지역

순위	중심지역	의존지역 (→중심지역)
1	서울	인천/ (경기)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파주, 김포, 광주, 양주, 연천
2	광주	(전남)나주, 담양, 보성, 화순, 장흥, 영암, 함평, 영광, 장성
3	대전	(충북)충주, 옥천, 진천, 공주, 계룡, 금산/ (전북)무주/ 세종
4	전북 전주시	(전북)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5	경남 창원시	(경남)사천, 김해, 밀양, 의령, 함안
6	대구	(경북)경산, 청도, 칠곡/ (경남)거창
7	경기 수원시	(경기)과천, 오산, 용인, 화성
8	충북 청주시	(충북)보은, 증평, 진천, 괴산
9	전북 남원시	(전북)장수, 임실, 순창/ (전남)곡성
10	전남 목포시	(전남)영암, 무안, 진도, 신안

주 : 연계지역 통행량의 5%이상 통행하는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선정, '순위'는 연계지역 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

4) 소비중심지의 위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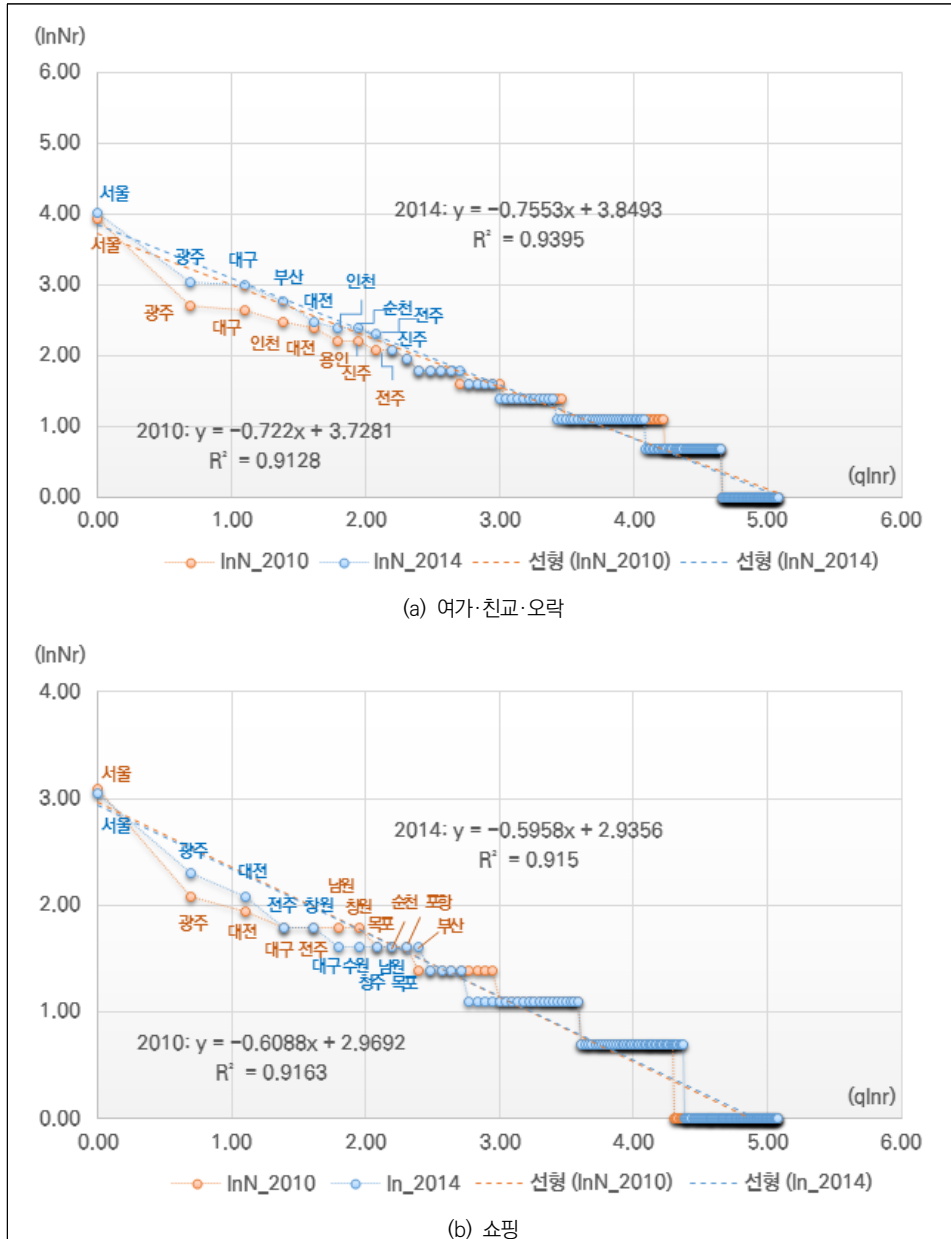
소비자의 쇼핑 및 여가·친교·오락 통행에 의한 연결중심성의 위계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Zipf's Law의 순위-규모(rank-size) 분포를 분석하였다.

우선 여가·오락·문화 통행의 경우 순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인천, 전남 순천, 전북 전주, 경남 진주, 경기 용인 등의 상위 10개 도시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차 순위인 광주 및 대구에 비해 월등한 중심성을 가지면서 1계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2순위인 광주에서부터 진주, 용인 등의 10위까지의 도시가 2계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연결중심성의 추세변화 양상을 선형회귀 식의 값을 통해 파악하면, '14년의 절편(1위 도시의 연결중심성)은 '10년도에 비해 커졌으며, 기울기(위계의 수직성)의 값 또한 더욱 가파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가·오락 통행의 경우 많은 수의 중소도시가 일정수준의 연결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정부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쇼핑통행의 경우 기존에 큰 중심성을 보이는 서울이 여전히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 순위인 광주, 대전의 경우 '10년에 비해 '14년의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연결중심성의 추세변화의 양상을 선형회귀 식의 값을 통해 파악하면, '14년의 절편(1위 도시의 연결중심성)은 '10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기울기(위계의 수직성) 또한 완만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상위 위계를 가지는 도시(광주, 대전 등)는 그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하위 도시의 경우 이의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쇼핑통행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전 등의 상위 도시의 경우 고차 위계성을 가지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지역의 중소도시의 경우 연결중심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4 | 각 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의 순위-규모(Rank-Size) 분포



주 : 붉은선은 2010년도, 파란선은 2014년도
 자료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작성

2. 소비재의 이동에 따른 중심지 분석

1) 소비재화 집중지역 분석의 의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소비자가 많이 집중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화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소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재화를 이입하고 이를 이출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정지역으로 상품이 집중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 의존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 도 있으나, 해당지역에서 상품의 판매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즉 소비수요가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집중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이출지 및 이입지의 양 측면에서 모두 의의를 가지는데, 소비재 및 서비스제품이 집중하는 이입지의 측면에서는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중심지의 의미를 지니며, 이출지의 측면에서는 소비시장으로 재화를 이출할 수 있는 생산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소비시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타 지역의 측면에서는 해당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측면에서 소비시장에 의존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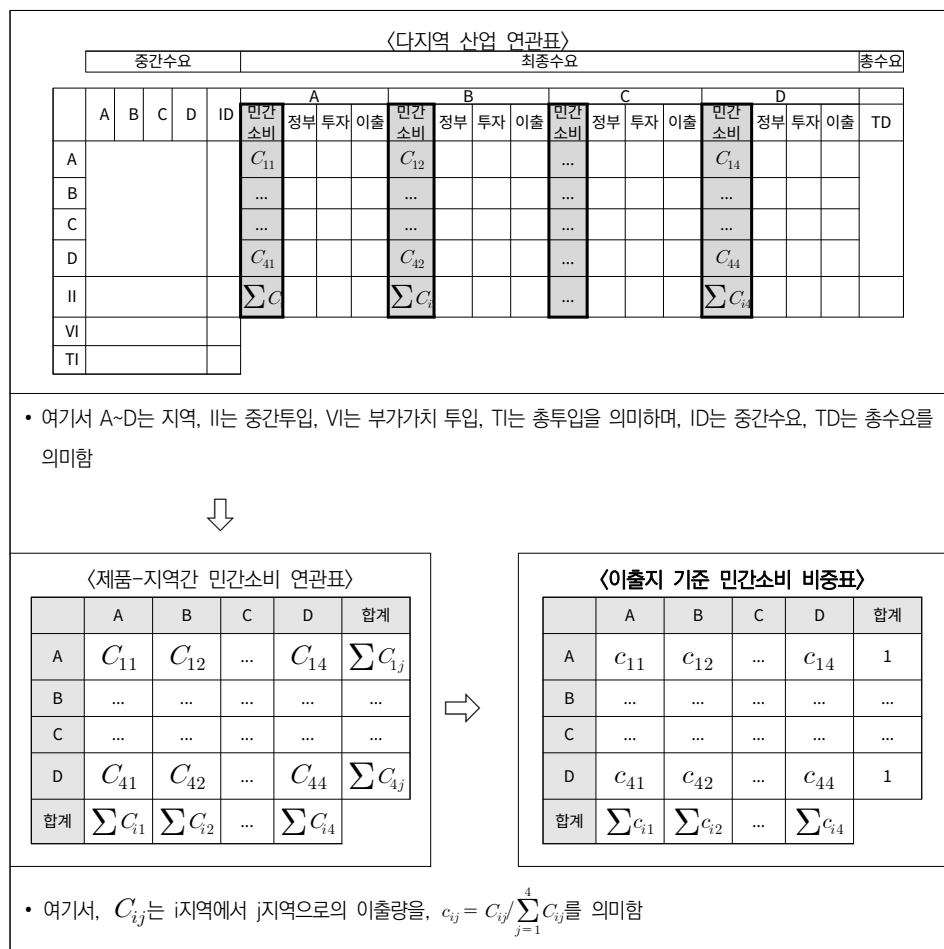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지역에서의 소비중심성을 지역내 총 소비량, 타 지역으로 부터의 이입 및 타 지역으로의 이출 등 소비재화의 지역간 교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소비중심지 분석방법

소비재화의 교류를 통해 특정지역으로 소비재가 집중하는 지역, 즉, 타 지역으로부터 소비재가 많은 비중으로 유입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재 및 서비스제품의 이동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표(다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지역 산업연관표 중 민간소비지출액 만을 발취하여 ‘제품별-지역간 민간소비 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산출된 ‘제품별-지역간 민간소비 연관표’를

유출지의 총합으로 나누어 ‘이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작성하였으며, 산출된 값을 유입지 기준으로 합산하여 연계값을 도출하였다. 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5 | 이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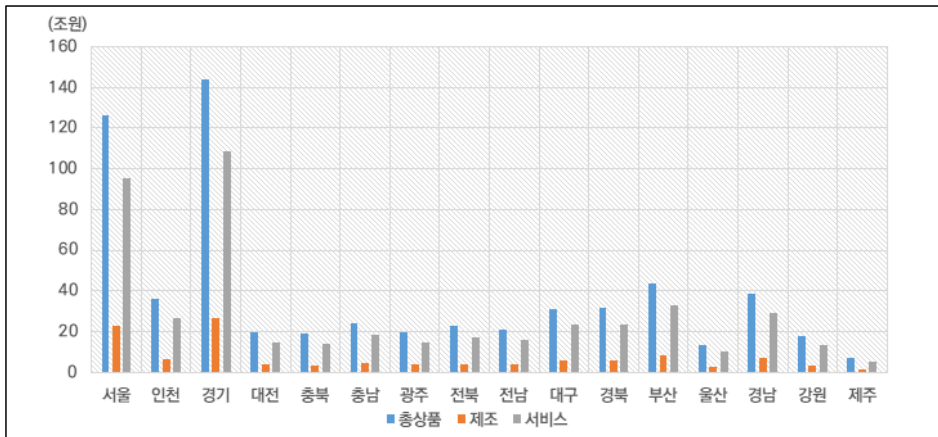


3) 분석결과

(1) 소비재의 이입 및 이출현황

지역의 소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으나, 본 장에서는 소비재의 총량 및 비율적 측면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비의 양이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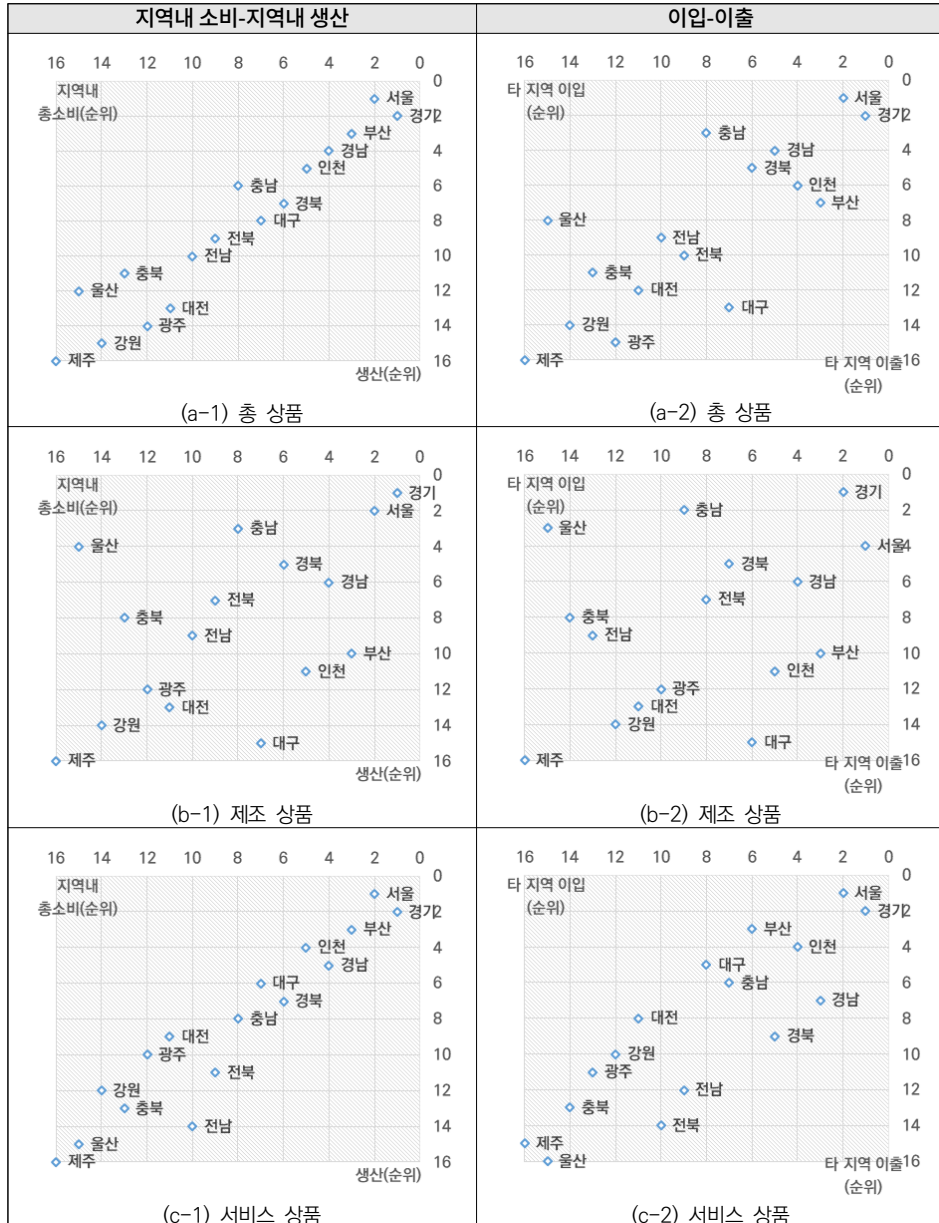
그림 4-6 | 시·도별 소비금액(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중 '지역표'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계산

총량의 관점에서 지역내 총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흥미롭게도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도 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지역내에서 소비하거나 타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소비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간 이입량-이출량을 비교하면 이입이 많은 지역이 이출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등이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재화를 이입해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풍부한 제품을 이출하기도 하였다.

그림 4-7 | 시·도별 소비-생산 및 이입-이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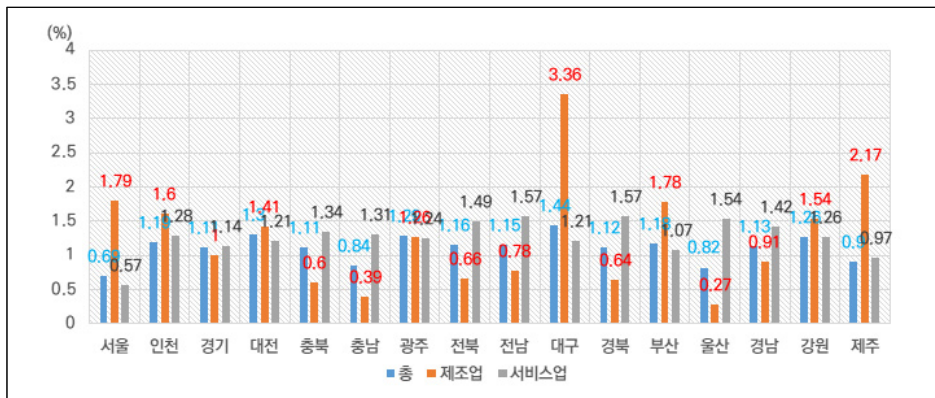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중 '지역표'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계산

이를 종합하면, 서울, 경기, 부산 등은 규모의 측면에서 많은 소비재화를 소비함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 및 이출재화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재화가 집중되는 지역은 이의 재화를 소비함과 동시에 타 지역에 소비재화를 공급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소비 및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서비스 상품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비율적 측면에서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소비되는 양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위해 ‘소비지수’ (해당지역 소비/해당지역 생산)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총 상품 및 제조 상품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으며, 서비스 상품의 경우 경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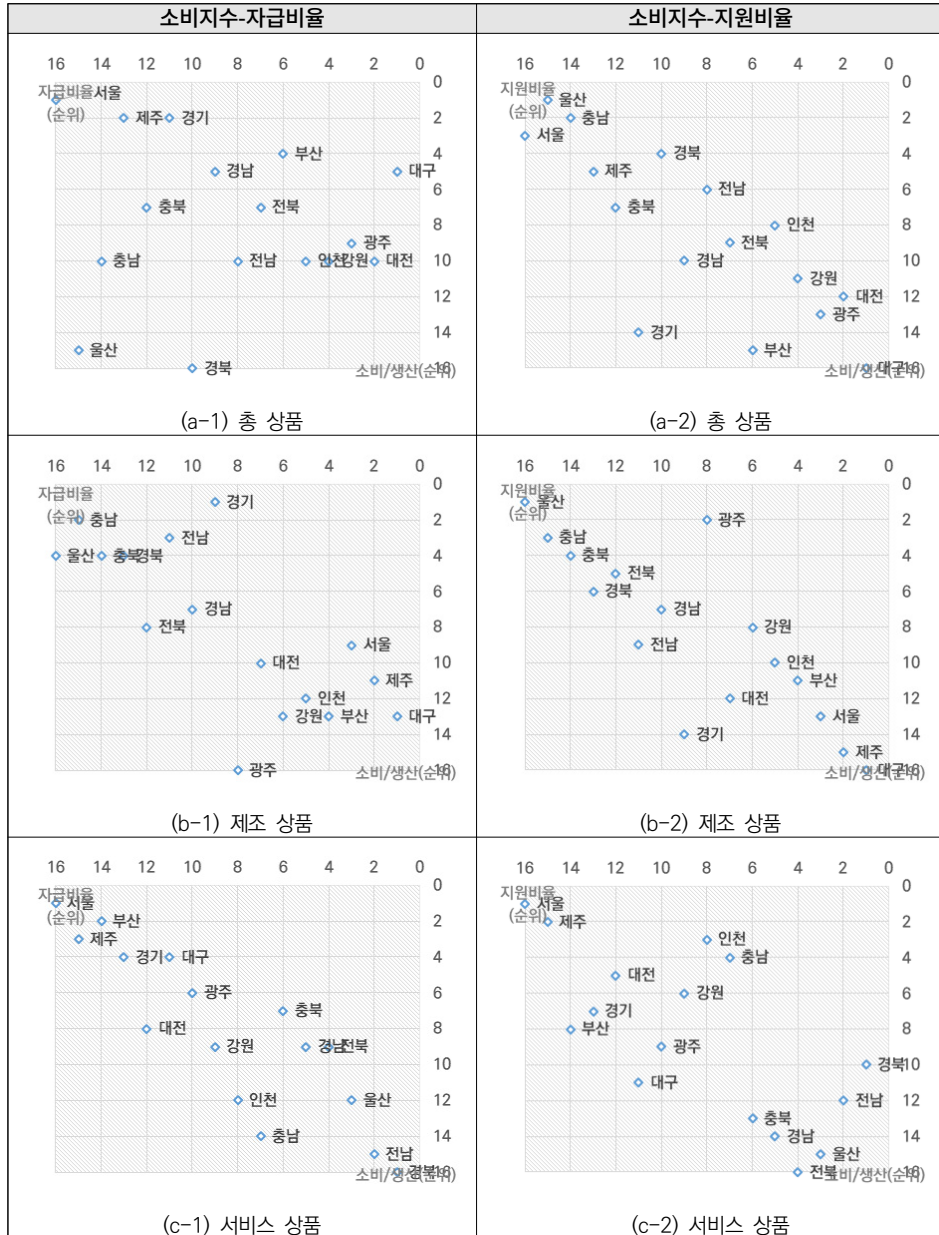
그림 4-8 | 시·도별 소비지수(단위: %)



자료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중 ‘지역표’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계산

소비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지역내 생산의 기능보다 소비의 기능이 더욱 발달하였다는 측면에서 외부의 의존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즉,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총 소비 중 자급하는 비율인 ‘자급비율’ (자급/소비)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지역의 소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율을 타 지역에서 이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지수가 높을수록 타 지역에 지원하는 비율인 ‘지원비율’ (이출/생산)도 낮게 산출되었다.

그림 4-9 | 시·도별 소비지수-자급비율 및 소비지수-지원비율 순위



자료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중 '지역표'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계산

표 4-3 | 지역소비, 지역생산, 지역간 재화이동량 및 자금율, 지원율 (단위 : 억원)

	지역	지역내 총소비량 ①	자금량 ②	생산량 ③	타 지역 이입량 (4= 2-①)	타 지역 이출량 (5= 3-②)	소비/생산 ⑥=①/③	자금율 (자금량/ 총소비량) ⑦=②/①	지원율 (타지역 공급량/ 생산량) ⑧=⑤/③
총 산업	서울	1,262,754	824,159	1,824,831	438,595	1,000,672	0.69	0.65	0.55
	인천	359,639	164,251	303,179	195,388	138,928	1.19	0.46	0.46
	경기	1,437,578	801,689	1,292,044	635,890	490,355	1.11	0.56	0.38
	대전	198,338	91,889	152,262	106,448	60,373	1.30	0.46	0.40
	충북	190,382	92,143	171,451	98,239	79,308	1.11	0.48	0.46
	충남	243,429	112,705	291,076	130,724	178,371	0.84	0.46	0.61
	광주	193,728	90,953	149,800	102,775	58,847	1.29	0.47	0.39
	전북	225,256	109,037	194,773	116,219	85,736	1.16	0.48	0.44
	전남	211,640	96,532	183,768	115,108	87,236	1.15	0.46	0.47
	대구	308,809	153,938	214,089	154,870	60,151	1.44	0.50	0.28
	경북	313,809	134,505	279,672	179,304	145,167	1.12	0.43	0.52
	부산	436,771	239,556	369,135	197,215	129,579	1.18	0.55	0.35
	울산	136,151	60,307	166,907	75,844	106,600	0.82	0.44	0.64
	경남	384,117	192,764	338,897	191,353	146,133	1.13	0.50	0.43
제조업	강원	180,655	83,692	143,138	96,963	59,446	1.26	0.46	0.42
	제주	70,475	39,220	78,510	31,255	39,290	0.90	0.56	0.50
	서울	227,985	38,075	127,680	189,910	89,605	1.79	0.17	0.70
	인천	65,540	8,478	40,986	57,062	32,508	1.60	0.13	0.79
	경기	267,532	80,108	266,237	187,423	186,129	1.00	0.30	0.70
	대전	37,577	6,002	26,558	31,575	20,556	1.41	0.16	0.77
	충북	35,329	7,318	58,606	28,011	51,288	0.60	0.21	0.88
	충남	46,072	12,338	118,601	33,734	106,263	0.39	0.27	0.90
	광주	36,527	2,834	29,079	33,692	26,245	1.26	0.08	0.90
	전북	42,182	8,060	64,399	34,121	56,339	0.66	0.19	0.87
	전남	39,451	9,846	50,888	29,606	41,042	0.78	0.25	0.81
	대구	58,160	7,212	17,312	50,947	10,100	3.36	0.12	0.58
	경북	60,079	12,412	93,211	47,667	80,799	0.64	0.21	0.87
	부산	81,540	9,489	45,841	72,051	36,352	1.78	0.12	0.79
서비스업	울산	26,260	5,395	97,190	20,866	91,795	0.27	0.21	0.94
	경남	71,548	14,108	78,548	57,440	64,440	0.91	0.20	0.82
	강원	34,428	4,119	22,293	30,309	18,174	1.54	0.12	0.82
	제주	13,386	1,962	6,166	11,424	4,204	2.17	0.15	0.68
	서울	954,075	778,027	1,687,952	176,048	909,925	0.57	0.82	0.54
	인천	266,675	137,103	209,156	129,572	72,053	1.28	0.51	0.34
	경기	1,087,753	670,194	951,427	417,559	281,233	1.14	0.62	0.30
	대전	149,067	84,209	123,410	64,858	39,201	1.21	0.56	0.32
	충북	139,420	80,269	103,856	59,151	23,587	1.34	0.58	0.23
	충남	182,902	91,728	139,390	91,174	47,662	1.31	0.50	0.34
	광주	145,801	85,887	117,938	59,914	32,051	1.24	0.59	0.27
	전북	169,796	92,691	114,262	77,105	21,571	1.49	0.55	0.19
	전남	160,453	77,269	102,053	83,184	24,784	1.57	0.48	0.24
	대구	232,310	143,253	192,191	89,057	48,938	1.21	0.62	0.25
	경북	235,899	111,473	149,886	124,426	38,413	1.57	0.47	0.26
	부산	328,733	220,483	308,160	108,251	87,677	1.07	0.67	0.28
	울산	101,380	51,527	65,907	49,853	14,380	1.54	0.51	0.22
	경남	288,708	158,769	203,661	129,939	44,892	1.42	0.55	0.22
	강원	136,417	74,455	108,666	61,962	34,211	1.26	0.55	0.31
	제주	53,917	34,463	55,391	19,454	20,928	0.97	0.64	0.38

자료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중 '지역표'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계산

(2) 제품 및 서비스의 이출-이입을 통한 중심성의 판단

이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로의 상품 이출이 높으며, 서울 및 경기로의 이출을 제외하면 자გი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이출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상품은 대략적으로 30~60%가량이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36%), 충남(39%)이 가장 낮은 자გი지역 소비율 보이고, 대구(72%), 부산(65%), 경기(62%) 등이 높은 자გი지역 소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으로의 이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 경기로의 이출이 많았으며, 이외에 해당권역과 인접한 지역에 이출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은 충남으로, 광주전남은 전남으로, 대구는 경북으로, 울산은 부산·경북·경남, 부산은 경남 등으로 이출하는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농림·수산물·광산품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로의 상품 이출이 높으며, 부산 및 인천, 대구로도 높은 이출을 보이고 있었다. 농림·수산물·광산품의 경우 자기 지역 소비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서울의 경우 98%인 반면, 제주(10%), 전남(21%), 경북(22%)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같은 지역은 농림·수산물·광산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비중을 이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 전남, 경북 등은 필요한 소비량 중 많은 비중을 지역 내 생산품에서 해소함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이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지역에서 이출하는 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를 제외하고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제품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으로 상품 이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략적으로 20~30% 가량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서울 및 경기에 이출하는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서울, 경기, 부산의 제조업 제품 소비시장이 전국적인 소비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로의 서비스상품에 대한 이출이 있으나, 타 상품부문에 비해 서울, 경기로의 이출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서비스 상품의 경우 대략적으로 60~70% 가량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46%), 제주(62%), 인천(66%)등이 낮은 자გი지역 소비율을 보이는 반면, 전북(81%), 울산(78%), 경남(78%)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타 지역으로의 이출보다는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서울이 소비시장을 형성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비스제품을 공급하는 생산지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 총 상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소비 생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서울	0.45	0.05	0.20	0.02	0.02	0.03	0.02	0.02	0.02	0.03	0.03	0.03	0.01	0.04	0.02	0.01	1.00
인천	0.15	0.54	0.09	0.02	0.02	0.03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2	0.02	0.00	1.00
경기	0.13	0.04	0.62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2	0.02	0.01	1.00
대전	0.09	0.01	0.05	0.60	0.02	0.08	0.01	0.02	0.01	0.02	0.02	0.03	0.01	0.01	0.01	0.00	1.00
충북	0.12	0.03	0.09	0.03	0.54	0.04	0.01	0.01	0.01	0.02	0.04	0.02	0.01	0.02	0.01	0.00	1.00
충남	0.11	0.03	0.17	0.05	0.03	0.39	0.02	0.03	0.02	0.03	0.03	0.03	0.01	0.04	0.02	0.01	1.00
광주	0.04	0.01	0.08	0.02	0.01	0.01	0.61	0.04	0.12	0.01	0.01	0.01	0.00	0.01	0.02	0.00	1.00
전북	0.11	0.03	0.09	0.02	0.01	0.02	0.02	0.56	0.03	0.02	0.01	0.03	0.01	0.02	0.01	0.01	1.00
전남	0.09	0.02	0.09	0.01	0.01	0.02	0.08	0.03	0.53	0.02	0.02	0.03	0.01	0.02	0.01	0.01	1.00
대구	0.03	0.01	0.03	0.01	0.01	0.01	0.01	0.01	0.01	0.72	0.12	0.02	0.01	0.03	0.00	0.00	1.00
경북	0.10	0.03	0.13	0.01	0.01	0.02	0.02	0.01	0.01	0.08	0.48	0.04	0.02	0.03	0.02	0.00	1.00
부산	0.05	0.02	0.0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65	0.04	0.10	0.01	0.00	1.00
울산	0.12	0.03	0.14	0.02	0.02	0.03	0.02	0.02	0.02	0.04	0.05	0.06	0.36	0.05	0.01	0.01	1.00
경남	0.08	0.01	0.06	0.01	0.01	0.01	0.01	0.01	0.01	0.04	0.03	0.11	0.02	0.57	0.01	0.00	1.00
강원	0.12	0.02	0.11	0.01	0.02	0.01	0.01	0.01	0.01	0.02	0.03	0.02	0.00	0.01	0.58	0.00	1.00
제주	0.09	0.02	0.10	0.01	0.01	0.01	0.03	0.05	0.04	0.02	0.01	0.04	0.02	0.02	0.02	0.50	1.00
합계 (연계)	1.86	0.90	2.09	0.87	0.76	0.72	0.89	0.87	0.86	1.11	0.96	1.18	0.56	1.01	0.79	0.57	-

주 : 음영은 5%이상 지역을 의미

표 4-5 | 농림·수산·광산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소비 생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서울	0.98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인천	0.06	0.64	0.14	0.02	0.02	0.01	0.02	0.02	0.00	0.02	0.00	0.01	0.01	0.02	0.01	0.00	1.00
경기	0.05	0.01	0.86	0.01	0.00	0.00	0.01	0.00	0.00	0.01	0.00	0.02	0.00	0.00	0.00	0.00	1.00
대전	0.10	0.02	0.07	0.69	0.00	0.00	0.01	0.00	0.00	0.02	0.01	0.03	0.01	0.01	0.01	0.00	1.00
충북	0.15	0.04	0.11	0.03	0.48	0.01	0.02	0.01	0.00	0.04	0.01	0.05	0.01	0.02	0.01	0.00	1.00
충남	0.21	0.06	0.16	0.04	0.01	0.27	0.03	0.01	0.01	0.05	0.02	0.07	0.02	0.03	0.02	0.00	1.00
광주	0.17	0.04	0.13	0.02	0.01	0.01	0.46	0.00	0.00	0.04	0.01	0.06	0.02	0.02	0.02	0.00	1.00
전북	0.18	0.05	0.13	0.03	0.01	0.01	0.03	0.38	0.00	0.04	0.01	0.06	0.02	0.02	0.02	0.00	1.00
전남	0.22	0.06	0.19	0.04	0.02	0.01	0.03	0.01	0.21	0.05	0.02	0.07	0.02	0.03	0.02	0.00	1.00
대구	0.13	0.03	0.12	0.02	0.01	0.01	0.02	0.01	0.00	0.55	0.01	0.04	0.01	0.02	0.01	0.00	1.00
경북	0.23	0.06	0.18	0.03	0.01	0.01	0.03	0.01	0.01	0.05	0.22	0.08	0.02	0.03	0.02	0.00	1.00
부산	0.09	0.04	0.27	0.04	0.03	0.02	0.04	0.03	0.01	0.03	0.01	0.32	0.01	0.04	0.02	0.00	1.00
울산	0.09	0.02	0.10	0.02	0.01	0.01	0.02	0.01	0.00	0.02	0.01	0.03	0.65	0.01	0.01	0.00	1.00
경남	0.21	0.05	0.18	0.03	0.01	0.01	0.03	0.01	0.01	0.05	0.02	0.07	0.02	0.29	0.02	0.00	1.00
강원	0.23	0.06	0.17	0.03	0.01	0.01	0.03	0.01	0.01	0.05	0.02	0.08	0.02	0.03	0.25	0.00	1.00
제주	0.24	0.07	0.23	0.04	0.02	0.01	0.04	0.02	0.01	0.06	0.02	0.07	0.02	0.04	0.03	0.10	1.00
합계 (연계)	3.35	1.27	3.03	1.08	0.65	0.42	0.81	0.52	0.27	1.09	0.38	1.05	0.87	0.62	0.48	0.12	-

주 : 음영은 5%이상 지역을 의미

표 4-6 | 소비재(제조업 제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소비 생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서울	0.30	0.06	0.22	0.03	0.03	0.03	0.03	0.03	0.03	0.05	0.04	0.05	0.02	0.05	0.03	0.01	1.00
인천	0.17	0.21	0.19	0.04	0.02	0.04	0.02	0.02	0.03	0.04	0.04	0.07	0.02	0.03	0.05	0.01	1.00
경기	0.21	0.07	0.30	0.02	0.03	0.03	0.04	0.03	0.03	0.04	0.03	0.06	0.01	0.05	0.02	0.01	1.00
대전	0.21	0.04	0.12	0.23	0.03	0.05	0.02	0.03	0.03	0.04	0.04	0.08	0.02	0.03	0.04	0.01	1.00
충북	0.25	0.06	0.16	0.04	0.12	0.06	0.02	0.02	0.02	0.03	0.09	0.04	0.01	0.04	0.02	0.01	1.00
충남	0.14	0.04	0.29	0.03	0.04	0.10	0.02	0.04	0.02	0.04	0.04	0.06	0.02	0.07	0.03	0.01	1.00
광주	0.11	0.02	0.28	0.06	0.03	0.04	0.10	0.04	0.09	0.01	0.02	0.02	0.01	0.05	0.11	0.01	1.00
전북	0.25	0.06	0.18	0.03	0.02	0.03	0.03	0.13	0.04	0.05	0.03	0.08	0.02	0.05	0.01	0.02	1.00
전남	0.14	0.04	0.19	0.02	0.03	0.03	0.05	0.06	0.19	0.03	0.04	0.07	0.02	0.04	0.02	0.02	1.00
대구	0.09	0.02	0.07	0.02	0.01	0.01	0.02	0.03	0.01	0.42	0.12	0.09	0.03	0.05	0.02	0.00	1.00
경북	0.16	0.05	0.28	0.02	0.01	0.03	0.04	0.03	0.01	0.07	0.13	0.05	0.03	0.05	0.03	0.01	1.00
부산	0.16	0.08	0.13	0.02	0.02	0.04	0.03	0.03	0.03	0.04	0.06	0.21	0.03	0.10	0.02	0.01	1.00
울산	0.18	0.04	0.22	0.03	0.03	0.04	0.03	0.04	0.02	0.06	0.07	0.07	0.06	0.08	0.02	0.01	1.00
경남	0.20	0.03	0.17	0.03	0.01	0.02	0.02	0.01	0.01	0.07	0.06	0.14	0.03	0.18	0.02	0.01	1.00
강원	0.20	0.04	0.27	0.04	0.03	0.02	0.02	0.02	0.01	0.04	0.02	0.05	0.01	0.03	0.18	0.01	1.00
제주	0.10	0.03	0.29	0.01	0.01	0.01	0.01	0.02	0.02	0.04	0.02	0.05	0.02	0.04	0.01	0.32	1.00
합계 (연계)	2.88	0.88	3.34	0.66	0.47	0.60	0.50	0.59	0.60	1.07	0.86	1.18	0.36	0.94	0.63	0.45	-

주 : 음영은 5%이상 지역을 의미

표 4-7 | 서비스 제품에 대한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소비 생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서울	0.46	0.05	0.20	0.02	0.02	0.03	0.02	0.02	0.02	0.03	0.03	0.03	0.01	0.03	0.02	0.01	1.00
인천	0.07	0.66	0.09	0.01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2	0.01	0.00	1.00
경기	0.10	0.03	0.70	0.01	0.01	0.02	0.01	0.01	0.01	0.01	0.02	0.02	0.01	0.02	0.01	0.00	1.00
대전	0.06	0.01	0.04	0.68	0.02	0.09	0.01	0.01	0.01	0.01	0.02	0.02	0.00	0.01	0.01	0.00	1.00
충북	0.05	0.01	0.04	0.02	0.77	0.03	0.01	0.01	0.01	0.01	0.02	0.01	0.00	0.01	0.01	0.00	1.00
충남	0.05	0.02	0.08	0.07	0.02	0.66	0.01	0.02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0	1.00
광주	0.02	0.01	0.03	0.01	0.01	0.01	0.73	0.04	0.12	0.00	0.01	0.01	0.00	0.01	0.00	0.00	1.00
전북	0.04	0.01	0.04	0.01	0.01	0.01	0.02	0.81	0.02	0.01	0.01	0.01	0.00	0.01	0.00	0.01	1.00
전남	0.03	0.01	0.03	0.00	0.01	0.01	0.10	0.02	0.76	0.00	0.01	0.01	0.00	0.01	0.00	0.00	1.00
대구	0.02	0.01	0.02	0.00	0.01	0.01	0.00	0.01	0.00	0.75	0.12	0.02	0.01	0.02	0.00	0.00	1.00
경북	0.03	0.01	0.03	0.00	0.01	0.01	0.00	0.01	0.01	0.09	0.74	0.02	0.01	0.02	0.00	0.00	1.00
부산	0.03	0.01	0.03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2	0.72	0.04	0.11	0.00	0.00	1.00
울산	0.04	0.01	0.03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2	0.03	0.78	0.03	0.00	0.00	1.00
경남	0.03	0.01	0.02	0.00	0.00	0.01	0.00	0.00	0.01	0.01	0.02	0.09	0.02	0.78	0.00	0.00	1.00
강원	0.08	0.02	0.07	0.01	0.02	0.01	0.00	0.01	0.01	0.02	0.03	0.02	0.00	0.01	0.69	0.00	1.00
제주	0.05	0.01	0.05	0.01	0.01	0.01	0.03	0.06	0.05	0.01	0.01	0.02	0.02	0.01	0.01	0.62	1.00
합계 (연계)	1.16	0.86	1.50	0.87	0.93	0.93	0.95	1.06	1.08	0.99	1.11	1.05	0.94	1.10	0.80	0.67	-

주 : 음영은 5%이상 지역을 의미

3. 소결

본 장에서는 지역차원의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공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동 및 상품의 이동에 따른 소비중심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소비자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자원이 분포한 지역으로 직접 이동을 하는 형태와, 이동이 용이한 상품이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기 위해 상품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종의 지역 관광자원의 소비를 위한 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특정 소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쇼핑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KTDB의 여가·친교·오락 통행 및 쇼핑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다목적의 이동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정 부분의 소비패턴은 누락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목적으로 언급된 최소한의 이동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여가 친교 오락 통행의 경우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지역이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의 특·광역시 뿐 아니라 전남 순천, 전북 전주 등의 지역 중소도시의 연결성이 높게 산출된 특징을 보였다. 이는 비록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간의 위계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소도시가 여가, 오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쇼핑통행에 대한 분석결과는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서울을 비롯한 광주 등의 특·광역시가 산출되는 것은 유사하였으나, 광역시 이외에 비교적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지방 중소도시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과 같이 상품의 이동을 통한 소비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쇼핑통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고차재화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육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로의 상품 이출이 높으며, 서울 및 경기로의 이출을 제외하면 자გი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이출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이 규모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규모의 측면에서는 앞서의 중심성 등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특정 지역에 형성되는 소매물품 판매 위주의 소비시장의 경우 대도시 중심의 고차재화의 시장형성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의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원을 활용한 오락·문화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으로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이 결국 생산과 소비의 체계를 국가 내에서 내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기 형성된 소비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자체적으로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타 지역으로부터 일련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시장은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한편 타 지역은 재화를 생산하여 소비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재화의 판매를 담당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물품의 경우) 충북, 광주, 울산 등은 소비재를 제조하여 이의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시장의 활성화 전략은 결국 소비-생산시장 간의 연계전략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CHAPTER 5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 99

2. 지역 소비시장 육성 전략 | 103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본 장에서는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서 크게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도시권에서 활용 가능한 소비시장의 위계화 및 권역화 전략과 생산기능이 미흡한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1.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1)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정책의 출발은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국가가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경제기조의 변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또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및 순이출의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변화하면서 성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부문은 더 이상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누출되는 부문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논의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몇 가지 함의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의 증대→소비활성화→경제성장의 수요를 중시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효수요 증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임금주도 성장과 유사하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과 다르게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 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빈곤층 등에게 추가적인 소득효과를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전반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협의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증대 등 개인의 소득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광의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국가 총 소득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임금증대 뿐 아니라, 임금을 받는 고용자의 수를 늘인다는 측면에서 고용증대의 접근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홍장표,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황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본집약적인 기술보다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총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가능케 한다.

표 5-1 | 임금주도, 소득주도 및 고용주도 성장의 특징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고용주도 성장
기본 방향	• 노동소득증대→노동분배율 개선	•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노동분배율 개선	• 고용률 증가
주요 정책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 • 자영업자 소득안정 • 근로빈곤층 생활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 일자리 창출 • 고용의 질 개선
수요	• 내수증가(소비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 수출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 수출증가
공급	•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산업 구조개선 효과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고	•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 제도가 발달된 국가	•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

자료: UNCTAD(2010), Onaran & Stockhammer(2012), 홍장표(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전히 국가경제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거대규모를 가진 서구의 국가와 달리 그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측면에서 전면적 내수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에는 일련의 한계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지역성장에 있어서 민간소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의 1인당 GRDP 수준과 순이출 기반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지역의 성장기반이 여전히 수출이라는 생산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부문에 대한 지역성장 기여율의 변화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내 지역의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간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이르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소비부문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전면적인 내수중심의 지역경제성장정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소비가 가지는 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2000년 이후 민간소비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 기여율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은, 소비주도형 성장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대외 여건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이는 수출주도 성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적 저성장기 및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에 따르는 추진전략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소득주도성장을 또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선결조건의 마련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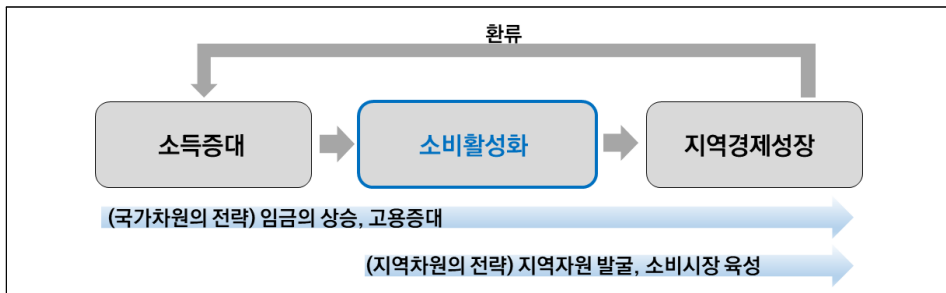
2) 지역의 역할과 전략방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이 소득증대→소비증대→경제성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때, 이의 정책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득을

증대시킬 것인가’라기 보다는 ‘어떻게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논의가 ‘소득증대’에 치우쳐져 있다는 측면은 지역단위에서의 정책논의를 보다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상에서의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소비시장은 소비자원의 이동 및 소비자의 이동으로 부터 형성되며, 이는 곧 지역차원의 ‘지역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즉,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근간에는 지역의 특징에 의해 차별화되는 소비시장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와 수도권 일부지역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 지역의 경우 소득→소비의 인과관계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체계를 지역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일부지역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적용되지 못하는 다수의 지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부차원의 소득향상의 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를 변화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질개선의 근본적인 시작은 지역 소비시장의 발굴 및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다.

그림 5-1 | 소득주도성장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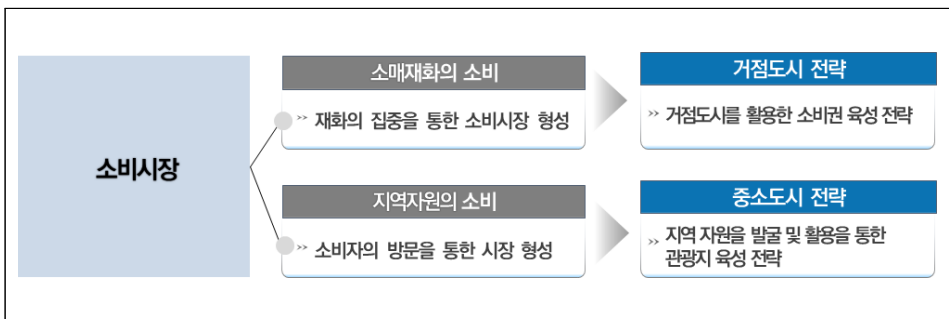
2. 지역 소비시장 육성 전략

1) 소비시장의 구분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비시장 활성화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소비시장 및 소비중심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도시 및 지역의 규모를 고려한 소비시장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특정 지역에 형성되는 소매물품 판매 위주의 소비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은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차재화의 시장형성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생산동력이 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고유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분석결과 재화의 집중으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갖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소비자가 직접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당지역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소비하는 관광 등의 형태는 다양한 거점지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소비시장의 육성 전략을 거점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2 | 소비시장의 구분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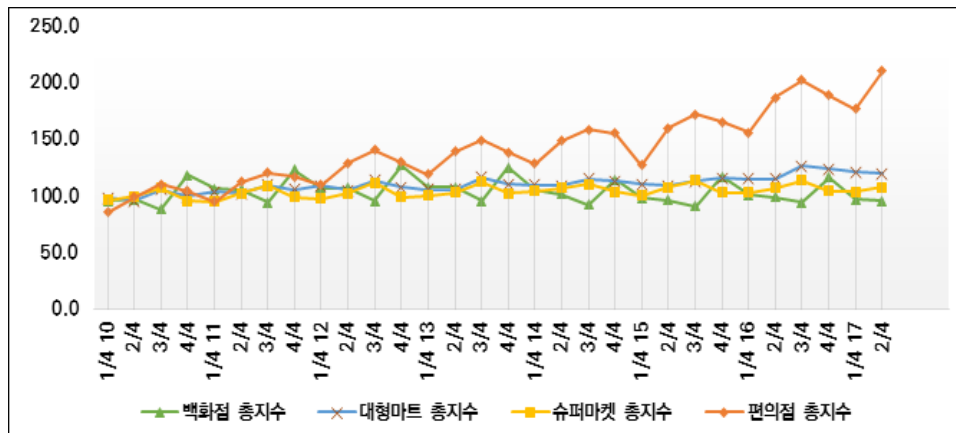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직접작성.

2) 거점도시 위주의 소비권 전략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도시 및 지역이 갖는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거점도시의 경우 고차재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권’(Consumption Region)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권의 전략은 소매물품의 분화와 이에 따르는 지역소비시장의 분화로 연계할 수 있겠다. 최근의 소매업태의 변화양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민이 소비하는 상당수의 재화는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소매점을 통해 소비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10년 이후 전국의 소매판매지수가 타 부문과 비교하여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매물품 중 필수재 등 저차재화의 구매는 원거리 이동을 통해 광역적으로 이루어 지기 보다는 거주지 인근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림 5-3 | 전국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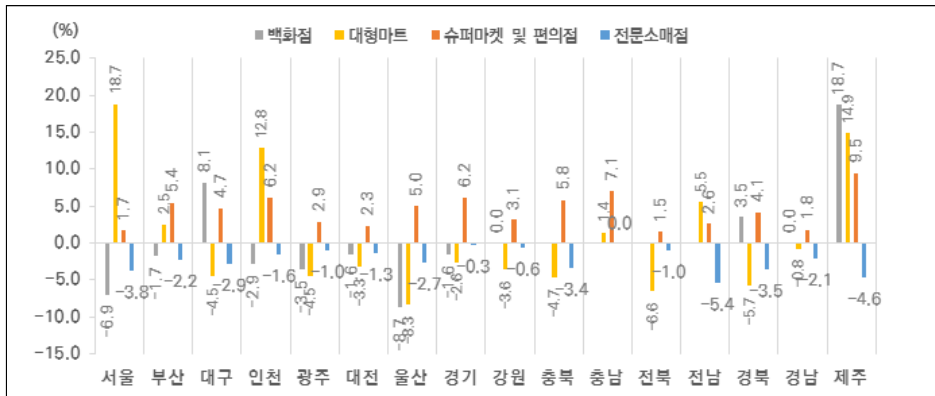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각 연도. 소매판매액지수

이러한 소매물품의 분화는 필연적으로 지역 소비시장의 분화와 결부된다. '16~17년 간의 시도별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지수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의 편의점의 소매판매액 지수가 뚜렷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등 특·광역시 위주로 한정되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 시도별 소매업체별 소매판매액지수 추이(단위 : %)



출처 : 통계청,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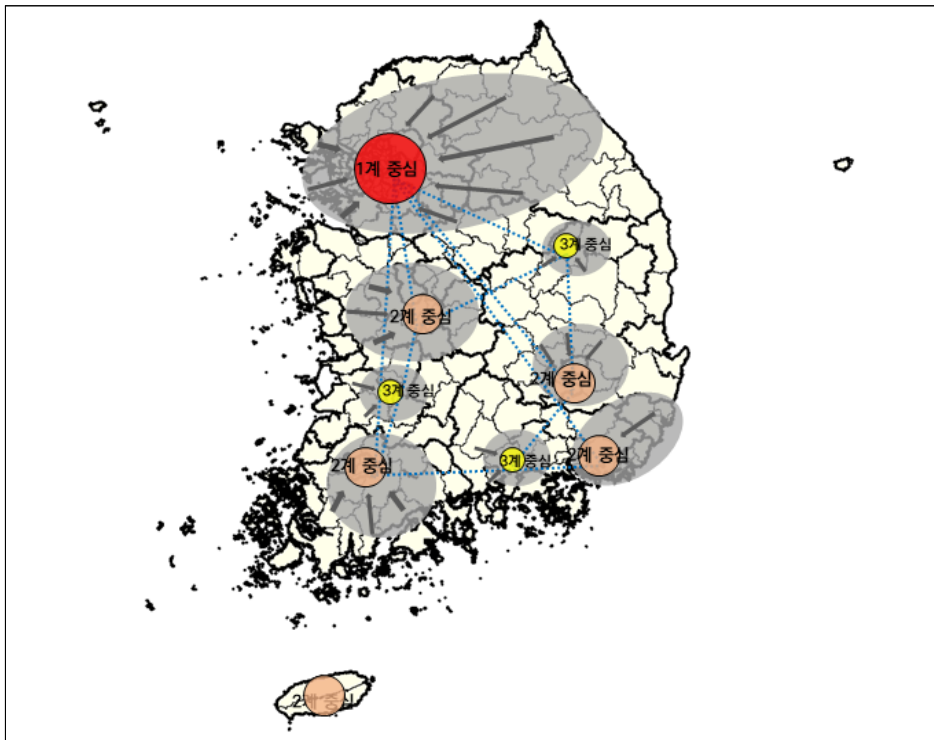
주 : 전년동분기비('17. 1사분기)

이러한 소매업체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심지 분석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의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내의 소비자 뿐 아니라, 주변도시의 풍부한 소비자가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구재와 같은 비교적 고차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중심상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패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서울의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차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소비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 및 도시를 소비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은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권역화(regionalization) 및 위계화(hierarchic)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에서의 고차소비시장 및 지역단위에서의 지역소비시장으로 위계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심지를 집중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후지(hinterland)를 연계하는 소비권 구성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간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비수도권의 패러다임과 경제권으로서의 대도시권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의 대도시권을 소비시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소비권으로서의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하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백화점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국내외의 쇼핑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및 전국 소비시장의 중심지로 육성될 필요가 있으며,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비교적 높은 지역소비 중심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비거점으로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공간상의 정책과 결부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5 | 위계화 및 권역화를 통한 소비권의 개념



출처 : 저자 직접작성.

3) 중소도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비활성화 전략

(1)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앞서 기본적인 규모를 갖는 대도시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의 중심지로서의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소규모의 지역들은 지역이 갖는 생산동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중심으로도 일정부분 괴리가 있음은 자명하다 할 수 있겠다.

그간 지역경제의 동력은 생산물의 투입을 기반으로 특정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한 부문이 지역 관광에 대한 부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통행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지적으로는 전남 순천, 전북 전주 등은 여가오락등의 통행에서 지역적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은 재화의 판매처로서의 소비시장의 측면보다는 여가 및 위락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및 방향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광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정주민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차미숙(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정주민구 1명이 감소함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숙박관광객 25명의 방문으로 인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관광부문과 관련한 오락·숙박, 여가·문화의 분야의 소비비중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궤를 같이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관광분야에 있어 특히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사도별 관광지 만족도 및 재방문의향 조사에 의하면 제주, 강원, 전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재방문의향에 있어서는 제주, 광주,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울 등 대도시 보다 타 지역에서의 관광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문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관광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접근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관광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하겠다.

표 5-2 | 관광부문 정부 정책과제 및 후속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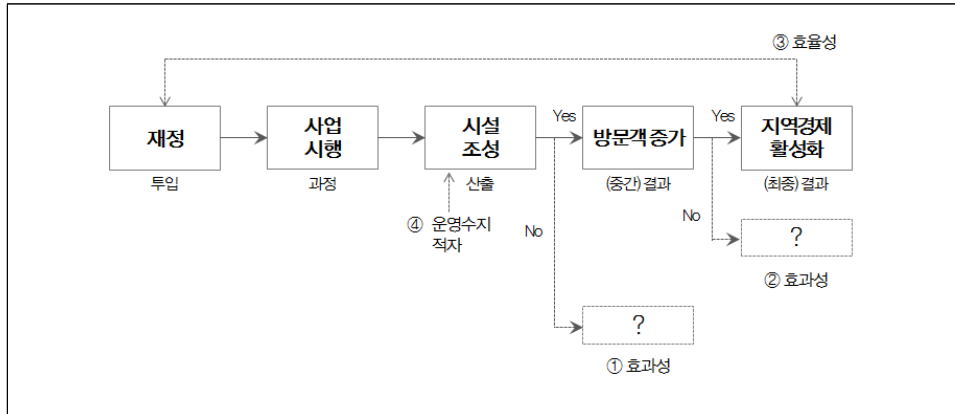
구분	내용
100대 국정과제	- 관광여가 사회실현(노동자 휴가 지원제 도입, 대체 공휴일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맞춤형 코스, 관광품질인증제 실시) - 관광산업 육성(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관광벤처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테마관광, 관광두레 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 국민관광신탁제도 등)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 100대 국정과제. 저자 재 작성

(2) 지역공동체의 활용

그 동안 상당수 지역관광을 육성하는 방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바 있다. 기존의 관광부문 정책은 관광시설의 설치가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반드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투입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투입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성한 시설의 관리운영이 부실하면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향후 관리운영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림 5-6 |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자료 : 김성진, 박주영(2013)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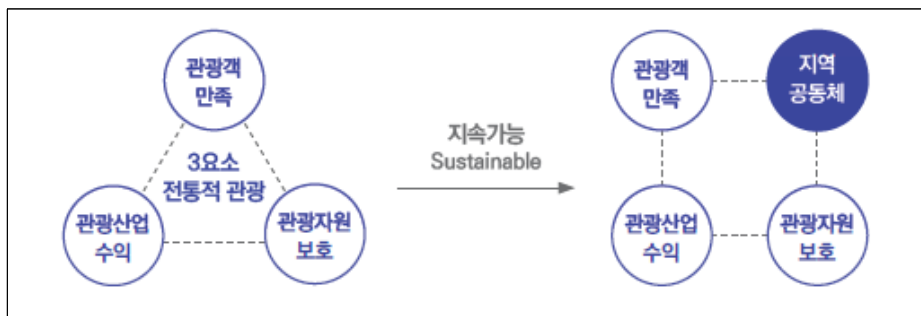
재정 투입의 상당수가 시설 조성에 쓰이면서 관광을 통한 편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지역주민 대다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관광을 통한 많은 편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역 내부로 순환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에는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공립박물관이나 체험관 등이 적자 운영 중이며 관람객이 하루 10명도 채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보도된바 있다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1995년 4월 스페인 란사로테(Lanza rote)에서 ‘지속가능 관광 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을 채택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원칙을 제시하였다.

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8767.html#csidxf6f0d323ca77bc3997eca90ac8a2347>

전통적인 관광의 관점에서, 관광의 3대 요소는 관광객(관광주체), 관광산업(관광매체), 관광자원(관광객체)으로 꼽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으로 인한 성과가 전 지역사회에 폭넓게 돌아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수 있다는 공감대 확대되었다. 즉,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관광이 관광부문의 지출을 지역으로 환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7 | 지속가능한 관광의 구성요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관광두레 사례집” p.8.

(3) 연계관광 시스템 구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동력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지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연계관광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내 대표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이웃의 지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기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간의 상생전략으로 평가 받는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과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의 관광 수익 증대가 유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개별지역의 주요한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하는 경우 기존의 관광목적지만을 위해 스쳐지나가는 관광 패턴을 바꿔, 관광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다채로운 관광자원의 연계는 체험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의 형태를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연계관광 시스템은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간 상생의 전략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계관광의 사례로서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을 소개할 수 있겠다.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은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 중의 하나로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연계관광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전라북도는 관광을 위한 모든 체계를 지역내에서 서로 연계하여 지역 및 사업체간의 시너지를 제고하였다는 컨셉으로 토탈관광을 기획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상품인 ‘관광패스라인’ (Torism Pass Line)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설을 교통 및 결제 기능으로 엮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오-오프라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내에 관광지 정보를 취득하여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숙박을 해결하며,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8 | 관광패스라인의 개념



자료 : 전라북도, 2015.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p. 10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 11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17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각각의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제언사항에 대해 요약·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기된 한계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소비에기반한 지역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지역소비에 대한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경제에서의 지출부문의 역할 및 소비주도형 성장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의 결과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기여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 부분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소비, 지역경제성장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소비지출이 경제성장 및 순이출을 유발하는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의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08년 이전에는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만이 유의했으나, 이후, 소득 및 고용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다음으로는 소비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의 활용 가능한 소비의

도출과 소비자 및 상품의 이동패턴 분석을 통해 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중심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의 분석결과 비교적 필수재로 구분되는 소매재화는 대도시 중심의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과 결부하여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오락·문화와 관련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부문의 활성화를 지역경제성장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거점대도시 소비시장 육성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비활성화 전략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서부터 출발하여, 소득주도 성장전략 및 소비주도 성장전략의 적용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의 과정에서 소비부문은 더 이상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누출되는 부문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면적 내수중심경제로의 전환 보다는 대외의 불안정성이 극대화 되는 경우 안정적인 보호기제로서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를 지역차원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증대 못지않게 지역소비 활성화 전략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지역적 맥락에서의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서의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대도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대도시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및 방향성 전환에 대한 부문이다. 그간 대都市는 경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기업 및 일자리가 집중되는 구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대도시의 다양한 소비자원과 소매점은 우수한 인력자원의 집중 등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이러한 소비환경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생산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성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서울이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기업체가 집중되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뿐 아니라, 백화점, 문화회관, 영화관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점 소비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본 장에서는 소비시장의 위계화 및 권역화를 제안하였다. 위계화를 위해서는 소비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대도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 고차시장 및 저차시장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권역화의 전략에서는 거점소비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재화를 공급받는 주변지역을 묶어 권역화함으로써 정책의 적용이 거점소비시장 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확산되어 공생발전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소규모 도시에서의 전략이다. 대도시에 비해 생산능력이나, 규모면에서 한계를 가지는 지역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간 집중하였던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요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관광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하여 관광소득이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고, 단일 지역의 대표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규모의 시·군간 상생협력의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정책추진은 소비주도형 지역경제 성장전략이 과거로부터 논의되어온 불균형 성장정책-균형 성장정책 모두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전반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공간적 범위가 주로 시·도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지역소비, 지역경제성장이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또한 광역적, 지역적 소비거점 육성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 단위의 분석이 주는 주요한 시사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의 소비가 미시적인 단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개인카드 자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소비품목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소비와 관련한 주요한 항목과 이슈를 고려할 때, 주거비, 의료·보건 등의 분야는 보다 깊은 분석과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소비부문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소비에 부담이 되는 이의 항목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소비는 타 분야의 소비에 부담을 가중시켜 다양한 소비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 김성진, 박주영, 2013.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 김의섭, 이종하, 황진영, 201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소비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GRI연구논총 14권 1호: 67-86.
- 김주일, 2007, 도시기능의 고도화도 판별방법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31-50.
- 김진일, 2013, 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칼레츠
키안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42: 119-137.
- 대한민국정부, 2017. “100대 국정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관광두레 사례집”
- 전라북도, 2015.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체제·교류인구 증대전략”. 국토
정책브리프
-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각 연도, 소매판매액지수
- 한국은행, 2013. 산업연관표
- 홍장표, 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
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제43호: 101-138.
- 현대경제연구원, 2015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 Berry, B. J. and Garrison, W. L., 1958, "The Functional Bases of the Central Place Hierarchy", *Economic Geography*. 34(2): 145-154.
- Bhaduri, A., & S. Marglin, 1990,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 375-93.
- Blecker, Robert A., and Arslan Razmi, 2007. "The Fallacy of Composition and Contractionary Devaluation: The Output Impact of Real Exchange Rate Shock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Export Manufactur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2(1): 83-109.
- Capello, R. 2007. "A forecasting territorial model of regional growth: The MASST model", *Annals of Regional Science*, 41(4): 753-787.
- Chimobi O. P., Uche U. C. 2010. "Export, domestic demand and economic growth in Nigeria: Granger causality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3(2):211-218,
- Glaeser, E. L., Kolko, J., and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7-50.
- Lai Y. W. 2004. The Role of Domestic Demand in the Economic Growth of Malaysia: A Cointegration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8(3): 337-352.
- Lavoie, M. and Stockhammer, E. 2012. Wage-led growth: Concepts, theories and policies, ILO.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1.
- Markusen, A. and Schrock, G. 2009. Consumption-driven urban development. *Urban Geography*, 30(4): 1-24.
- Markusen, A., Ebert, J., and Cameron, M., 2004. Raising Minnesota's minimum wage. *CURA Reporter*, Summer, 17-23.
- Onaran, O and E. Stockhammer 2012, "Wage-Led Growth: Theory, Evidence, Policy",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MASS, Working Paper Series No. 300.: 1-26.

-
- Onaran, Ö. and G. Galanis, 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 Palley, T. I. 2002. "Domestic Demand-Led Growth: A New Paradigm for Development," in Jacobs, Weaver and Baker (eds.),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Washington, DC. Also published as "A New Development Paradigm: Domestic Demand-Led Growth," Foreign Policy in Focus.
- Tsen, W. H. 2010. "Exports, Domestic Demand,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Granger Causality Analysi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4(3): 625-639.
- UNCTAD, 2010, "An Incomes Policy for Wage-Led Growth",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 Wah, L. Y. 2004. "The Role of Domestic Demand in the Economic Growth of Malaysia: a Co-integration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8(3): 337-352.
- 통계교육원, 통계교실 홈페이지 (http://sti.kostat.go.kr/site2/pop_learning/learning_003015.html) (2017. 2. 15. 접속)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8767.html#csidxf6f0d323ca77bc3997eca90ac8a2347>) (2017. 11. 15. 접속)

SUMMARY



Exploring Regional Consumption 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Nam Ki-Chan, Ha Soo-Jung, Hong Sa-Heum, Cho Sung-Cheol, Cho Jung-Hee

Keywords: Regional Consumption Structure, Economic Growth, Consumption-Led Growth

Recently, we can easily observe the negative impacts from low-growth trends such as decrease i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and job decline on local econom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narrow domestic market, Korea has adopted the strategy of export-led growth, which recognizes export to overseas markets as an essential part of economic growth. However, the recent global recession is likely to be a potential risk factor for the domestic economy, which is highly reliant on exports and imports. As a solution to this situation,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utilize the domestic revitalization as a driver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is context, the newly established government has defined the so-called Income-led Growth as the core growth paradigm of the new government and proposes policies to stimulate domestic demand. Unfortunately, the economic growth strategy that uses domestic demand in the tailgate has been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but the research that examined

it at the regional level is extremely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consumption and to discuss the role and direction of regional consumption as a new driver for revitalizing regional economy.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reg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ole of local consumption has been strengthened. Specifically, in the early 2000s, the so-called "growth-led" economic policy, in which economic growth led to consumption and net exports, was significant whereas, in the late 2000, consumption led to economic growth and net exports. Next, we tried to find out consumption center where consumption wa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n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consumption sending for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The results show that retail goods, which are comparatively essential items, can be proposed as the strategy of revitalizing the consumer market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he items related to entertainment and culture, which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demand, have the possibility of having a role as an activation strategy for local economi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to link the activation of the consumption sector with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irst, an understanding of the paradigm shift in regional economic growth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ontribution of the private consumption and net exports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chang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pattern of structural change has been appearing. This suggests that the consumer sector is no longer a leaking segment of local economic growth, but another opportunity to drive growth. However, Korea, which is still highly dependent on the export, has a limit in transition to a more domestic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pseudo domestic demand" centered economy where domestic economies based on consumption can drive the local economic growth.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fostering large-scale consumer market in metropolitan cities. Since it is impossible to cultivate all regions and cities as consumer markets, there is a need to regionalize and hierarchize the consumer market based on major consumer marke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separate the consumer market to the national high-level consumer market and the local consumer market, and linking them with their hinterlands where the service is provided.

Third, we need to implement a consumption activation strategy using local resources. Not only are small-scale regions lacking the production power of the region, but also there is a limit to the function of the consumption center. Previous driving force for local economy is mainly approached in terms of producing specific output based on inputs, but the regions with inherent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instead of weak production bases use them as the tools of the local economy to attract consumers. Economic growth using local tourism is a representative example.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raffic pattern analysis indicates Suncheon Jeonnam, Jeonju Jeonbuk, etc. have a connection centrality in the leisure - entertainment traffic.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le and direction as a tourist destination in these regions that can enjoy leisure and amusement activities rather than the consumer market of goods.

APPENDIX



부록_표 4-1 |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

[illegible]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서울															
인천																		인천															
경기																		경기															
대전																		대전															
충북																		충북															
충남																		충남															
광주																		광주															
전북																		전북															
전남																		전남															
대구																		대구															
경북																		경북															
부산																		부산															
울산																		울산															
경남																		경남															
강원																		강원															
제주																		제주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서울																		서울															
인천																		인천															
경기																		경기															
대전																		대전															
충북																		충북															
충남																		충남															
광주																		광주															
전북																		전북															
전남				</																													

부록_표 4-4 |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계속)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기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제조업제품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및 임가공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력·가스 및 증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수도배기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및 재활용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도시매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운송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및 숙박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금융 및 보험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부록_표 4-4 | 유출지 기준 민간소비 비중표(계속)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부동산 및 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연구진 남기찬 외

발행인 남기찬 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17년 12월 28일

발행 2017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7,000원

ISBN 979-11-5898-267-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1503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서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소비, 소득과 지역경제성장

제3장 지역 소비구조 분석

제4장 소비 중심지 분석

제5장 지역소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